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 서술 분석

책임연구원

김 종 훈(서울 문창중학교)

공동연구자

김 미 정(경기 일산 주엽고등학교)

김 용 석(서울 면목고등학교)

김 진 숙(경기 안양 대안여자중학교)

문 지 은(경기 광명 충현고등학교)

방 지 원(서울 대영고등학교)

양 두 영(경기 광명북고등학교)

이 은 정(서울 면목중학교)

조 동 근(서울사대부설고등학교)

조 한 경(경기 부천 중흥중학교)

이 보고서는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수행한 2003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응역 결과물입니다.

목 차

1. 연구의 범위, 의의 및 제한점	1
II.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시기별 개관	
1. 민주화 운동의 성격	6
1) 서구의 민주화	6
2) 한국 민주화 과정의 고난	10
3) 한국의 민주화의 전개와 의의	13
2. 시기별 개관	
1) 이승만 정권 시기	16
2) 박정희 정권 시기	23
3) 전두환 정권 시기	34
III. 민주화 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 분석	
1. 분석 대상 교과서	40
2. 시기별 분석	
1) 이승만 정권 시기	46
2) 박정희 정권 시기	88
3) 전두환 정권 시기	130

IV. 연구 결과 정리 및 제언

1. 연구 결과 정리 166

2. 제언 174

※ 참고 문헌 179

※ 부 록

1.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단원 원문(7차 교육과정) 183

1)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 중 학교 『국사』 교과서

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 연구계획서 301

3. 중간보고서 공청회(2003. 10. 29) 토론문 309

1. 연구의 범위, 의의 및 제한점

이 연구는 민주화 운동 관련 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한 것이다.¹⁾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일은 공교육의 중대한 사명이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소양과 신념에 귀결된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보통선거권의 의미,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의무, 삼권분립 등은 민주주의의 틀을 이해하는 기초 개념이다. 그러나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까지 살펴볼 때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은 의도적 누락, 왜곡, 진실의 호도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체제, 관변의 해석틀로 역사 서술을 제한시켜 놓은 국정 국사 교과서 제도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의 민주화에 힘입어 독재정권을 미화해왔던 국사 교과서의 서술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서술 분량이 소략하고 보수 세력의 견제도 심하여 민주화 운동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국정 국사 교과서 제도로 인해 교과서 서술 내용이 암묵적으로 국가 공인 공식 역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역사 서술이 교육적 맥락을 간과한 채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맥락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한국 근·현대사가 검정 제도에 따라 발행되면서 교과서 서술에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 7차 국사 교과서 특히 근·현

1) 본 연구는 전국역사교사모임 산하 「초·중·고등학교 근·현대사 수업 연구 모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주에 따라 2003

대사 교과서는 사회의 민주화 진전으로 민주화 관련 서술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으며 서술 분량이 증대되고 서술 내용도 다양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쓰여졌다. 또한 검정이 아닌 검정 제도에 따라 교과서가 발행됨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변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교과서에 다양한 역사 해석과 서술을 담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따라서 제대로 된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7차 교육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7차 근·현대사 교과서는 올해부터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얼핏 보아도 그 이전까지의 교과서와 크게 다르며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식과 성과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실은 제대로 기술하고 있을까?,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라는 교육적 의미를 갖추고 있을까? 등등. 이제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국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조망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살펴보는 교과서 분석 연구가 전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중등 국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이 현재의 민주화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중·고등학생에 적절하게 내용이 선정되고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11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시기별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는 데 지면을 할애하였다. 먼저 민주화 운동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한 이유는 민주주의나 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개념이나 이해의 범위가 달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진전 과정의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 민주화 진행의 특수성, 그 성격과 과제를 천착함으로써 한국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을 수립하여 교과서 분석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화 과정의 시기별 개관은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내용 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때문에 시기별 개관이 단지 사실의 개관에 그치지 않도록, 각 시기별 민주화 운동 서술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각각의 사실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서술했다.

III장에서는 분석 교과서의 특징을 정리하고 해방 이후 시기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분석하였다. 시기를 셋으로 나눈 것은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반적인 구성 체계를 따른 것이다. 본 연구팀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각 시기별 분석에 앞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틀로서, 교과서마다 민주화 관련 서술을 얼마나 담고 있나 어떤 사실들이 담겨 있나 등을 도표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계량적 분석 방식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그러나 내부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시기별로 분석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분석 내용을 재구성하여 본문을 인용해가며 분석하는 총론적 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에서 아직은 낱개 사실 서술의 정합성 여부 판단보다는 민주화 운동 서술의 전체적인 맥락, 서술 관점, 교육적 맥락에 대한 정합성 여부의 판단이 더 중요하며, 지금까지 이런 맥락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교육과정별로 발행된 중·고등학교 「극사」 교과서이다. 그 중에서도 7차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의 중심 텍스트로 삼았다. 주지하다시피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전의 「극사」 교과서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소략하게 다루고 있거나 왜곡시킨 부분이 많다. 그간 이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비평적인 수준을 넘어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에 비해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서야 비로소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이 그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미있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행된 「국사」 교과서와 7차 근·현대사 교과서를 함께 검토하되 7차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의 중심 텍스트로 하였다.

분석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6월 항쟁까지로 한정하였다. 민주화 운동의 범위와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폭넓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전 역사 과정을 민주화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그 역사는 상당히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이며 그 출발점을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인 보통선거제와 대의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출발점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를 분석의 기점으로 삼았다. 다만, 해방 이후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온갖 갈등이 표출되었던 해방 3년의 역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요소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해방 3년의 역사는 아직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하며, 민주화 운동의 내용과 범위 규정 뿐만 아니라 그 평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추후 과제로 남겼다.

분석 시기의 하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반민주적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은 분수령이 6월 항쟁이다. 6월 항쟁 이전까지의 민주화 운동은 이미 '독재 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식들을 갖추고 있어 분석들이나 내용 선정에 있어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는 현재와 밀접한 시기의 역사일뿐더러 현재 상황에서 분석 주제와 틀을 명확히 하기 힘들다. 더구나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의 서술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사실 나열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도 추후에 밀도 있는 연구를 기대하면서 분석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작업인 만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교육적 맥락을 고민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현장 역사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수업 실천 자료로 기획된 것은 아니다. 실제 역사 수업에서 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수업 방법이나 자료 활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르치고자 하는 시대나 주제를 어떻게 의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형상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의 실시와 함께 제대로 된 현대사 교육,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무엇보다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능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무척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가 보다 나은 교과서 서술 및 중등학교 민주화 운동 교육의 기초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11.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시기별 개관

11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이와 같은 검토는 III장의 교과서 서술 분석에서 요구되는 민주화 운동의 분석 항목과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1. 민주화 운동의 성격

1) 서구의 민주화

민주화 운동이란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이 전개하는 목적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민주화된 사회라고 이야기 할 때 필요한 제도적 요건으로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의 보장, 대의민주정치·간접민주정치와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있는 그대로 담보하는 의회의 존재와 이를 위한 선거의 공정성,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의회의 기능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언론·결사·집회·출판의 자유 확보, 사상의 자유와 인신의 자유를 위협받지 않는 인권의 존중,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독립 등』

그런데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요건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민주화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나 민주화에 대한 고찰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진전 과정과 시기별 성격을 추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구의 민주주의의 변천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흔히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서 찾는다.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왕권 통치나 귀족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아테네에서는 동등한 참정권을 갖는 시민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정치가 운영되

었다. 아테네의 시민 남성은 정부의 주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법안을 심의 및 채택하였고 전쟁 선포권·예산 편성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추첨으로 선발된 배심원이 재판을 맡도록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근대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스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주의와 제한된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폴리스라는 정치 단위의 소규모성, 신분제의 존재, 성적 차별은 그리스 민주정치의 시대적 한계로 인식된다. 특히 참여의 제한은 그리스 민주정치의 분명한 한계로 현대 민주주의와 구별짓는 요소이다. 하지만 그 한계를 논외로 칠 때 민주 정치 제도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대 민주주의보다 더 철저했다는 주장도 있다.²⁾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을 보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평민의 권리 신장을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페르시아 전쟁의 중요한 승부처가 되었던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아테네 하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항전으로 가능하였다. 페르시아의 정복 위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하는데 커다란 기여한 평민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치 권리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달로 귀결되었다.

그리스에서 꽃피었던 서구의 고대 민주주의는 중세 봉건 시기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중세 봉건사회의 주된 특징은 신분제이다. 신분제에서 정치는 왕과 소수의 귀족 그리고 성직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이었다.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중세 말에 상공업의 발전과 함께 부르조아지로 일궈어지는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봉건 사회의 틀에 균열이 생겼다. 부르조아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질서를 원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2) 에드워드 맥널 번즈, 『양문명의 역사 I』, 140-144

봉건체제에서 정치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했던 피지배 계층과 연합하였다. 봉건 지배층과의 충돌은 매우 격렬했다. 이러한 충돌의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혁명이다. '집이 곧 국가'라는 절대주의 왕정과 천부인권설을 수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려 했던 시민 계급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적었다. 결국 왕의 목은 군중 앞에서 잘려나갔다.

시민혁명에서 민중들은 혁명의 기본 동력이었으나 정치사회의 주도권은 부르조아지 계급에게 돌아갔다. 부르조아지가 새롭게 구축한 사회질서인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개의 핵심적인 제도인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참정권은 일반 민중의 선거권 배제, 선거구의 제한 등으로 사회의 상층 계급에게 한정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인신보호,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형성하는 인간기본권을 확립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³⁾

자유주의 체제의 전개와 함께 자본주의도 확대되었다. 더불어 자본주의의 모순도 심화되었다. 수적으로 증가된 노동자는 부르조아지 사회에서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권리의 확대, 즉 부르조아지가 독점하고 있는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부르조아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였으며, 노동자들이 보통선거권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대의제민주주의가 확립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으면서 자란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화 과정은 사회세력간의 치열한 갈등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최장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광범위한 정치참여에 의한 공적 결정과 그 결정을 집행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체도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민중의 권력으로 표현되고 사회의 영역에서 민중의 물질적, 문화적, 정신적 삶의 질적 고양을 담보되는 정치적 체제를 말한다. 그러므

3) 최장집, 1993, 『
』, 199

로 민주주의는 이미 그 정의에서 민중의 권력에 대하여 기득 이익을 수호하려는 사회세력과 민중간의 일정한 갈등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관한 정의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제에 있어서 민주화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나 투쟁이 아닐 수 없다.⁴⁾

민주화란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특정의 정의 없이 설명되기 어렵고, 결국 여러 민주주의 가운데 어떤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현실에 있어서 민주화란 사회세력간의 기존의 권력 관계를 크든 작든 변화시키는 과정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적 지배 체제로서 국가의 성격과 구조, 국가와 시민 사회가 매개되는 양태, 그리고 경제적 생산의 사회적 조직과 문화, 윤리의 체제로서의 시민사회의 성격이라는 문제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⁵⁾

이상의 정리를 통해서 민주화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민중이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역사 속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배 계급과 민중의 치열한 투쟁으로 나타난다. 서구에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신념은 오랜 고난의 산물이다.

그러나 동등한 선거권의 확립, 대의제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민중의 궁극적 바람이 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다. 민중적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단계에서 내용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었다.

4) 최장집, 1993, 『
5) 최장집, 1993, 『

2) 한국 민주화 과정의 고난

민주화란 민중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확대하면서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부르조아지의 억압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폭력적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성장과 민중에 대한 억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도권을 쥔 부르조아지는 자본 축적에 장애가 되는 민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봉쇄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화를 지연시켰다.

자본이 민주화를 억압하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950년대 매판자본이나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기에 따라 성장한 독점자본은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 유착하였으며 지배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어 비민주적인 정권을 지원하였다. 1980년대 시위 학생에 대해 “데모로 나라가 혼란하면 수출이 안된다”며 비난했던 것은 현실 생활에서 자본의 논리가 민주화를 억압하는 한 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은 장애 요소는 자본의 억압만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서구 민주화 과정이 겪지 않은 커다란 장애를 이겨내야 했다. 식민지 지배의 암울한 유산, 해방 이후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형성, 그리고 한민족의 자주적 의사 결정을 가로막는 외세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부정적 요소를 좀더 살펴보자.

첫째, 식민지 경험은 민주화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 식민지 시기는 우리 사회에서 근대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정치에서도 근대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참여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참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없었다. 특히 일제 말 파시즘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자유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권리 의식은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의 가혹한 식민 지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가족 중심의 생존 전략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을 낳았다. 해방 이후 민주화를 위해 사회 성원의 참여의식이 절실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내재화되어버린 가족 이기주의 성향으로 민주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봉건성을 우리 손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격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르조아지나 민중들은 왕이 아닌 시민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인식하고 그것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해 그러한 기회를 애초에 봉쇄 당했다.

둘째, 전후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에 기반한 반공주의는 독재정권에 의해 민주화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해방 후 반공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친일파 및 우파의 이해가 결합하여 분단정부가 수립되었다. 공산세력을 탄압하는 데 반공을 이용하였던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에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무리한 장기집권 시도로 위기에 몰렸을 때 반공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정치적 반대세력이었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며, 4·19 혁명 때 시위 군중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그 예이다. 박정희 정권 역시 반공주의를 독재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박정희는 1960년대에는 정권의 정당화 수단으로 경제성장을 앞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유신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안보를 내세우면서 반공주의를 전면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민주화 운동을 간첩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 많은 공안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두환 정권 역시 미국의 대한 정책 수혜자였으며 통치 권력의 정통성 부재를 은폐하는데 반공주의를 동원하였다.

정권의 지배 도구로 이용된 반공주의를 지탱해주는 구조적 배경은 냉전과 독재였다. 1980년대 후반 이러한 구조가 변화하였으나 국가보안법의 존재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반공주의는 아직까지도 민주화의 일정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외세의 간섭이다. 특히 남한 지역에서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미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민주주의 제도를 전해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도움을 준 나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민주화의 미국은 고비마다 독재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 4·19 혁명을 짓밟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정한 것,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려는 신군부의 병력 동원을 승인하고, 전두환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5공 체제를 공고하게 해 준 것들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앞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재정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이율배반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잘 확인된다.

국보위 발족하던 날 카터의 CNN인터뷰 "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민주화되기를 바란다. ... 그러나 우리는 우방과 친구,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정권이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복시킬 수도 없다."⁶⁾

80년 8월 8일 위컴 LA타임스와 인터뷰 "만약 전두환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해 국민적 지지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은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정치 자유화보다는 국가안보와 내부안정이 우선이다. 나는 한국인

6) 강준만, 2002, 『

』 인물과 사상사

들이 내가 아는 바대로의 민주주의를 실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⁷⁾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나 발언 이외에도 미국의 대외전략은 남한의 민주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냉전 시기 미국의 대소방위전략이나 탈냉전 시기 북한과의 갈등은 남한 내 수구냉전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수구냉전세력은 민주화를 억압했던 반공을 중시하며 이는 민주화의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 한국의 민주화의 전개와 의의

민주주의 실현의 최소 요건은 보통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이다. 서구에서 이 두 제도는 정치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오랜 투쟁 과정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별 갈등을 겪지 않고 이 두 제도를 정치 운영의 원리로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오랜 독재체제로 인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서구의 민주화가 투쟁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우리 나라는 외부에서 도입된 민주주의 제도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특히 식민지 경험, 분단체제, 외세의 간섭 등으로 민주화 장점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봉건성, 식민성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해방 이후 처음 수립된 이승만 정부에 맡겨졌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폭력을 동원하여 대의기구를 억압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자행했으며, 국가기구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던 탓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치질서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5.16 쿠데타로 짓밟힌다. 하지만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

7) 강준만, 2002, 『

』 인물과 사상사

해 권력을 잡기 어렵게 되었을 정도로 민주적 신념과 소양이 우리 국민 사이에 널리 퍼졌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쿠데타 세력은 경제 성장을 앞세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 불법으로 집권하였으며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정국을 운영하던 박정희 정권을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도 나타났다. 민주화는 그 주체로 의식화된 민중을 필요로 한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은 개발독재의 정당화에 이용되었으나 동시에 민주주의의 제도 정착과 민주적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갈 주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철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았을 때 정치 의식이 성숙된 학생과 시민들이 앞서서 독재에 저항하였다. 이 시기에 민주화 투쟁은 철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 즉 구체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독재자를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민주화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여 철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 기대는 전두환의 쿠데타로 또 다시 짓밟힌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철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발전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두환이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나 더 잔혹하고 더 치밀하게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은 6월 항쟁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6월 항쟁의 승리로 이제 우리 정치에서도 철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민주화가 사회의 대세를 이루었다.

6월 항쟁으로 이룩한 이와 같은 우리의 민주화의 성취는 식민지 경험, 냉전과 분단체제, 강대국의 간섭 등 민주화를 진전을 가로막는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먼저 민주화의 성취를 통해 정치적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얻었다. 또한 민주화의 성취에 기여한 민중의 힘은 역사 발전의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으며 이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

와 개혁이 민중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역사적 책임 의식을 안겨 주었다. 역대 독재 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분단을 고착·심화시켰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화는 우리 의식 속에 놓여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궁극에는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6월 항쟁을 통하여 철저적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달성한 것은 민주화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6월 항쟁의 승리는 민중의 저항과 민중 지향적인 운동 세력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철저적 민주주의의 확립에서 나아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6월 항쟁으로 절차상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과제로 남아있다.

2. 시기별 개관

1) 이승만 정권 시기

▶ 이승만 정권의 성립

8·15 해방 이후 국가 수립 운동은 민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던 좌익과 중도 세력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일체의 패망이 우리의 즉각적인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임은 이미 카이로 회담의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라는 단서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양국은 상대국의 세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38도선을 획정하고 분할 점령할 것을 합의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국가 수립 운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건준의 조선인 민공화국,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군정청의 조치는 자주적인 국가 수립 운동을 위축시켰다. 반면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세를 관망하던 우익에게는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송진우 등은 한국민주당을 조직하고 미군정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 나갔다. 이 무렵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현실적인 정치 기반이 부재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망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였던 한민당과 자연스럽게 결합하였다.

국가 수립 운동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이었다. 여기에서 미·영·중·소는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모스크바회의 결정 사항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 세력은 급속하게 좌우로 개편되어 모스크바 결정 지지 운동과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와중에서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위는 결렬되고 말았다. 미·소 공위가 결렬되면서 남북한을 아우른 국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였고, 국제 사회의 반대를 무마하면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소련과 북한의 동의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련의 반대

로 남북한 총선거가 좌절되자 유엔은 다시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였는데, 여기에 입정 계열과 좌익이 불참하면서 이승만과 한민당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정부 구성에서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놓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벌였다. 결국은 이승만의 의지가 관철되었으며, 한민당은 건국 내각 구성에서 소외된 채 야당의 길로 들어섰다.

▶ 이승만 정권의 기반

이승만은 협소한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국가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여기에서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것은 경찰이었다. 해방 직후 경찰은 미군정청의 비호를 받으며 식민지 시대 경찰의 인적 구성을 대부분 계승하였다. 1960년까지 일본 경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경찰에서 고위 간부의 70%, 검찰관의 40%, 부관의 15%를 차지하였고 약 33,000명의 경찰관 가운데 20%의 사복 형사, 10%의 정복 경찰이 일제 경찰에 봉사하던 자였다. 이러한 경찰 조직의 내적 특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 세력은 이승만과 한민당이었다. 이들은 반이승만 세력을 정치 권력에서 제거하고 단정 세력이 초기 국가 형성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직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다. 1952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선민족청년단체의 이범석을 떨어뜨리고 함태영을 당선시키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킨 것 모두 경찰 조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방 이후 남한 국방경비대로 시작한 군부는 1945년 8월 15일 국방군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군부 역시 경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항일무장투쟁의 연장선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군 창설 당시의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좌파 청년들이 군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남로당의 지도로 공산 세포를 구축하기 위해서 혹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 군을 선택하였다. 정부 수립 직후의 시점에서 좌파는 상당 수 군에 집결해 있었으며, 여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순 사태 직후 이승만은 4,749명의 장교와 사병을 총살·징역·파면으

로 제거하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였으며, 교묘하게 파벌을 조장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함으로써 군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해 나갔다.

한편 군부는 미국의 깊은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과는 구분되었다.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액수의 군사 원조를 쏟아 부었으며, 그 결과 1946년에 약 6,500명 수준이었던 군부는 한국 전쟁 직전에 113,000명으로 확충되었으며, 종전 후에는 약 60여만 명으로 강화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군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미국의 작전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국이 한국 정치를 규정할 수 있는 기체가 되었다. 실제로 4·19 혁명 당시 군의 중립은 미국의 의지였었다.

이승만은 경찰, 군부 외에 청년·학생들도 국가의 동원 체제로 조직화하였다. 이승만은 귀국 직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했는데, 그 핵심 구성단체인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전국학생연맹 등의 반공 단체는 모두 준(準)군사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 중반에 미군정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은 7만 명의 회원을 가진 반공 조직으로서 좌익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승만 정권이 경찰 보조기관으로 조직한 민보단은 1949년경에는 4만명에 이를 정도였다. 또 1948년 모든 반공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설립된 대한청년단은 9개의 서울구지부, 10개의 도지부, 17개의 지방·특별지부, 180개의 시지부, 4,230개의 읍·군을 가진 전국적 조직으로서 총 200만 명의 단원을 가진 대규모 준군사·준경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경찰과 군부의 외곽에서 좌익 세력을 색출하고, 각종 선거나 국민 투표에서 국민을 협박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경찰, 군부, 청년 단체들을 통하여 억압적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미국은 남한이 철저한 반공 국가로서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전진 기지로 남아 있기를 기대했고, 해방 정국 당시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 세력은 이승만과 한민당이였다. 즉 미국은 한반도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식하였으

며, 이승만과 한민당은 이를 매개로 미국과 긴밀하게 결합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1949년 국회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1949년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으며,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국제 공산당 사건, 인도 뉴델리 밀회 사건, 진보당 사건 등과 같은 공안 사건을 조작하여 도전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전 사회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전쟁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 혐오감 등이 내면화된 민중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흡수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모든 정당성의 기준이 되면서 식민지 시대의 경력은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친일 세력이 중심이었던 한민당-민주당도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지배 블록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4.19 혁명으로 수립된 민주당 정부가 학생·시민들이 추진하였던 통일 운동,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이승만 정권은 단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중들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출범 초기부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단선·단정 수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 항쟁이 일어났으며,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여순 사태, 대구 폭동 등이 발생하여 이승만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 김구가 제기한 남북 협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과 같은 건국 의제에서도 민족 민주 세력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렸다. 1949년 봄부터 이승만 정권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였다. 그 첨병 역할은 당연히 경찰, 군부, 청년 단체와 같은 억압 기구가 담당하였다. 반민특위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조치로 개혁 세력은 급격히 몰락하였으며, 건국 의제를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소멸되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은 좌익·용공으로 매도되어 추방되었으며, 평화 통일론·민중주의적 개혁 노선도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남은 것은 이승만의 자유주의적 개혁 노선과 부진 통일론 뿐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상대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1950년 5월에 실시된 2대 국

회의원 선거는 반여당·반이승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는 단정 정치 연합에 대한 거부였으며,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중도파·남북 협상파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 무렵 터진 한국 전쟁은 이승만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이승만은 대통령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초당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포기하고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관제 데모를 조종하고, 경찰과 군대로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이용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반공 독재 체제를 선택하였으며,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 조직과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이승만의 독재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적수 2/3를 확보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개헌안을 사사 오입을 통해 변칙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치러진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고령의 이승만이 유고되었을 경우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에게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특히 유효 투표의 30% 가량을 득표한 조봉암 후보의 선전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면서 무력 통일을 극시로 하는 체제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졸속 처형하는 한편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지녔던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독재 권력을 거침없이 휘둘렀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4-19 혁명

1950년대 후반 경제적 위기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승만 정권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냉전 체제를 유지시키고, 대상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기 위한 대외 정책의 일환이었다. 1945~1961년까지 약 30억 달러에 달한 미국의 경제 원조는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재 부문에 치중되어 생산재 부문의 건설은 낙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과 결탁한 일부 재벌들은 특별 융자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받아 국민 경제를 독점하였다. 1958년 무렵부터 미국은 경제 원조를 대폭 삭감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공급이 감소하면서 생산 시설의 과잉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른바 3백(白)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 자본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독점 자본의 불황은 결국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심각한 빈곤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1960년 당시 전국 85개 대학의 101,041명의 학생들 중 대부분이 졸업 후에도 취업할 길이 없었는데, 이러한 고등 실업자는 사회의 잠재적인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대대적인 관권·금권·불법 선거를 자행하여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1956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보았던 민중들은 1960년 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그 기대는 헛된 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중들의 분노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로 이어졌다. 이미 2월 28일에는 대구에서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와 정치 도구화를 배격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서울·대전·부산 등지에서도 연이어 시위가 일어났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마산 의거).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저지하는 한편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색깔 공세를 퍼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시위는 4월 11일 김주열의 처참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다시 폭발하였다. 시위는 서울로 확산되어 4월 18일에는 고대생들이 마산 사건 책임자 처벌, 선거 무효 등을 외쳤다. 이승만 정권은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평화적인 시위에 테러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되어 4월 19일에는 본격적으로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은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와 이기붕의 공직 사퇴와 같은 민심 수습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초미의 관심사

는 미국의 선택이었다. 이미 이승만과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수립 문제-한일 수교 문제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미국은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미국은 4·19 혁명 초기에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였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권 교체 이상의 변혁을 막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의 입장이 분명해지자 4월 26일에는 교수단체까지 시위에 가담하였으며, 결국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해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혁명 과업은 구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분단과 전쟁에 의해 파괴된 민족 민주 운동의 흐름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허정 과도 정부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워 현상 유지에 만족하였으며, 혁명 과업은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얻게 된 권력을 수습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으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낸 시민들은 일단 허정 과도 정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에 동조하였다. 혁명 과업을 완수할 이념이나 지도 세력이 없는 가운데 시민, 학생들은 7·29 총선에 큰 기대를 걸었다. 즉 민주 인사를 국회 의원으로 당선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정치·사회 변혁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는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는 부정 선거였고, 결과도 혁신 세력의 참패와 보수 민주당 세력의 압승으로 판가름났다. 제도 정치의 환상이 깨진 후 진보적인 학생들과 혁신 세력은 운동의 방향을 분단 극복으로 수정하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연맹 등을 결성하였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립 경제의 달성과 정치적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통일 운동은 4·19 혁명 1주년을 지나면서 본격화하여 1961년 5월에는 남북 학생들이 판문점에서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대규모 통일촉진 쉼기대회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통일 운동은 이승만 정권이래 성역이었던 반공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이후 민족 민주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자 미국과 군부 세력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이를 저지하고 말았다.

2) 박정희 정권 시기

▶ 5.16 군사 쿠데타와 준정

해방 이후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여 유지되던 이승만 독재정권이 4월 혁명으로 무너지고 얻어진 민주화의 가능성은 5.16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다.

장면 내각 당시의 사회혼란 양상들은 민주당 정권의 정치력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혁명적 변화로 갑작스럽게 집권하게 된 정권이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권이 획기적이고 빠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또한 4월 혁명 이후 정치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치행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0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당내 신·구파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되었고 간접적으로나마 군사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는데 일조했다. 5.16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틈새를 이용한 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였다.

4월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제2 공화국을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은 군부의 정권 탈취의 불법성-정통성 부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민정 이양을 내세웠다. 또한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5.16을 4월 혁명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5.16혁명은 4.19의거의 연장이며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멸공과 민주 수호로써 국가를 재생하기 위한 긴급한 비상조치였던 것입니다. 도의와 경제의 재건은 바로 여러분들이 4월 의거 때 품었던 염원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계승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4.19기념식에서의 기념사,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1:준정편(1973)』

박정권이 민정 이양을 약속했던 이면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승인이란 문제가 걸려 있었다. 군사 쿠데타 후 미국은 박정희의 좌익 전력으로 인해

쿠데타 정부의 성향을 의심하였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 정권을 승인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쿠데타 세력은 민정 이양을 약속하는 것이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전권을 장악한 박 정권은 민정 이양을 약속했던 1963년 3월 '군정 4년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군정 비판 세력뿐 아니라 미국까지 크게 반발하였고 결국 미국이 차관 공여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군정 연장안이 보류된다. 이는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면 군정이 계속되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쿠데타의 주역들은 공화당을 결성하는 동시에 제5대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를 내세움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정권의 탈취에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3·4 공화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안보 이데올로기와 경제개발을 내세웠고 특히 유신 이후의 제4 공화국에서는 체제논쟁과 개헌논의를 봉쇄하고 유신의 당위성을 선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정당이다.

1963년 말 반강제적으로 민정 이양을 결정한 박 정권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했다. 첫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구 정치인들을 '정치정화법'으로 묶어놓고 자신들은 비밀리에 공화당을 창당할 준비를 했다. 둘째 군정 세력들은 공화당 창당 및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새나라 자동차 사건, 위커힐 사건, 슬롯머신 사건'을 저질렀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악(新惡)이 구악(舊惡)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돌았다. 셋째 관료기수와 경찰, 군을 장악하여 야당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령했다. 중앙정보부는 공화당 창당 및 4대 의혹사건을 주도하는 등 불법, 탈법적인 활동을 일삼았다. 이후 안전기획부로 이어지는 정보 보안기관의 초법적인 권력남용이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다.

이 무렵 박 정권은 정권을 합리화하고 민주주의로 포장할 의도에서 이른바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나는 혁명시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란 서양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 형편에 알맞은 민주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민주주의란 다름 아닌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 1962>

이는 박정희가 지향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적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통치’를 유보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야당의 민주주의를 ‘허수아비 민주주의’, ‘찻대기 민주주의’, ‘가식적인 민주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민족 주체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들은 제5대 대통령 선거를 ‘박정희=군사혁명 세력=민족적 민주주의=민족주의 세력’ 대 ‘구정치인=야당=서구 민주주의=사대주의 세력’의 구도로 몰고 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래지 않아 박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서 정략적 허구임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한일회담반대투쟁’의 정권 비판 및 퇴진운동의 바탕 논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박 정권이 자신들의 존재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역으로 그 존재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정책, 한일회담반대투쟁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성립한 제3 공화국에서는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 등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권유지를 위한 외자 의존적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비준되었다. 베트남 파병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남북간 군사대결 및 체제경쟁이 노골화된 시기이다.

1960년대 전반기의 박 정권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협조와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조국 근대화 작업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민족적 성향을 자신들의 존재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박 정권은,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한일국교정상화회담 과정에서 반민족적이

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도입의 필요 등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한일 회담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박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박 정권=민족적 민주주의=친일파=반민족이라는 반발에 부딪쳤고 학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당시 박 정권이 추진한 한일 국교 정상화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데는 일본과의 국교 수립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회담을 추진한 방식이 큰 문제가 되었다.

박 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일본의 배상금으로 충당하려 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은 한국이었다. 박 정권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독립 축하금을 받는 형식까지 수용하면서- 일을 빨리 매듭지으려 했고 게다가 민주당 정권이 회담을 공개적으로 진행시켰던 것과는 달리 비밀리에 진행시켜 국민들로부터 밀실외교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친일=매국노=반민족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눈에 드러나고 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반공의 분위기가 높아가던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는 경제개발의 성과를 민족적 민주주의 개념에 담으려고 시도한다.

박 정권은 ‘민족적=경제자립’이라는 논리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능력과 효율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포기를 의미했고 암흑기인 3선 개헌과 유신 체제로 이어진다.

▶ 3선 개헌, 유신 체제

박 정권은 1966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기존 헌법으로는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통령 임기 규정을 폐지하는 3선 개헌을 추진한다.

반대 세력들이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자 박정희는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을 적법 조치하여 국민의 의사로 결정짓도록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하여 3선 개

헌이 민주주의 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변하였다. 또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면서 '민의' 수렴이라는 방패로 교묘히 장기집권 의도를 포장하였다. 또한 북한의 무장침투 가능성을 강조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주국방', '자립경제'라는 민족주의 담론을 다시 들고 나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제압하고자 하였다.

3선 개헌에 성공한 박 정권은 불리한 국내외 정세-북한의 무장침투 강화,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경공업 중심의 수출한계, 1960년대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계층, 도농 간의 격차 심화 및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인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전 끝에 힘겹게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1970년 8월 15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는 등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는 한편 1971년 8월 12일 '남북가족찾기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돌연 남북대화외 국제 정세의 변화를 내세워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박 정권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는 한편 1972년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계속하여 7월 4일에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을 담은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평화 분위기가 익어가던 10월 17일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정치활동의 중지, 현행 헌법 중 일부 기능 중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신헌법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박 정권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이산가족의 재결합,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기존 체제의 유신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로 포장을 하든 유신 체제는 기존 정당 구조를 파괴하고 박정희 개인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유신 체제 시절 자행된 수많은 불법적 인권유린 행위를 통해 확실히 드러난다. 또한

군부대를 동원하여 헌법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대파의 정치활동을 전면 봉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박 정권은 유신헌법을 공고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당선, 제4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의 세칭으로 제4 공화국의 헌법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악법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전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탄압이라는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또한 유신헌법체제는 '대통령 긴급조치'로 유지되었다.

긴급조치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위협을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로 유신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으로 사실상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긴급조치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는 김상진 할복 자살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것이다.

긴급조치 9호의 주요 내용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사실의 왜곡 전파 행위 금지, 집회·시위·신문·방송·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 선포하는 행위 금지, 수업 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 외의 일체 집회 시위 정치관여 행위 금지, 이 조치에 대한 비방 행위 금지, 금지 위반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하는 행위 금지, 주무장관에게 이 조치의 위반 당사자와 소속 학교 단체 사업체 등에 대해 제적·해임·휴교·폐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이다. 또한 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2월 7일 해체될 때까지 4년여 동안 민주주의의 암흑기로서 800여명의 구속자를 낳아 '전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 경제개발

박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당시 한국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통성 부재를 경제성장으로 만회하려는 욕구, 당시 경제적으로 우월한 북한을 따라 잡으려는 욕구, 그리고 자립적인 한국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결합되어 등장한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추진으로 시작된 박 정권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점차 성과를 거두어 매년 10%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960년대 말부터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1960년대 한국경제는 경공업에 치중한 나머지 국내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소재, 중간재, 자본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 수지까지 악화되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즉 1960년대 한국의 산업은 토지와 노동력만을 가미한 대외 의존적 경공업으로 외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당장은 수익을 올렸지만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또한 1960년대의 경제개발 정책은 저곡가 정책을 기초로 한 산업화였기 때문에 농업 수익성의 악화, 이농현상, 농산물 총생산량의 저하를 가져와 1960년대 말 농가소득이 도시 생활자 소득의 6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곡물의 수입, 소비수준 저하라는 전반적인 경제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으므로 농촌 경제의 재건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박 정권은 새마을 운동으로 농민들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고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데도 일정 부분 성공하였다. 한편 유신 체제 선포 후 도시의 지식인, 학생, 노동자, 종교인 등 대항 세력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새마을 운동을 농촌에서 전 국민

적 정신운동으로 전환시켰다. 결국 새마을 운동은 농촌 근대화라는 논리로 출발하였지만 유신 선포 후에는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1970년대 들어 박 정권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은 산업 발전 단계로 보아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박 정권이 자신들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급작스럽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우선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논리가 무시되면서 과도하게 추진되었다. 산업구조의 개편 뿐 아니라 유신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중화학 공업화를 강하게 추진하였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중화학 공업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데 이는 중복 과잉투자를 가져와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또 산업구조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중심의 집중 투자는 재벌의 팽창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구조화되어 부정 부패가 양산되는 사회구조를 형성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의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주지하다시피 민주당 정권에 의해 거의 완성된 것이었다.

제1차 계획을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수정시키고 필요 차관형태로 제공 해주었으며 최대 수출 시장을 제공했던 미국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경제성장이 박 정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진다. 더욱이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과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채 경제성장의 공을 박정희 정권에게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다.

▶ 박 정권 시기의 민주화 운동

박 정권 시기 고도성장의 이면에서는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저극가 정책과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린 반면 정권과 독점재벌은 돈독한

정경유착 속에 경제성장의 열매를 독차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 세력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반대투쟁, 3선 개헌 반대투쟁으로 이어지던 196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과 광주대단지 사건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치적 비판이나 특정 정책 및 정치 행위에 대한 저항이 1960년대 말 이후에는 대중 운동과 정권 비판, 퇴진 투쟁 등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민중이 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운동도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유신 체제의 제4 공화국은 긴급조치 등으로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탄압하였으나 연이은 긴급조치의 발표는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재야단체의 발족, 3.1민주구국선언의 발표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결집을 가져왔다.

민주노조 설립운동, 함평 고구마 사건 등의 농민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1979년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농성에 이어 유신 체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던 부마 민중항쟁이 일어남으로써 20년간에 걸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막을 내렸다.

1960~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는 우선 학생과 지식인을 들 수 있다. 국가기구 주도의 자본주의화가 급격히 진척되던 당시의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지닌 집단이었으며 성직자나 지식인들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도하면서 주요한 비판 세력이 되었다.

당시 '군부-관료-재벌'로 연결된 지배권력에서 군부가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학생-지식인-노동자'로 형성되었으며 운동의 주도권을 학생이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1964~65년 파행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비준에 반대하는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7년의 부정선거와 1969년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3선 개헌 반대 투쟁' 그리고 군사 독재 하에서 민주적 제 권리의 확보를 위한 투쟁 등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야'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4월 민중항쟁 시기 청년 단체

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합법 조직운동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여전히 학생운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따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 세력이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독점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자본-노동의 대립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과제는 단순히 자유주의 체제의 수립이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쟁취에 국한하는 것일 수 없었다.

1960년대 말부터 외채의 급증, 무역 적자폭의 확대, 차관 기업의 독과점화와 중소 기업의 위축, 인플레이 등 예속 자본주의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위기가 심화되었다. 또한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의한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해마다 50만의 이농이 발생하였고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 소득에서 노동자 소득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터져 나왔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 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근로 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는 충격으로 들끓었고 11월 27에는 '전국 연합 노조 청계 피복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 사건은 70년대 노동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촉발시켜 노학 연대, 지식인의 노동 현장 참여 등 사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민주 노조 운동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70년대에 크게 성장한 노동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회복을 위한 운동이다. 파업 시위 농성을 통해 정권과 기업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어용 노조를 민주화시키거나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나갔는데 청계 피복, 동일 방직, 삼원 산업, 반도 상사, YH 무역 노조 등이 대표적이다. 유신 체제 말기에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동일 방직 사건과 부마 민중 항쟁, 10·26 사태의 도화선이 된 YH 사건을 낳았다.

이처럼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은 독재체제에 대한 항거를 통해 최소한

의 철저적 민주주의의 획득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분단극복과 통일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전근대적 사회 관계와 파시즘적 통치방식의 청산을 요구하는 정권퇴진운동,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운동, 인권운동 등의 과제와 민중의 사회적 이익보장을 포함하는 민중적 민주주의의 싹이 움트면서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 계승되어 갔다.

3) 전두환 정권 시기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하여 7년 간 철권을 휘둘렀으나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6월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6월 항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져 온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 전두환 정권의 성립

1979년 박정희가 죽고 난 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민주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낙관과 유신 체제를 연장하려는 음모가 교차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독재 아래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한 세력들은 유신의 연장을 원하였다. 특히 독점 자본가들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노동 운동을 억누를 수 있는 억압적인 정권의 연장을 희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불법으로 병력을 이동하여 자신의 상관을 체포하고 군부 내 지휘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12.12 쿠데타). 이들은 친미 반공 체제를 유지하고 독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유신 체제의 재편을 기도하였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곧바로 정부를 해산하지 않았다. 박정희 18년 강권 통치를 경험한 국민들이 또 다시 군인이 집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군부는 유신 체제의 구속자를 풀어주고 제적 학생들을 복교시키면서 집권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집권을 위한 치밀한 음모와 공작을 준비하였다.

1980년의 봄은 민주화의 열망과 기대가 강하게 분출한 시기였다. 해직 교수와 제적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언론계도 언론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재 정권의 억압으로 신음하였던 노동계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엄은 해제되지 않았으며 민주화 일정도 제시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학생들

은 5월 들어 '제업 해제', '유신 잔당 퇴진' 등을 내걸고 본격적인 정치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5월 15일 서울역 집회로 학생들의 시위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시위가 신군부의 쿠데타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 제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18일 새벽부터 정치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으며,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서울의 봄'은 신군부의 전면적인 등장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신군부의 제엄 확대에 대한 저항은 광주에서 터져 나왔다. 대학생들이 제엄 확대, 휴교령에 반대하여 교내 진입을 시도하자 제엄군이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과잉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가세하자 제엄군은 총기를 발포하였다. 이에 광주 시민들도 무장을 하여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제엄군은 광주를 고립시키고 도청을 함락시켜 광주의 항쟁을 짓밟았다. 당시 언론은 신군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신군부에 동조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보인 신군부의 폭력성은 전두환 집권의 부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5공의 원죄로 남게 된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1980년대 전반 대소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전두환 정권을 지원하였다. 1980년대 니카라과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조성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미국 내 경제 침체 등으로 미국 중심의 체제가 동요하였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준비확장, 우방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 제3 세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통한 대소 강경 노선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는 반소 블록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강화되어 갔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대소 전진 기지로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하고 한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며 전두환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반공 노선을 강화시켰다.

광주에서의 대규모 학살 이후 신군부 세력은 헌정을 무시하고 폭력을 앞세우면서 제5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는 정치인 규제,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삼청교육대 등으로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

고 국가 보위 입법 회의는 구성원 전원을 전두환이 임명한 초법적인 과도 입법기구였다. 국가 보위 입법 회의는 5공 체제 확립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주요 입법 내용 중에는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 집시법 개정안, 국가 보안법 개정안, 언론 기본 법안, 3자 개입을 금지시킨 노동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 학살과 헌정 유린을 거치면서 신군부는 유신체제 하 관료 집단, 우익 정치인, 친미 보수적 지식인, 독점 재벌들과 더불어 5공의 지배 집단을 형성했다. 지배 집단의 구성을 보았을 때, 제5 공화국은 박정희 정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이 억압 체제를 고수한 것은 독점 자본가 등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다. 1970년대 말 중화학 공업의 과잉 투자와 외채 누적으로 독점 자본은 자본 축적의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 자본은 정경 유착을 통해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였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노동 착취의 강화로 자본 축적의 구조를 강화해 나갔다. 동시에 독점 재벌의 이익 보장을 위한 농업 개방과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은 파탄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농촌에서 밀려나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은 도시 빈민을 형성하였다. 도시 빈민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 예비군으로 전락하여 성장의 그늘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

▶ 전두환 정권의 강압 통치와 부정 부패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하여 유신 체제를 연장하였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에 대해 민주 질서 회복과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저항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두환 정권은 다양한 방식의 강압 통치를 실시했다.

첫째, 반민주 악법으로 국가 보안법, 사회 보호법, 노동 관련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었다. 국가 보안법은 규정이 애매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등 정권안보의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노동 관련법도 3자 개입 금지

법, 단체인권 규제 등으로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았다.

둘째, 강압적인 국가 기구로 국가 안전 기획부, 보안 사령부 등을 활용하였다. 국가 안전 기획부는 실정법 질서를 초월하여 민족 민주 운동을 탄압하고 공작정치를 수행하였다. 보안사도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군사 독재 정권의 정보수단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경찰의 폭력적 물리력을 강화하였다. 경찰은 시위 진압에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투입하고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기보다는 이른바 '시국치안'이라 불리는 정치권력 유지에 이용되었다.

넷째, 민주화 운동을 용공이나 이적 행위로 왜곡하고 탄압하는데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두환 정권은 민족민주운동을 일반 대중과 분리시키려 하였으며 남북한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다섯째, 사실을 왜곡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였다.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신군부 세력은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였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해외 여행 자유화, 동행 금지 해지,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 창설 등 유화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부정 부패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자유당 정권에서 비롯된 정경 유착의 부패 구조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 유착에 따른 관치 금융과 개발 독재와 맞물려 정착되었다. 특히 반민주적이며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부정 부패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등 끊이지 않고 터지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 부패를 접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염증을 느꼈다. 이러한 부정 부패는 정권에 대한 중산층의 이반과 민주화 운동 참여의 배경이 되었다.

▶ 민중의 삶과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

전두환 강압 통치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과 같은 민중이었다. 1980년대 노동자들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성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실질 소득 개선은 미약했으며 여전히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민은 계속되는 저곡가 정책과 농업 개방 정책으로 파탄에 직면하였고 도시로 내몰린 농민의 상당수는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 운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운동권 학생들의 저항과 희생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 학생 운동 세력은 광주 민중 항쟁의 실패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적 노선의 한계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구조를 인식하면서 점차 민중적, 민족적 입장에 입각한 사회 변혁을 지향해 갔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기층 민중은 반민중적 강권 통치에 저항하여 생존권 확보와 자주적 단결을 위해 투쟁했으며 일회성과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1983년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 결성을 계기로 활발하게 조직된 사회 각 분야의 '재야운동권'은 1985년 민주 통일 민중 운동 연합으로 집결되었다. 이로써 재야 운동은 기존의 명망가 중심의 양심적 운동(70년대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민주화가 앞장서서 운동하는 소수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화 투쟁에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면, 민주화 투쟁은 소수의 싸움으로 고립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그 이후 개헌 정국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국민들은 언론을 비판하여 한국방송공사 시청료 거부운동을 펼쳤으며, 6월 항쟁 시기에는 차량 시위에도 참여하고 시위 군중에 박수를 보내는 등 저항 운동에 동참했다.

1985년 정치 규제에서 풀려난 보수 정치인들은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신민당은 2·12 총선에서 민한당을 누르고 제1 야당이 되는 돌풍을 일으킨다. 국민의 지지로 제도 정치권에 들어선 보수 야당 정치인들은 개헌 정

국으로 국면을 전환시킨다. 개헌 정국으로의 전환과 직선제 개헌 운동은 1985년 선거에서 전두환 억압 체제와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변화 열망이 표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6월 항쟁과 독재 정권의 종식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은 1987년 정권 교체기에 들어와 6월 항쟁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1987년 초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독재 체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 당시 정권 교체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이는 개헌 요구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를 내려 군부독재를 연장하려 했다. 이에 호헌 철폐 시위가 잇달았으며 정치권과 재야 세력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구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대통령 간접선거에 출마할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6월 10일 '독재타도'와 '호헌 철폐'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6월 항쟁이 전개되었다.

6월 항쟁은 이전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부마 항쟁이나 광주 민주 항쟁은 통일적인 운동 지도부의 부재 속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단기적인 저항으로 그쳤다. 그러나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의 지도 아래 전국적, 대규모적,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6월 항쟁은 마침내 전두환 정권을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 한 진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5.18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성립한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또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어려웠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은 결국 '호헌 철폐'와 '직선제 실시'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항쟁은 강압 일변도의 군부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사회의 대세로 확정지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분배 정의의 실현이라는 내용적 민주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6월 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전개된 7, 8월 노동자 대투쟁은 절차적 민주화를 넘

어선 내용적 민주화의 과제가 우리 사회에 제기되었음을 말해준다.

III. 민주화 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 분석

1. 분석 대상 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 맞춰 편성된 교과서는 모두 3종류로 중학교 국사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심화선택 과목인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다. 이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1종 교과서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서 2003년도에 4종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⁸⁾ 이 교과서들은 모두 현대사를 다루고 있으니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는 모두 8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교과서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서술의 관점에서 이전보다 발전하였다. 과거 교과서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를 폄하하고,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며, 유신 체제나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서술을 하였던 것에 비하여 반민주적인 과거 정권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 분량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서술이 모두 59쪽이며 이 중에서 민주화 운동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소단원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부분인데, 이 부분이 3쪽에 지나지 않는다.⁹⁾ 이렇듯 제한된 지면 탓으로 서술 내용은 매우 간략하다.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 본문에서 개념 정도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는 보조단의 서술도 과정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이 무렵 새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

8) 2004 2 2 6 3의 근· 1대사 교
과서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9) 교육인적자원부, 『 』 2002, 351-353 3

고(1979.12.12), 5.18 민주화 운동(1980.5.18)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7차 고등학교 국사, 352쪽>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의도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광주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7차 고등학교 국사, 352쪽 보조단>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이와 같이 소략하게 구성된 것은 이 부분이 서술 계획에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심화선택 과목으로 분리되었기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국사는 전근대 시기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1년에 7차 국사 교과서가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 예정에 없었던 근·현대사 부분이 국사 교과서에 추가되었다.

이상을 통해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서술 관점의 변화는 살펴볼 가치가 있으나 내용은 매우 소략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술의 관점 변화는 같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편찬된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7차 국사 교과서 서술의 관점 역시 근·현대사 교과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7차 고등학교 10학년 국사가 분석의 중심 텍스트가 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7차 중학교 국사 교과서를 살펴보자. 중학교 국사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 소단원 및 소항목을 열거해 보면, 소단원 『4·19혁명과 5·16 군사 정변은 왜 일어났는가?』 와 이에 속한 소항목으로 「4·19 혁명」, 「장면 내각의 성립」, 「5·16 군사정변」 등이 있으며¹⁰⁾,

소단원 『경제 개발의 추진 과정과 그 성과는?』 과 이에 속한 소항목으로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경제의 성장」 등이 있다.¹¹⁾ 그리고 소단원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은?』 에 「10월 유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오늘날의 한국」 등의 소항목이 있다.¹²⁾ 이를 모두 더하면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전체 쪽수는 12쪽 정도 된다. 이러한 분량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서술의 절대적인 분량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교과서도 분석에 활용하겠으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략한 까닭에 분석의 중심 텍스트는 되지 못하였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심화과정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4종으로 (주)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주), (주)두산,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근·현대사 부분만을 특화했기에 서술 분량 면에서 당연히 이전의 교과서보다 크게 증대하였다. 현대사 부분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부분이 과거 5차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6쪽¹³⁾, 6차 고등학교 국사의 8쪽¹⁴⁾이었다. 이에 비해 근·현대사 교과서는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배정도 분량의 증대를 보이고 있다.

10) 교육인적자원부, 『 』 2002, 309-311 쪽
 11) 교육인적자원부, 『 』 2002, 312-314 쪽
 12) 교육인적자원부, 『 』 2002, 317-319 쪽
 13) 교육부, 『 』 1994, 180-185 쪽
 14) 교육부, 『 』 1998, 202-209 쪽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 분량 비교

교 과 서	해당 쪽수	분량 ()
5 학년 고등학교 국사	180-185	6
6 학년 고등학교 국사	202-209	8
7 학년 「·성」 교과서	276-297	22
7 학년 「·한」 교과서	265-282	18
7 학년 「·산」 교과서	284-309	26
7 학년 「·양」 교과서	294-317	24

또한 근현대사 교과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여야 정권 교체 이후에 제작된 교과서이다. 교과서 편찬의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민주화 운동을 보다 진보적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1종이 아니라 검정으로 제작된다는 사실은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면에서도 다양성을 가져왔다.



< . >

이렇듯 근현대사 부분이 특화되고, 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편찬되었으며, 검정 방식으로 제작된 것 등은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이전 교과서나 7차의 다른 국사 교과서 보다 진일보된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 글에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분석의 중심에 놓이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10학년 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분류사적 시대사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국사 교과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구성 방식에 따라 근현대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서로 나뉘어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 방식은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권의 성격 및

활동의 배경 등을 설명하는데 취약하다. 예를 들어 4·19 혁명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경제적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제 서술이 동떨어져 있어 유기적인 이해를 어렵게 한다. 둘째, 독재 정권에 저항하였던 민주화 운동의 범주를 정치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노동 운동이나 농민 운동도 민주화 운동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사회나 경제 중단원에 서술되면서 사회 현상으로 다루어져 민주화 운동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나 언론의 투쟁도 민주화 운동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문화 부분에 서술되면서 문화 현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본문과 부속물 구성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금성」¹⁵⁾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본문 서술과 다채로운 부속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은 본문에서 언급해야 할 내용조차도 읽기, 탐구 자료로 처리하는 등 자료 중심형이고 전체 분량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 소략한 편이다. 「두산」과 「중앙」은 본문 서술의 비중이 크며 읽기, 탐구자료 등의 부속물을 갖추고 있으나 「금성」보다 종류나 내용이 단순한 편이다.

7차 교과서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그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대상은 2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부터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 분석에서 주요 사건으로 4·19 혁명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2차 교육과정부터이기 때문이다. 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고시되었다.

교육과정의 변천은 단순히 교육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¹⁶⁾ 따라서 교육과정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각 시기 국사 교과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2차 교육과정은 5·16 쿠데타 이후 전개된 정치 사회 상황에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3차 교육과정의 공포 시기는 1973년으로 이

15) 본 연구에서 근·현대사교과서의 명칭은 「금성」 「대한」 「두산」 「중앙」로 통일한다.

16) 정선영 외,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80쪽

때는 국사 교과서를 통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성격이 강하였다. 4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것은 1981년으로 전두환 정권의 성립을 정당화하고 정권을 미화하려는 서술이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이 공시된 것은 중학교의 경우 1987년, 고등학교의 경우 1988년으로 1980년대 역사학계의 진보적 연구 성과와 6월 항쟁 이후 사회 민주화의 영향으로 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5·16이 여전히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두환 집권의 불법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고시되었다. 문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서술 시각은 6차 교과서에서 차별화된다. 5·16 군사 ‘정변’으로 용어가 바뀌고 전두환 집권의 불법성과 집권시기의 반민주성이 미흡하게나마 서술되고 있다. 과거 반민주적인 정권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7차에서 비로소 분명해진다.

이상으로 이 글에서 분석할 대상 교과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7차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전에 비해 서술 관점이 정권의 정당화에서 벗어나 진보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서술 분량이 소략하여 분석할 내용이 빈약하다. 이에 비해 근·현대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분석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리고 서술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은 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어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피는 것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 시각에 대한 고찰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을 4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로 정하였다. 그리고 7차 교과서의 서술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서술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시기별 분석

1) 이승만 정권 시기

이승만 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의 성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한국 전쟁, 농지 개혁과 미국의 경제 원조, 진보당 사건과 평화 통일론,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4·19 혁명의 7개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 중 일부는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이승만 정권 수립 이전에 전개되었던 국가 수립 운동이나 노동자·농민 운동, 단정 거부 운동 등은 일부 민주화 운동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세세한 개별적 사건들도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2차 국사 교과서부터 서술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모든 항목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역시 중심이 되는 교재는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로 하였다.

<분석 항목>

-
- 이승만 정권의 성립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 한국 전쟁
 - 농지 개혁과 미국의 경제 원조
 - 진보당 사건과 평화 통일론
 -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 4·19 혁명
-

▶ 이승만 정권의 성립

<분석 기준> 첫째,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과 남한 단독 선거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미국은 미·소 공동 위원회를 통

한 국가 수립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파기한 것으로서, 상대국인 소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유엔과 미국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에 대해 통일 정부를 염원하였던 민중들은 이른바 2·7 구국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또 임정 계열 인사들은 대부분 총선거에 불참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치열한 민중 항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미국과 우익 세력은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였으며, 민중들의 수동적인 참여 속에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5·10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둘째, 이승만 정권은 5·10 총선거라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쳐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 면에서 일정한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주어야 한다. 정통성이란 유엔과 같은 외부 사회의 공인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질적으로 구성원들의 동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승만 정권은 분단 체제와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 지지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한계를 폭력적인 국가 운영으로 대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저항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철저하게 부정하였다.

셋째, 이승만 정권의 성립 과정은 분단 세력이 남한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해방 직후 국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은 어느 정도의 대중적 지명도는 가지고 있었으나, 김구나 여운형 등에 비해 현실적 정치 기반은 매우 박약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탁 운동을 반공·반소 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우익 세력을 결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분단 체제를 지향한 미국의 대한 정책에 편승하여 국가 수립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성립은 결국 통일 세력에 대한 분단 세력의 승리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이승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하였다.

<내용 분석> 2차 교과서의 경우 분단 체제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서술이

매우 소략하며, 그마저도 철저하게 냉전적 관점으로 일관하여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심지어는 사실적인 관계마저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었으며, 소련과 북한이 유엔의 결정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5·10 총선거 실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승만과 그를 둘러싼 정치 세력의 지향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38선은 소련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소련은 러일 전쟁 직전에 39도선으로 한국을 분할하려던 제정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이제서야 실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8·15 해방 후 재빨리 평양에 진주하여 ... 민족주의자들을 반동 분자라 하여 숙청하는 한편 남한까지 적화(赤化)하려 하였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1쪽>

국정으로 발행된 3차 교과서 역시 분량은 다소 늘어났으나, 서술의 기조는 이전 교과서와 다를 바 없이 분단의 책임을 대부분 소련과 북한에 두고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에 배태된 '정신적 빈곤'으로 인하여 국가 수립이 순조롭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과연 여운형·김구 피살 사건 등 국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이런 추상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소련측은 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정부를 세우자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소 공동 위원회는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외세의 작용이, 단합하여 통일 정부 수립에 매진해야 할 정계를 더욱 혼돈시키고, 민족 분열과 국토 분단의 비극을 몰고 왔던 것이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1쪽>

식민지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신 기반에서는 ... 당시의 국제 관계를 파악하고 민족의 독립과 국가 운영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만한 국민적인 역량이 생겨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정신적 빈곤은 사회와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혼란에 빠졌고, 여 운형, 장 덕수, 김 구 등의 암살 사건 같은 것도 빚어냈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1-292쪽>

4차 교과서에서는 5·10 총선거가 비록 남한 단독으로 치러졌지만, 북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은 총선거에 불참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의 의석을 남겨 놓은 채 5월 30일 제헌 국회가 소집되었고,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에 내외에 공포하였다. <4차 고등학교 국사(하), 161쪽>

5차 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이전 교과서에 비해 다소 진전을 이루었는데, 처음으로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의 양측 주장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분단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속에서도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국 문제가 반탁 운동으로 난국에 부딪힌 가운데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임시 정부 수립을 협의하기를 주장하는 소련측과, 모든 정치 사회 단체의 참석을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한반도에는 강대국의 상호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분단 상황이 지속되었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75쪽>

이에,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 단독 선거가 남북의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때, 북한측의 의도를 불신한 이승만 등은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였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75쪽>

6차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을 크게 늘린 점이 주목되었다. 국가 수립 운동을 주도한 여러 정치 세력의 움직임을 이전보다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5·10 총선거에 목적의식적으로 불참한 정치 세력이 존재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일제가 패망하자 즉각 건국을 위한 자발적인 조직체를 만들어 독립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또, 임시 정부가 귀국한 후에 힘을 합쳐서 독립 국가를 이룩하자라는 한국 민주당과 같은 정치 세력도 나타나게 되었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92쪽>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 민국을 수립한 것은 당시의 국내외 정세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 이 때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고있던 남북 협상파는 총선거에 불참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이들과 지도 이용하려 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196쪽>

2차~6차 교과서의 공통적인 서술 기조는 냉전적 대립 속에서 분단 체제는 피할 수 없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소련과 북한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 경우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본질적 성격이라든가, 단정 반대 운동의 내용과 의의, 이승만 정권이 폭력적 지배 체제를 구축하게 된 배경과 같은 부분은 전혀 끼여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분량이 대폭 늘어난 만큼 해방 공간과 국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이 자세해졌으며, 또 다양한 종류의 사진 자료와 읽기 자료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당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일정한 관점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금성」의 경우,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미 군정청에 필요한 한국인 관리는 주로 한국 민주당 계열의 인물로 채웠다. <금성, 256쪽>

라는 본문 서술과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 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라는 읽기 자료(257쪽)를 통해 미군정청의 통치 방침에 편승하여 친일 활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 민주당 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는 점을 밝혔다. 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과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 과정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진 자료도 ‘신탁 통치 반대 운동’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지지 대회’라는 제목으로 우익과 좌익의 대립 모습을 병렬로 배치하였는데, 이 점은 「두산」과 「대한」이 우익의 반탁 운동 사진만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타협에 의해 통일 정부를 만들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금성, 258쪽>



「두산」도 ‘백아더 포고령 1호’를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259쪽), ‘2. 미군정 하에서 친일파가 온존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해보자’라는 탐구 과제를 제시하여 미군정의 한계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또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서도

미·소 공동 위원회의 무기한 휴회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민족적 위기로 판단한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군정의 지원 하에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미군정은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하였다. 중도 정부 수립을 지향하던 좌우 합작 운동은 한동안 활기를 띠었으나,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져 실패하고 말았다. <두산, 263쪽>

라고 관심 있게 서술한 점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서술 기조가 과거 국정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군정의 한계와 친일 세력의 온존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돌출적인 느낌이 있으며, 좌우 합작 운동의 실패 원인을 정치 세력간의 이해 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당시의 정치 지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이나, 좌우 합작 운동의 실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것은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중앙」이었다. 「중앙」은 1.5쪽에 걸쳐 좌우 합작 운동의 목표와 미군정청의 방침, 실패 배경 등을 기술하였으며, 연이어 남북 협상을 비슷한 분량으로 배치함으로써 통일 세력과 분단 세력의 대립 구도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광복 직후 좌우 연합의 건국 준비 위원회가 추진한 건국 활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광복 이후 결성된 수많은 정당 중에는 전체적으로 좌우 연합을 지향하는 중도파 정당이 많았다. 그러나 신탁 통치 문제로 국내의 정치 세력은 급속히 좌익과 우익 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중도파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었다. <중앙, 279쪽>

… 게다가 미국은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 속에서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우익 세력을 옹호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좌우 합작을 통하여 중도적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운동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국 속에 좌우 합작 운동의 중심 인물인 여운형이 극우 세력에 의하여 암살되었다.(1947. 7) <중앙, 280-281쪽>

「대한」 역시 신탁 통치 문제나 좌우 합작 운동 등 국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나머지 세 교과서와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분단 세력이 최종적인 승리

자였으며, 그 결과 형성된 지배 집단은 반공·친미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의 서술이 지극히 미흡하였다. 「금성」은,

… 대한 민국 정부는 곧바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 민족 국가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출범 직후 이승만 정부는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혔다. … 일부 소장파 국회 의원들도 주한 미군의 철수, 친일파 처벌, 토지 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안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금성, 264쪽>

라고 하여 단독 정부 수립을 통일 민족 국가 수립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다음 쪽에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배치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반면 「대한」, 「중앙」, 「두산」 모두 북한 정권의 수립을 한국 전쟁 부분에 배치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정통성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며, 북한 정권은 극복해야 할 비정통적인 집단이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차 교과서에서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정권의 성립에 관한 서술은 전반적으로 냉전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여전히 신락 통치 문제에 관한 한 반탁 운동만이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유엔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통일 민족 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결과지로 취급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이적 행위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분석 기준> 이승만 정권의 본질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의

하나는 반민특위 활동이다. 이승만은 집권 초기부터 친일 세력을 처단하고 민족 정기를 확립하라는 민중들의 요구에 직면하였고, 결국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반민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내부에는 미군정 시기부터 온존되어 온 친일 세력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반공·친미를 공통 분모로 이승만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승만은 애초부터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으며, 친일 세력의 반민특위 와해 공작을 수수방관하였다.

친일 세력 처단에 관한 교과서 서술은 반민특위 활동을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서는 안되고 이승만 정권의 태생적 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며, 이럴 경우 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성·반민증성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민특위 활동의 좌절은 당시 한국 사회의 내부적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그 폐해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내용 분석> 2차~5차 교과서에서는 친일 세력 처단에 관해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었다. 반민 특위 활동이 교과서에 등장한 것은 6차 교과서부터인데, 그마저도 사실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 다음 이승만 정권이 반공 정책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일파 처단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한국 전쟁을 말함)을 딛고 새로 출범하게 된 대한 민국은 민주 국가로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먼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일제 시대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 등이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반공 정책을 우선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친일파 처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197쪽>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모두 반민특위와 친일 세력 처단 활동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으며, 분량도 2쪽 가까이 배분하였다. 「두산」은 본문 1쪽과 탐구 활동 1쪽을 각각 할애하여 반민특위 활동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다만 평가 부분은 6차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친일 세력이 이승만 정권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이승만이 소극적인 입장을 넘어 반민특위 활동을 견제하고 억압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었다. 또 공소 시효 만료라는 법률적 절차를 언급한 대목은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의 좌절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진 느낌도 받게 된다.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 정책을 우선하면서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반민특위의 활동을 견제하고 억압하였다. 이에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에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두산, 269쪽>

「중앙」 역시 이승만과 친일 세력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반민법 제정 자체가 극우 반공 세력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지적하였다. 또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반민특위 방해 공작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으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가치와 도덕을 전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결국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매국노로 매도된 반면, 친일파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건국 운동을 한 애국자로 둔갑되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공 정책을 가장 중요시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친일 세력의 방해 공작, 일본 경찰 출신의 경찰 간부의 반민 특위 습격 사건 등으로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1949.8.31). <중앙, 285쪽>

「금성」은

그러나 행정부나 경찰 곳곳의 주요 자리에 친일 행위를 한 인물들을

등용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크게 좁히고, 친일파 처벌의 기한을 줄임으로써 반민 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금성, 266쪽>

라고 하여 이승만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기술한 다음,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라는 읽기 자료에서 두 나라의 민족 반역자 처벌 내용을 비교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한」은 도입 부분에서 ‘대물림하는 친일파의 재산’과 ‘고아원에서 자란 독립 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읽기 자료를 마주보기로 배치하여 관심을 끌었으며, 반민특위의 실적과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에 관한 비교 통계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친일 세력 처단이라는 항목만을 독립적으로 본다면 참신하고 탄탄한 구성이지만, 이승만 정권의 성격에 관한 유기적인 서술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이승만은 집권 이후 추진된 굵직한 사안들마다 정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민중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비롯된 정권의 위기를 독재 권력의 강화로 돌파해 나갔는데,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반민특위 활동이었다. 반민특위 활동은 6차 교과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접어들어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전후 교과서 서술과 긴밀하게 연관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성·반민주성을 밝히는 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 전쟁

<분석 기준> 첫째, 한국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되었지만, 당시 남북한은 이미 준전시 상태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의 문제, 즉 전쟁 책임론에 집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상을 왜곡하고,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을 은폐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전황(戰況) 중심의 접근을 벗어나야 한다. 한국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전황에 가려 한국 전쟁

이 남북한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 문제 등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한국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이승만 자신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 전쟁의 발발로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내용 분석> 한국 전쟁에 대해 2차~6차 교과서는 6·25 동란, 6·25 사변, 6·25 남침, 6·25 전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전쟁의 책임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시작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제 교과서 서술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2차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준비 강화와 남침, 유엔군의 참전, 휴전으로 이어지는 전황을 자세하게 기술한 다음, 결론 부분에서 북진 통일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였으며, 3차 교과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25 동란은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다.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갔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파괴되어 수 백억의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실로 통탄할 노릇이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국민의 반공 사상이 확립된 것은 다행한 일인 것이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4쪽>

그런데, 이 시기에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여, 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 때, 한국민은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휴전 반대 운동을 일으켰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남으로써, 통일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민족 상잔의 비애만 절감되었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4쪽>

4차~5차 교과서에서는 북한 정권의 수립과 공산화 과정, 4·3 항쟁 등에 대한 서술 분량을 크게 늘려 한국 전쟁의 배경 설명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었다. 즉 북한이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 민국을 위협하

는 존재로서 혹독한 독재 정치를 실시하고 있을 때, 남한에서는 공산 게릴라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 사회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6차 교과서는 한국 전쟁의 영향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를 언급하여 주목을 끌었으나, 그 비중은 결코 크지 않은 것이었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 나라는 군정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4차 고등학교 국사(하), 163쪽>

... 불의의 기습을 받은 대한 민국 국군은,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조국 사수의 결의를 다짐하면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76쪽>

6.25 전쟁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심어 주었다. 사회적으로는 격심한 인구 이동으로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서구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되어 우리의 전통 문화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01쪽>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역시 지금까지 살펴 본 2차~6차 교과서의 한국 전쟁 서술과 다름없이 냉전적인 관점에서 전황 기술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증앙」은 '6.25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라는 탐구 활동(292쪽)에서 부역자 처벌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두산」도 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거나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학살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 전쟁에 따른 인명 피해도 엄청나서 남북한에서 전투에 의한 사망자가 150여 만 명, 부상자는 360여 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재민도 수백 만 명에 달하였다. 또 전쟁 중에 여러 지역에서 양만 학살 사건이 일어나 민

간인 희생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두산, 280쪽>

한편 「대한」은 앞의 두 교과서와는 달리 4·3 항쟁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별도로 취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 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국군과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면서 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1954년에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5·10 총선거를 둘러싼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출범한 대한 민국 정부는, 반공 태세를 강화하면서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기 위해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대한, 257쪽>

한국 전쟁에 관해 가장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은 「금성」이었다. 「금성」은 북한 정부의 수립을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265쪽)라는 제목으로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과 병렬로 배치하였으며, 4·3 항쟁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역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술하였다. 전쟁의 발발 부분에서는 ‘6·25 전쟁 이전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읽기 자료(268쪽)와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38도선 곳곳에는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전투는 곧이어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의 전주곡이었다. <금성, 268쪽>

라는 본문 서술을 통해 남북한이 이미 준전시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밝혀

주었다. 또 전쟁의 피해상 부분에서도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남한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직후 보도 연맹 관련자들이 처형되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 남과 북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적대감이 쌓여 갔다. <금성, 272쪽>

라고 하여 남북한 정부 모두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미 안보 체제의 강화와 이승만의 독재화, 반공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 등에 대한 서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2차~7차 교과서의 한국 전쟁 서술은 전체적으로 전쟁 책임론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전황 중심의 기술을 탈피하지 못한 탓에 한국 전쟁이 이후 남북한 사회에 미치는 규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김일성 모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느낌도 있다. 또한 4·3 항쟁을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만 간주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며,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지극히 억울한 일인 것이다.

▶ 농지 개혁과 미국의 경제 원조

<분석 기준> 첫째, 농지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아울러 제시해야 한다. 토지 개혁은 민중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이른바 건국 의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며, 남한보다 앞서 실시된 북한의 토지 개혁은 큰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다. 친일 지주 세력을 중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하였던 이승만 정권도 민중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어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농지 개혁의 결과 지주 계급은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이 농민들의 수동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농지에 국한되었으며, 지주 계급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토지를 빼돌리는 바람에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

다.

둘째,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자립 경제의 실현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원조는 한국 전쟁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본질적으로 한국을 반공 기지로 삼으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절대적인 궁핍 상태를 해소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가 대부분이어서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1958년부터 미국의 경제 원조가 급감하자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4·19 혁명이 일어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민중들의 경제적 처지가 사실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3·15 부정선거 유란 시위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해방 후 경제적 어려움, 한국 전쟁,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 등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의 노동 운동 탄압, 미국의 대량 농산물 원조로 인한 농민들의 곤궁화 현상, 실업자의 대량 증가 등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민중들은 분단 극복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도 하였다.

<내용 분석> 2차 교과서의 경우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부분에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독재 정권의 성장과 함께 재벌(財閥)이 형성되어 갔다. 동란의 혹심한 파괴와 막대한 전비(戰費)의 조달로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틈에 정부와 결탁한 몇몇 특정(特定) 기업체(企業體)는 불과 수년 만에 재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많은 중소 기업(中小企業)은 몰락하고 쌀값은 생산비보다 낮아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독재 정치와 이와 결탁한 소수 신흥 재벌들의 경제적 독점은 사회적 불안을 극도로 키워가고 있었다. <2차 고등학교 국사, 동아, 245-246쪽>

라고 서술하였다. 비록 이승만 정권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총체적·근원적인 설명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그러나 농지 개혁과 미국이 경제 원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3차~5차 교과서는 그나마 있었던 민중들의 경제적 처지에 대한 서술이 모두 빠진 대신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에 대한 찬양만이 자리잡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한 교과서 서술이 퇴보하고 말았다.

6차 교과서는 '4.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라는 독립된 중단원을 설정하여 1950년대의 경제적 상황을 다시 복원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 민국 정부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농공의 균형 발전, 소작제의 철폐, 기업 활동의 자유,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인플레이션의 극복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고, 미국과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14쪽>

휴전 이후에는 경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 이에 1950년대 후반기부터 제분·제당 공업과 섬유 공업이 성장하였고, 시멘트와 비료 등의 생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 데 비하여 기계 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생산재에서 원료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14쪽>

그러나 농지 개혁의 전말이나 미국의 경제 원조의 규모와 순역기능에 대한 설명이 일절 누락되어 있어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분류사적 시대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4·19 혁명과 별개의 중단원에 기술되어 있어서 당시의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들어와서였다. 「금성」은 2쪽에 걸쳐 농지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기술하였으며,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충분히 언급하고 있다. 또 ‘미공법 480호와 대충 자금’, ‘원조 경제와 삼백 산업’이라는 읽기 자료를 통해 재벌 기업의 성장과 정경 유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농지 개혁의 결과 사회적 지배 계급으로서 지주는 사라지고, 상당수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 그러나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값이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금성, 322쪽>

이승만 정부의 전후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점점 더 미국의 영향 아래 놓였으며, 미국의 원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정책도 달라져 갔다. <금성, 324쪽>

「두산」은 정치사 부분에서는 농지 개혁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농지 개혁법의 시행으로 그때까지 소작농으로 시달렸던 가난한 농민들이 자기 농토를 가질 수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지 개혁을 실시한 것은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 <두산, 271쪽>

라고 기술한 다음 경제사 부분에 와서 그 한계를

… 또 농지 개혁이 실시된 후 자작농 정착이 의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농지가 상인 자본이나 고리채 자본에게 매도되어 소작 제도가 음성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대량으로 도입되어 국내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업 생산을 약화

시켰다. <두산, 325쪽>

라고 지적하였다. 시대사적 분류사라는 교과서 체제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정치사와 경제사를 왔다갔다하면서 종합·정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코 바람직한 집필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두산」은 미국의 경제 원조에 대한 서술이 빈약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4·19 혁명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한」은 농지 개혁에 대해 적절한 통계표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며, 본문 서술도 결코 미흡하지는 않았다. 전후 복구 사업도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나, 재벌 기업의 성장과 정경 유착 비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또한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학습 주제명이 '빈손과 맨발로 일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 역시 미국의 경제 원조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제목 선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중앙」 역시 광복 직후의 경제 상황, 농지 개혁, 미국의 경제 원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한 민국의 농지 개혁'이라는 탐구 활동에서 농민의 입장과 지주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농지 개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6차 교과서는 그 내용이나 관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내용도 늘어나고 다양한 통계표와 사진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역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복원하는데에는 그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정치사와 경제사를 중단원을 달리하여 서술한 까닭에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4·19 혁명으로 대표되는 이승만 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에 왜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적절한 답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다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그 의미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 진보당 사건과 평화 통일론

<분석 기준> 첫째, 진보당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조

보암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유효 득표의 30%를 획득하였다. 투표 결과는 당시의 부정 선거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상황에서 조보암이 제창한 평화 통일론과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을 한 축으로 하는 보수 세력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조보암을 처형하는 데에 이르렀다.

둘째, 조보암과 진보당 사건은 단발성으로 돌출한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의 통일 정부 수립을 지향했던 정치 세력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승만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통일 정부 수립을 지향했던 정치 세력은 그 와중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조보암의 선전을 계기로 이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4·19 혁명 직후 혁신 세력이 전개한 통일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내용 분석> 조보암과 진보당 사건이 교과서 서술에 등장한 것은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부터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건의 의미에 비해 서술 분량이 빈약하고, 그마저도 사실적인 내용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한」은 이승만의 독재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부통령 장면이 피습당하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진보당 당수 조보암은 간첩 혐의로 처형되었다. 또,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며 언론 보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경찰을 동원하여 통과시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경향 신문을 폐간시켰다. <대한, 267쪽>

라고 하여, 조보암이 처형된 사실만을 언급하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조보

암은 결코 친숙한 인물이 아니다. 전체 문맥으로 보아 조봉암 처형이 부적절한 일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평화 통일론과 혁신 세력의 성장이 이승만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추론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증앙」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특히 「증앙」은 보조단에 ‘진보당 사건-1958년 1월에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296쪽)라는 각주를 배치하였는데, 이는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용공 조작된 사건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도 어긋난 것이다.

「금성」은 조봉암에 대해

… 한편, 혁신계를 대표하는 조봉암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 득표의 30%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였다.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금성, 277쪽>

라고 기술하여 조봉암의 선전이 갖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조봉암이 평화 통일론을 제창하였던 사실이나 이승만 정권이 국가 보안법을 이용하여 조봉암을 처형한 점 등을 언급하지 않아 이승만의 독재화를 생동감있게 전달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다.

「두산」도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을 탄압한 사실만을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보조단에 ‘진보당-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후 사형에 처하였다.’라는 각주를 배치하는 수준이었다.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보수 세력의 일시적 단결을 가져왔으며 또 혁신 세력의 진출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매우 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건에 대한 평가도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분석 기준> 첫째, 이승만이 폭력적·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념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반공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응공 사건을 조작하여 정적들을 제거하였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또 이승만 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이른바 지배 블록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협잡한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진보당 사건이었다.

둘째,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는 정치적 억압 체제일 뿐만 아니라, 정경 유착을 조장하여 민중들의 생활을 악화시키고 부정 부패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제 원조를 운용하고 귀속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아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재벌 기업의 이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음성적인 정치 자금으로 다시 이승만 정권에 회귀하였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의 폐해는 결국 민중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급감하자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내용 분석>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 대한 서술은 이미 2차 교과서부터 비중있게 서술되었으며, 이러한 서술 기조는 3차 교과서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교사나 참고 서적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후 이승만은 여당인 자유당(自由黨)을 만들어 더욱 독재 정치를 행사하는 한편,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54년 12월에 4사5입(四捨五入)의 개헌 파동을 일으켜 1956년 대통령에 3선되고, ... 1958년 12월에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 보안법(國家保安法)과 지방 자치법(地方自

治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무술 경위를 동원한 2·4 파동(二四波動)까지 일으켜 정치적 혼란은 극심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경제적 혼란도 그 극에 달하였다. 6·25 동란으로 인한 생산력의 마비, 전쟁 비용의 조달, 유우엔군에 대한 환화(圓貨) 지출 등은 인플레이션을 조성하여, 물가는 매년 2,3 배씩 뛰어 올라 국민 생활은 날로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하였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5쪽>

휴전이 성립한 후 대한 민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한미 간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황폐한 국토와 파괴된 산업 시설의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무렵, 내부적으로 정치적 위기가 싹트고 있었는데, 이미 전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2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정치 파동을 일으켜 국회를 탄압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관권을 동원하여 승리하고 이승만은 재선되었다. 그 후, 자유당은 다시 이승만이 종신 대통령을 지내게 하기 위한 변칙 헌법을 만들고, 3선되었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6쪽>

4차 교과서는 상·하권 체제로 바뀌면서 분량도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현대사 부분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또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 대한 서술도 상당히 완곡해졌는데, 5차 교과서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전쟁의 책임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제 2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를 피하기 위하여 계엄령 선포하에 국회를 탄압하고 소위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2).

그 후, 그의 종신 대통령을 가능하게 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키고(1954), 선거에서 관권을 동원하여 승리를 거두어 지배 체제를 강화한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차 고등학교 국사(하), 169쪽>

전란 중에 이승만은 공산 침략을 막고,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등 과감한 반공 정책을 폈으나, 한편으로는 계엄령 선포하에서 국회를 탄압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서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해 이른바 사사 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1960년 3월의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감행하여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였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은 국민 전체의 이익 보다는 일당의 집권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어기면서 부정 부패,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80쪽>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부분이 다시 강화된 것은 6차 교과서였다. 그러나 6차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가 한국 전쟁의 경험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독재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공산군의 남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외교에 힘을 쏟았다. 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으며, 후방에서도 공산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였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고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그 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추구하면서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심화되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03쪽>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 대해 2차~6차 교과서는 대부분 정치적 문제에 국한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이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였다는 점과 미국과의 관련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공통적이었다. 반면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단 서술 분량이 크게 늘어나 학생들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 「두산」은,

국회는 1952년 1월에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차

로 부결하였다. ...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은 관제 민의를 조작하여, 백골단과 땃벌떼 등의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벽보를 곳곳에 붙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결국에는 10여 명의 국회 의원들이 국제 공산당으로 몰려 구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약간 가미하여 절충한 발췌 개헌안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기립 표결을 거쳐 찬성 163, 반대 0으로 이를 통과시켰다(1952.7). 이를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두산, 284-285쪽>

라고 하여 매우 소상하게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문을 읽다보면 발췌 개헌이 이승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의 총성 경쟁에서 비롯된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국에는 10여 명의 국회 의원들이 국제 공산당으로 몰려 구속되었다'는 구절처럼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수동형으로 서술한 것도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

국회 표결이 경찰과 군대가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공포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찬성 163 반대 0'의 결과만을 제시한 것도 교과서 필자들의 의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하니까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처럼 학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발췌 개헌에 대한 서술 바로 아래에는 '발췌 개헌의 배경'이라는 탐구 과제가 있다. 그 중 제2대 국회의 의석 분포표를 보고 '제2대 국회 구성에서 각 정당 및 단체의 성향을 조사하여 특징을 분석해 보자'라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학생들 수준에서는 10여 개의 단체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또 친이승만인지 반이승만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중앙」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 대한 서술 첫머리에 '반공 정책'을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교과서 집필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승만 정권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이었으며, 독재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냉전 체제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직후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다.

6.25 전쟁 중에는 공산군과의 휴전을 반대하고 반공 포로를 석방하기도 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반공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조치는 6.25 전쟁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중앙, 294쪽>

이러한 관점은 또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과정 말미에

이와 같이, 이승만 정부는 남북 대결의 상황 속에서 북진 통일론, 반공 이데올로기 등을 이용하여 장기 집권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 부정 부패가 심화되어 갔다. <중앙, 296쪽>

라고 정리한 부분이나 ‘이승만 정부의 반공 정책과 독재 정치’라는 탐구 활동과도 짝을 이루고 있다. 다만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미국에 의해 이식된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중앙」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과정에 대해서도 친일 세력 청산과 농지 개혁의 불철저함을 언급한 점이 다른 교과서와 구별되는 장점이었다. 그러나 교과서 체제의 특성상 친일파 부분은 선행 학습이 되어 있으나 농지 개혁을 비롯한 경제적 조건은 나중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이 담보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승만 정부는 건국 이후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50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크게 줄어들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승만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없었다. <중앙, 294-295쪽>

「금성」은 앞의 「두산」이나 「중앙」에 비해 분량이 너무 소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며, 서술상에서도 큰 차이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또 「대한」은 발췌 개헌 부분에서 유일하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국민 방위군 사건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는데,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권 유지라는 측면에서 서술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자유당을 조직하여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거창에서 양민 500여 명을 공산군이라는 혐의로 학살한 사건이 폭로되고, 국민 방위군 사건이 터지는 등 실정으로 국회 의원들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는 대통령에 재선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폭력당을 동원, 국회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2.7). <대한, 266쪽>

그 중 ‘소집되어 가는 국민 방위군’<대한, 266쪽>이라는 사진 자료 해설에는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들려 100여만 명에 이르는 장정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1000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5만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비해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대로 7차 교과서는 이승만의 독재화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개별 사건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서술이 상세해졌으며, 그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경제 상황과는 서로 별개의 단원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상(像)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분단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본질적인 모순 구조를 비껴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 4-19 혁명

<분석 기준> 첫째, 4-19 혁명을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시위 운동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4-19 혁명은 3-15 부정 선거 규탄과 정·부통령 선거 무효화 요구에서 시작되어 종국에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정치 변동이었다. 비록 사회 구조와 지배 세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정한 사회과학적인 의미의 혁명은 아닐지라도, 단독 정부 성립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궤멸되다시피 했던 민족·민주 운동의 흐름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분단 체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런 면에서 4-19 혁명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해방과 이승만 정권의 수립,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둘째,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규정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남한은 핵심적인 반공 전진 기지였으며, 이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남한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식하고 대규모 경제 원조를 쏟아 부었던 것이다.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정치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4-19 혁명 당시 학생·시민들의 시위가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승만을 외면하였던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미국이 이승만을 외면한 것은 보다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나 자신들의 지배 전략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근대화론이 갖는 위험성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근대화론에 의하면 이승만 정권은 서양의 절대 왕정에 비견될 정도로 봉건적인 성격이 강한 권력체였기 때문에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시민 혁명에 해당하고 민주당 정권-부르조아 민주 정부-의 성립으로 혁명은 완결된 것이 된다. 다만 서양과는 달리 시민 계급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에 의한 대리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의 역사를 민주당 정권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으며, 민족·민주 운동은 모두 혁명 과제를 이행하거나 혁명을 심화시킨다기 보다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5-16 군사 정변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정리된다. 또 5·16 군사 정변도 질서 회복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민주당 정권의 근대화 과제를 이어받은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넷째, 민주당 정권의 본질은 이승만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반공·친미 집단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의 뿌리였던 한민당이 야당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승만과 권력 배분 문제였는지 정치적 지향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역시 크게 보아 분단 체제의 수혜자들이었고, 4·19 혁명을 통해 어부지리로 권력을 습득하였을 뿐이었다. 4·19 혁명 이후 진보적 학생들과 혁신 세력은 한국 사회의 모순이 정권의 교체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권은 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거나 탄압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정권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 분석> 2차 교과서는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4·19 의거와 민주당 정부’라는 소단원에서 2쪽에 걸쳐 소상하게 기술하고, 그 의의를 반독재 투쟁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그러나, 애국 시민과 학생들은 이러한 부정 선거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아니하였다. 3월 15일에 마산 시민들이 처음으로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 4000여 명이 국회 의사당 앞까지 데모하였으며, 19일에는 서울의 모든 학생과 시민이 총궐기하였다. … 민중의 울부짖음에 전디다 못한 이승만은 26일에 하야하고 말았다. 4·19 의거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권이 독재 정권을 타도한 사건이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6쪽>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장군, 혁명군, 참신한 정치’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검인정 교과서라 할 지라도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정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국무 총리의 지명 문제로 갈라져 정계는 다시

혼란하여지고, 부정 부패는 여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괴의 선동과 침투 공작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각종 데모가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데모대가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기까지에 이르렀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7쪽>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박정희(朴正熙) 장군이 지도하는 혁명군이 서울에 들어와, ... 반공 태세의 강화, 폭력배의 일소, 밀수품의 단속, 부정 선거 원흉(元兇)과 부정 축재자 처단,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 등 실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참신한 정치를 실시하였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7쪽>

위에서 본 <2차 교과서, 광명>은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 무능을 주로 서술하였지만, 혁신 세력의 움직임을 서술한 다음의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동일하였다.

여러 가지 불만이 과격한 방법으로 나타났고, 마침내 학생들은 남북 통일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순진한 마음으로 충분한 이론적 준비와 하등의 전략 전술도 없이 남북 학생 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자유가 풀리자 도리어 정치·사회면에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와서 정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2차 고등학교, 동아, 246쪽>

3차 교과서에서도 2차 교과서의 서술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3차 교과서는 국사 교육의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국정 교과서로 발행되었으나, 4·19 혁명 부분은 오히려 2차 교과서보다 소략해져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와 4·19 혁명을 묶어서 한쪽도 채 안 되는 분량으로 다음과 같이 무미건조하게 처리하고 있다.

휴전이 성립한 후 대한 민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한미 간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황폐한 국토와 파괴된 산업 시설의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무렵, 내부적으로 정치적 위기가 싹트고 있었는데, 이미 전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2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정치 파동을 일으켜 국회를 탄압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관권을 동원하여 승리하고 이승만은 재선되었다. 그 후, 자유당은 다시 이승만이 종신 대통령을 지내게 하기 위한 변칙 헌법을 만들고, 3선되었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을 결성하여 호헌 투쟁(護憲鬪爭)을 벌였으나, 자유당은 마침내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려고 부정 선거를 감행하였다(1960). 그러나, 독재와 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4월 의거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6쪽>

반면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술은 4·19 혁명보다 분량이 2배 가까이 되고 그 내용도 상세해졌다. 그러나 '5월 혁명'이라는 소항목에서 처리함으로써 5·16 군사 정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될 뿐이었다.

... 이와 같이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안으로의 사회 혼란만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 위협을 증대시키는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 민족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7-298쪽>

4차 교과서에서는 4·19 혁명이 더욱 축소되었다. 민주당 정권 역시 '5월 혁명'이라는 소항목에서 취급하였는데, 3차 교과서와 다른 점은 민주당 정권의 무능력에 대한 서술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1960년 3월의 선거에서는 자유당은 부정 선거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려 기도하였다. 이처럼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일당의 정권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함부로 어기는 처사와, 독재와 부정 부패, 부정 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4월 의거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4차 고등학교 국사(하), 169쪽>

더욱이, 일부의 분별 없는 정치 세력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가지 각색의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를 계속하였다. 심지어 어떤 시위대는 국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매일처럼 시위를 함으로써 사회 혼란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 혼란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오판의 기회를 주는 중대 시국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1961). <4차 고등학교 국사(하), 170~171쪽>

5차 교과서에서는 4·19 혁명을 독립된 소항목으로 처리하면서 서술 분량을 늘리고, '4·19 의거', '하야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사진 자료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또 이승만 정권, 민주당 정권(장면 내각) 대신에 제1 공화국, 제2 공화국을 사용하고, 5월 혁명을 5·16 군사 혁명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나, 4·19 혁명은 여전히 4월 의거라고 하여 그 성격 규정은 이전 교과서와 다르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는 이전 교과서에 비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점이 두드러진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제엄령을 선포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으나, 학생,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이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81쪽>

제2 공화국은 4·19 의거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무질서를 안정시켜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일부의 정치 세력이 자유를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시위가 자주 일어났다. 이렇게 시위가 지속됨으로써 사회 혼란이 심각해졌으나, 민주당의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

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81-182쪽>

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권 9개월 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1961). <5차 고등학교 국사(하), 182쪽>

6차 교과서부터는 현대사 분야 용어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4·19 혁명', '5·16 군사 정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4·19 혁명에 대한 서술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 혁명으로 한정시켰고, 혁신 세력의 민주화 운동도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또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는 본질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다만, 정치적 갈등으로 국력을 신장시키고 평화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4·19 혁명을 일으켰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03쪽>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주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04쪽>

4·19 혁명 후의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자제할 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과도한 욕구 분출로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면 내각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하), 204쪽>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4·19 혁명 서술은 교과서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종래의 근대화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두산」은 3·15 부정 선거에 대해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는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 선거로 큰 오점을 남겼다. <두산, 287쪽>

라고 하여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또 그 아래에 ‘3·15 부정 선거 관련자들의 재판’이라는 사진을 배치한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다. 본문을 읽으면서 사진을 보면 마치 부정 선거 관련자들이 나중에 엄중한 처벌을 받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당시의 실상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마산 의거에서 이승만 하야에 이르는 과정은 본문 1쪽과 탐구 활동 1쪽, 읽기 자료 1쪽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이승만 정권의 색깔 공세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 즉 색깔 공세의 주체도 자유당이고, 문맥상 공산주의자들의 사주가 있었던 것(?) 같지만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읽히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김주열의 참혹한 시체를 목격한 마산 시민과 언론 보도를 통해 진상을 알게 된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위의 배후에 개입되어 있다는 자유당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게 되었고, 3·15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두산, 288쪽>

경찰 발포로 인한 사망자의 규모는 유일하게 「두산」에서만 밝히고 있었으나,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200여 명, 부상자가 6,000여 명에 이르는 데 비해 교과서 서술은 100여 명 정도로 기술한 점이나, 4·19 혁명 과정에서 미국과

군부의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4·19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도 「두산」은 근대화론의 연장선에서 반독재 민주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서울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산·광주 등지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두산, 288쪽>

4·19 혁명은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으로,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두산, 288쪽>

「중앙」은 4·19 혁명 부분에서 읽기 자료와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3쪽을 배정하였으며, 전체적인 서술도 큰 무리가 없었다. 특히 첫머리에 1950년대의 경제 상황을 서술한 점도 다른 교과서와 구별되는 장점이었다. 반면 「두산」이 3·15 부정 선거 유탄 운동을 2·28 시위에서부터 언급한 데 비해, 「중앙」은 ‘투표 당일부터’라는 시간적 제한을 둬으로써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독재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유당 정권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중앙, 297쪽>

투표 당일부터 경상 남도 마산에서는 3·15 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전개하였고, 경찰의 무력 진압과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위가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종한 좌익 폭동이라고 발표하여 마산 시민들이 반감을 고조시켰다. <중앙, 297쪽>

4·19 혁명의 성격 부분에서는 「두산」과 마찬가지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하였지만, ‘민주·자주·통일 운동’을 언급한 것은 변혁 운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마침내 학생과 시민들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새 역사를 열었다. 4.19 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민주 역량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이후 학생과 시민들은 더욱 활기차게 민주·자주·통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이루었다. <중앙, 299쪽>

「금성」은 앞의 두 교과서에 비해 읽기 자료와 탐구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단원의 맨 뒤에 2쪽에 걸쳐 ‘민주 신문’이라는 가상의 역사 신문을 배치하는 파격을 보여주었으며, 민주당을 보수 정치인으로 규정할 점도 주목되었다.

이승만과 갈리선 보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만들어 자유당과 대립하였다. 민주당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와 장면을 후보로 내세워 이승만 정권에 강력히 도전하였다. <금성, 277쪽>

그러나 원래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당 정부는 당내 파벌 사이의 권력 다툼에만 열중한 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4.19 혁명의 이념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금성, 280쪽>

즉, 민주당 정권 역시 친미반공주의와 독점 재벌에 기반한 보수 세력으로서 이승만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교과서들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4.19 혁명의 완결로 보는 것과 큰 차이점이다. 한편 「금성」은 미국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정권 교체 이상의 변혁을 바라지 않았던 점, 일본과의 국교 재개 문제를 놓고 이승만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점, 군부는 철저하게 미국의 지휘권 아래에 있었던 점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변화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 당황한 이승만은 부정 선거를 인정하여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자유당과 관계를 끊겠다는 수습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부정 선거 무효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퇴진 자체를 요구하였다. 자신을 지원하던 미국까지도 등을 돌리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내어 놓고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금성, 278쪽>

4·19 혁명에 대한 「금성」의 서술 기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민중 운동 특히 통일 운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4·19 혁명은 민족 해방 운동과 민족 자주 국가 수립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의 성립도 다른 교과서들이 별도로 서술한 것과는 달리, ‘타오른 민주주의의 불꽃, 4·19 혁명’이라는 소항목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4·19 혁명의 성격도 미완의 혁명 혹은 영구 혁명의 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었다. 학생과 진보적 사회 운동 세력은 통일 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자주, 민주, 평화의 원칙 아래 남북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들이 내걸었던 것은 남북 사이의 평화 통일이었다.

그러나 원래 보수적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당 정부는 당내 파벌 사이의 권력 다툼에만 열중한 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4·19 혁명의 이념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부정 선거 책임자나 부정 축재자의 처벌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각종 법을 만들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나 사회 운동을 억눌렀다. 특히, 남북 협상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사회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꺾이고 말았으며, 4·19 혁명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금성, 280쪽>

「대한」은 4·19 혁명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파행상을 언급하지 않은 점, 이승만 정권 붕괴 부분에서 미국의 대한 정책이 서술되지 않은 점, 마산 의거 이전에 이미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서술하지 않은 점 등을 아쉽게 생각할 수 있다. 4·19 혁명의 성격에 관해 ‘통일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도움글에서는 「금성」의 서술 기조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우며 독재를 강화하였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 통일 운동이 활발해졌다. 또, 독재 정권이 무너짐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 운동이 활발해지는 등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대한, 270쪽>

라는 본문과 바로 아래의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혁명 4·19’라는 읽기 자료를 종합해 보면, 교과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대한」은 이 부분을 학생들의 탐구 활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료 6에서 보듯이, 4·19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4·19 혁명의 한계성이 무엇인지 이후의 정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조사해 보자’라는 열린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4·19 혁명이 지향하는 목표 … 첫째,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참된 민주주의 … 둘째, 국부를 총체적으로 증진시키고 건전한 중산 계급을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대적 경제 체제의 발전을 도모” - 『4월 혁명의 사관-반독재 민주 혁명이다, 민석홍』 - <대한, 270쪽>

“앞으로 이 나라에 있게 될 모든 형태의 정의로운 민족 운동, 사회 운동 및 민주 통일 운동은 다 같이 4·19를 그들의 고향으로 한다. 따라서 4·19 혁명은 그 자체로서 ‘영구 혁명’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다.” - 4·19 혁명 10주년 기념사, 서울대 학생회 - <대한, 270쪽>

“4·19가 있었기에 우리는 유신을 거부해야 할 당위성을 찾았고, 4·19가 있었기에 우리는 필승의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 … 4·19는 결코 5·16에 의해 말살된 것이 아니다.” - 4·19 혁명 20주년 기념사, 김대중 - <대한, 270쪽>

민주당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앞의 ‘분석 기준’에서 언급한 것처럼 4·19 혁명의 성격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산」은 7·29 총선이 특히 공명 정대한 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당 정권의 성립으로 4·19 혁명은 완결되었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허정 과도 정부 하에서 국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6월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7·29 총선이 실시되었고,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이 총선거는 공명 정대하게 실시된 민주주의 선거로 손꼽히고 있다. <두산, 291쪽>

그러다 보니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민족 민주 운동에 대해서도 마치 민주당 정권의 시혜에 의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통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민족 민주 세력이 기대했던 7·29 총선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는 근본적으로 분단 체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은 본질적으로 반공·친미에 기반한 이승만 정권과 동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거나, 통일 운동을 수렴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두산」은 단지 민주당 정권이 안정 의식을 확보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정부의 유체가 풀리면서 각계 각층의 요구 사항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리하여 각종 단체와 학생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학원 문제나 노동 문제 등이 표출되었다. 이 무렵 대학생들이 통일 운동에 나서면서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등이 대두되었고, 혁신 세력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두산, 291쪽>

그러나 장면 내각은 시작부터 안정되지 못하였다. 7·29 총선 과정에서도 있었던 신·구파의 파쟁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마침내 구파는 분당하여 따로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이에 장면 내각은 원내 안정 의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두산, 291쪽>

「두산」은 또 민주당 정권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제5대 민의원 개원식(1960. 8. 8)’, ‘국무 총리에 인준된 장면(1960. 8. 19)’이라는 사진 자료만 두 컷 배치하였는데, 이 역시 민주당 정권에 대한 편파적인 배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도 「두산」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을 별도의 소항목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서술 기조 역시 민주당 정권을 중심에 놓고 있다.

장면 내각은 국정의 방향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정 과제로 독재 정권의 유산 청산, 민주주의의 실현, 경제 개건과 경제 개발, 남북 관계의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언론이 활성화되어 6.25 전쟁이래 침체되었던 노동 운동, 교원 노조 운동, 청년·학생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혁신 세력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위축되었던 통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학생들은 민족 통일 연맹을 결성하고 남북 간의 학술 토론회나 체육 대회, 서신 왕래, 인사 교류 및 기술 협정 등을 주장하였다. 혁신계 정치인들도 민족 자주 통일 협의회를 만들어 학생들과 연계하면서 통일 운동을 추진하였다. <중앙, 300쪽>

민주당 정권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통일 운동, 사회 민주화 운동은 민주당 정권의 성격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통일 운동의 경우에는 이승만의 하야와 민주당 정권의 성립으로 4.19 혁명이 완수되었다고 평가할 경우 시기상조이거나 정치적 안정을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행위

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계와 대학생들의 통일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점차 떨어졌다. <두산, 291쪽>

라고 표현한 「두산」이 대표적이다. 즉 통일 논의는 새 정부의 안정과 경제 건설을 이루하는 데 부담이 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교과서들도 역시 통일 운동을 소개하였으나, 민족민주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거나 통일 운동이 당시 사회에 제기한 정당한 문제 의식을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사회 민주화 운동 역시 모든 교과서들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서술 분량은 빈약한 편이었으며, 「중앙」의 경우에는

장면 내각은 극정의 방향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언론이 활성화되어 6.25 전쟁 이래 침체되었던 노동 운동, 교원 노조 운동, 청년·학생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혁신 세력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 300쪽>

라고 하여 사회 민주화 운동이 상당 부분 정부의 민주화 조치에 힘입은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었다.

4.19 혁명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현실적인 영향력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승만이 해야 하게 된 것도 가장 든든한 후원 세력이었던 미국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며,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운동에 군부가 중립을 지켰던 것도 역시 미국의 의지였다. 이렇듯 미국의 영향력은 좋건 싫건 간에 부정할 수 없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좁게는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4.19 혁명에 대해서도 교과서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승만 정부의 부정 부패와 독재 → 학생·시민들의 의거와 이승만의 하야 →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사

회 혼란 → 5·16 군사 쿠데타의 불가피성'이라는 논리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보수 학계의 근대화론적 시각은 오늘날 학계에서 대부분 극복되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 박정희 정권 시기

1961~1979년 박정희 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정희 정권 자체에 대한 서술을 분석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의 성격은 한 마디로 권위적 통치와 경제개발이며 이 시기의 민주화 운동은 그것이 가져온 억압과 각종 문제 등 시대적 모순을 극복,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분석 항목들은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여, 교과서 내용의 주요 주제들을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실제 분석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근현대사』교과서들의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6차 이전 교과서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도록 하겠다. 교과서의 분류사 체제상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된 경제나 사회 문화의 관련 내용들은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관련된 주제 분석과정에서 발췌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분석 항목>

-
- 1차 ~ 2차 (1963. 12)
 - 3차 (1963. 12~ 1972. 9)
 - 4차 ! 회담과 베트남 파병
 - 5차 ! 회담 반대 투쟁
 - 6차 ! 개헌 반대 투쟁
 - 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2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3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4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5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6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7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8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1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2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3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4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5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6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7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8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99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100차 1차 ! 개헌 반대 투쟁
-

▶ 5·16 군사 쿠데타와 준정(1961. 5. 16~1963. 12)

<분석 기준> 첫째, 5·16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한 사실이 서술되어야 한다. 쿠데타의 배경은 쿠데타의 역사적 평가와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므로, 4월 혁명과 장면 정부에 대한 시각을 고려하여 서술되어야 한다.

둘째, 군정의 통치방식과 민정이양의 허구성이 분명히 서술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의 불법적 행태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던 이면에 작용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야 한다.

셋째, 군사 쿠데타가 우리의 민주정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되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도 관련지어 언급해야 한다.

<내용 분석> 현행 7차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5·16 군사 쿠데타의 원인과 배경, 군정 실시 과정과 내용, 민정 이양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대한」은 쿠데타를 알리는 중앙 방송국 아나운서의 방송내용을 본문에 인용하면서 당일의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가운데, 군 내부의 부정부패와 정군 운동의 좌절, 장면 내각의 군대감축결정 등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중앙」은 한국전쟁으로 군부가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여 정치에 관여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을 배경으로 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쿠데타 발생에 관한 각 교과서들의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을 옮긴 것이다.

장면 민주당 내각이 4·19혁명 이후에 나타난 사회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자 일부 군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정권 장악을 모색...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정군운동에 나섰으며 이 정군운동이 뜻대로 진전되지 못하자 결국에는 군사정변을...이로써 장면 내각은 집권한지 9개월만에 무너지고 말았으며 민주주의의 꽃도 시들어졌다. <두산, 292쪽>

...박정희 소장과 일부 영관급 장교들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급진적인 통일 운동, 그리고 장면 내각의 무능력 등을 구실로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장악한 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중앙, 302쪽>

... 중앙 방송국의 아나운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

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군사정변이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정군 운동이 좌절되고 승진마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장면 내각이 군대 감축을 결정하자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며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한, 272쪽>

「금성」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배경설명 없이 간단히 서술하고 군정의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나머지 3종의 교과서들은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을 대체로 군부 안의 모순과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에서 찾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정권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부분은 쿠데타의 역사적 평가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서술이 어떤 느낌으로 읽힐 것인가 하는 것까지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두산」의 경우는 5·16 쿠데타의 배경으로 장면 내각의 정치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꽃이 시들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쿠데타가 시대에 역행하는 사건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중앙」은 ‘...구실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쿠데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당시 사회 상황이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한」은 현실감 있는 분위기를 살리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성공을 거두는’ 등의 표현을 쓰고, 혁명공약 가운데 쿠데타 세력이 명분으로 내세운 항목을 바로 이어 서술함으로써 쿠데타와 군정을 긍정적인 상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은 ‘혁명공약’의 항목에 숨겨진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서들이 이른바 혁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대한」은 위에서 지적한 바 외에 따로 서술이나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며, 「중앙」은 공약 내용을 단순자료로 제시하였고, 「두산」은 혁명공약을 활용하여 군정의 기본시책과 정책들을 추론하는 탐구활동을 제시하였다. 「금성」

은 쿠데타 당일의 방송극 점령과 아나운서 발표라는 상황 속에서 혁명공약을 자료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비록 동일한 자료라 하더라도 제시되는 맥락에 따라 학습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혁명 공약을 제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구 그대로의 표면적 의미로 이해하여 정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자료로 제시한 사진은 군사 쿠데타에 대한 학생들의 상(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두 사진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상(象)을 제시하는가를 비교해 보자. 쿠데타 주도 세력 사진으로 제시할 경우 ‘누가 주도했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정확히 남길 수 있을 것이지만 ‘중앙청을 향해 행진하는 군부대’의 사진은 쿠데타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시각적 전달에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군정의 시책/정책이나 성격에 관한 서술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농어촌 부채를 줄여주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군사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사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국회와 정당, 사회 단체를 해산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도 없애고, 언론인을 구속하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군사 정부는 정부 형태를 민정으로 바꾸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밀리에 민주 공화당을 만들어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그 아래 모았다. <금성, 285쪽>

「금성」은 전체적으로 세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고 압축적인 서술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에 대하여 가장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적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군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위의 인용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드러나듯이 경제개발과 사회안정 표방과 군정의 관련성을 서술하고 민정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기만성과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서술은 구체적인 사실 지식을 전달받기보다는 군사 쿠데타와 군정에 대한 역사적인 상(象)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 정변의 주체 세력은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한 후 이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는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박정희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 중앙 정보부는 핵심 권력 기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 혁명 공약 1호로 내세웠던 반공 태세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민생 안정과 부패 일소에도 힘썼다. 정치면에서는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3·15 부정 선거의 당사자들을 처단하였으며 혁신 세력 및 그 관련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제면에서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단행하고 화폐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군사 정부는 민정 이양에 대비하여 정치 활동 재개 이전에 민주 공화당을 창설하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을 만들어 이를 국민 투표에 의하여 확정 시켰다. <두산, 292쪽>

「두산」의 경우는 군정 당시의 시책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저자

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나 매우 긍정적인 서술로 읽힌다- 특히 '혁신세력 및 그 관련자들을 검거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의미조차 잘 통하지 않으며 '정치활동 재개 이전'이라는 것이 누구의 정치활동을 지시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민정 이양에 관한 부분도 건조한 사실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창설', '확정' 등 긍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군인들은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 구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용공 분자의 색출을 내세워 진보적 지식인과 노조 및 학생 간부들을 혁명 재판에 회부하였다. 또 폭력배를 체포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한편, 민생 안정을 목표로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부정 축재 처리법 등을 제정하고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정하였으며, 민주 공화당을 조직하였다... <중앙, 302쪽>

「중앙」의 경우는 우선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회의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문맥 그대로 읽으면 중앙정보부도 최고 통치기구가 된다.-물론 핵심적인 권력기구였지만-「중앙」의 특징 가운데 한가지는 쿠데타와 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가상 역사 재판 형식의 탐구활동을 구성한 점이다. 「두산」은 군정 시기 정치적 탄압에 대한 내용은 잘 서술되어 있는 편이나 경제시책과 민정이양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서술로 처리하였다.

... 군사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단원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비밀리에 민주 공화당 창당을 추진하였다. ... 박정희는 야당 후보 윤보선을 간신히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군복을 벗은 군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갔을까? <대한, 272쪽>

「대한」의 본문에는 군정을 대체로 비판하는 듯한 서술로 되어 있다. ‘간신히’, ‘비밀리에’ 등의 표현은 군정의 추진에 무엇인가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의 부분은 그에 대한 자료로 경제 제일주의 정책, 한일협정 체결, 베트남 파병을 제시하였다. 그 자료의 내용은 다음의 해당 항목에서 다루겠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한 자료 내용을 읽은 학생들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 노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5.16 군사 쿠데타와 군정에 대한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서술은, 6차 이전의 교과서들에 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어떠한 상(象)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군정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시책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군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는 등 당시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상’을 보여주는 데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아울러 쿠데타 및 군정에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 등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면 내각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 혼란과 부정부패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도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6차 이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쿠데타와 군정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는 즉각 헌정을 중단시켰으며, 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정부는 혁명 공약에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을 내걸었으며, 정치 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어서, 군사정부는 새로운 정당으로 공화당을 창당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여기에 집결시켰다. 군사정부는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을 개정, 정비하고, 민정을 복귀시키기로 약속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 205쪽>

한 눈에 보아도 7차 근·현대사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전체적으로 쿠데타나 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건조한 사실들을 나열하여 그것이 실제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로서는 짐작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 더욱이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을 개정 준비’하였다는 서술은 그 자체를 매우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게 하는 문제점에 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을 고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전제가 깔려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교과서 내용 서술에서는 학생들의 역사관, 역사의식이 서술시각이나 체제, 내용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은 잠재된 의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의 5차 교과서는 6차 교과서와 거의 같은 서술로 볼 수 있으나 ‘혁명’이라는 표현에서 증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5.16 군사 혁명 후,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천명하고, 경제재건과 행정 능력 및 정치 안정을 강조하면서 정치 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2쪽>

혁명군은 즉각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6개 항목의 혁명공약을 내걸고... 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승공태세를 정비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는 데 힘썼다. 한편, 폭력배의 소탕, 밀수품의 단절, 농어촌 고리채의 정리, 부실 기업 및 사학의 정비 등 사회모순과 구악을 과감히 제거하였다...국가 재건 회의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던 혁명 정부는, 군정 2년 후 민정 이양에 착수하였다. <4차 고등학교 국사, 171쪽>

4차 교과서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도한 세력이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싶은 입장’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 전의 상황을 극도의 혼란을 서술하여

그 필연성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3차 이전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관련 내용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쿠데타와 군정을 미화하고 있으나 참고를 위하여 옮긴다.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립경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혁명공약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 나갔다. (혁명공약을 상자글로 제시, 국가재건회의 활동상을 자세히 소개) <3차 고등학교 국사, 297쪽>

이 혁명은 박정희 장군의 영도아래 추진되었으며 전격적으로 무혈혁명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치·사회의 혼란을 수습하여 밝은 민주정치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2차 고등학교 국사, 동아, 246-247쪽>

박정희 장군이 지도하는 혁명군이 서울에 들어와, 혁명공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을 장악한 후... 실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참신한 정치를 실시하였다. <2차 고등학교 국사, 광명, 247쪽>

이상과 같이 쿠데타와 군정에 관한 6차 이전의 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제를 두고 서술되었으며 특히 3차 이전의 교과서는 거의 '미화'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 교과서의 '검정체제 도입'이 가져온 변화를 분석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 제3 공화국 (1963. 12 ~ 1972. 9)

<분석 기준> 첫째, 허구적 민정 이양 과정을 거쳐 성립된 이른바 3공화국의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한 3선 개헌과 같은 조치들의 그 반민주성을 서술해야 한다.

둘째, 안보 이데올로기와 경제개발을 이용한 박정희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방식과 부패상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와 언론 통제 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셋째, 경제개발 계획의 구호아래 추진된 선성장·후분배라는 개발 독재의 내용과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서술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4월 혁명으로 마련되었던 민주화의 조건과 흐름이 억압되고 단절되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되어야 한다.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그 체제가 분류사로 되어 있어 '경제'나 '사회'에 관한 내용이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되어 있고 여전히 정치사 위주의 내용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박정권 전반기의 사회상을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 계획이 부딪힌 한계와 부작용,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억압과 비민주적 양상들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하여, 다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과 연계지점을 마련해야 한다.

<내용 분석> 「금성」은 '경제 개발과 반공을 명분으로'라는 제목을 배치하여 이어질 서술이 취할 방향을 분명히 알려준다. 「두산」과 「중앙」의 '박정희 정부의 수립', '박정희 정부의 출범'은 표면상 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개발과 반공을 명분으로...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과 반공을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 이어 1969년에는 경제 발전의 지속과 국가 안정을 구실로 학생과 시민, 야당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금성, 286쪽>

박정희 정부의 성립

… 이에 군부 세력을 기반으로 한 박정희 정부가 성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표방하고 군사 정권 때부터 실시하였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관권 개입과 선심 공약이 난무한 가운데 민주 공화당이 압승하여 개헌선을 확보하였다. <두산, 293-294쪽>

박정희 정부의 출범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 안보 등을 주요 국정 지표로 삼고 경제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는 집권 연장을 위하여 3선 개헌을 강행하였다. <중앙, 303쪽>

우선 「금성」을 제외한 교과서들의 기본적인 서술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분석 기준에서 제시한 제3 공화국 체제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서술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그 결과로 재선에 성공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항목을 독립시켜 분석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3선 개헌에 관한 부분에서는 교과서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비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이다.

1967년의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바꾸려고 하였다. 언젠가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고 공약을 잊어버린 채,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 3선 개헌안은 야당과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여당은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대한, 273쪽>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안기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각종 부정 부패 사인이나 언론 파동 등도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대단원을 달리하여 사

회와 문화를 다루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5·16군사 정변 후 군사 정부는 유명무실한 정기 간행물을 정리하고 사
이비 언론기관의 난립도 단속하였다. 이어 박정희 정부는 신문 통신 등록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여 언론 기관의 정비를 강화하였다.
(1964) <두산, 347쪽>

1960년대 이후에는 텔레비전 방송이 점차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국영 방송은 한국 방송공사로 개칭되면서 본격적인 방송의 시
대를 열어갔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정부의 압제에 항거하는 언론인들
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1971년 4월에 동아일보 기자 30여명은 언
론자유수호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다른 신문과 방송 및 통신사 기
자들도...권력의 압력으로 동아일보에는 광고가 끊기는 탄압이 한동안 계
속되었으며 언론 자유를 위해 항거한 기자들이 해직되기도 하였다. <두
산, 348쪽>

「두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6 군사 쿠데타 당시의 언론 통제를
마치 ‘구습을 일소’하는 듯한 맥락에서 서술하다가 1970년대 들어서서 언
론자유 수호 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어색하다. 어떻게 언론을 통제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탄압에 대
한 투쟁을 제시하면 시대상에 대한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성」과 「중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언론을 통폐합하고 비판적 언론인을 구
속하거나 해산시키는 등 언론탄압에 나서기도 하였다. <금성, 345쪽>

1961년에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언론 통폐합을 단
행하고 KBS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하여 집권의 정당성과 반공,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중앙, 368쪽>

한편 이 시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도 눈에 띈다.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교원노조를 불법화하고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교육 자치체를 폐지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부는 교육을 경제 발전을 위한 제2경제로 표현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반포하여 민족 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중앙, 364쪽>

1968년에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민족중흥이 시대적 사명이 라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교육 이징표를 제시하였다. <두산, 346쪽>

「중앙」은 5·16 군사 쿠데타가 4월 혁명으로 조성된 다양한 민주화의 분위기를 단절시켰다는 맥락에서 교원노조를 다루고 있지만 ‘국민교육헌장’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두산」도 마찬가지이다.

6차 이전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1960년대 관련 사항이 5·16 군사 쿠데타와 균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장의 치적을 중심으로 간단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인용할 부분이 없다.

1960년대 이른바 제3 공화국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비록 언론 탄압에 관한 내용이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되어 있지만 내용의 적절성이나 시각면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양상들에 대한 서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동백림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에서 보이는 ‘반공’을 앞세운 반대세력 탄압과 정권 유지 등을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네 번째 분석 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측면들에 대한 서술이 보완되어야 하며,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된 내용과 일관된 서술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 한일 회담과 베트남 파병

<분석 기준> 첫째, 한일 회담이 박 정권에 들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는 점과 장기간에 걸친 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한 까닭은 서술해야 한다. 그리고 박정권 시기에 외자의존적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 비준되었고 베트남 파병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의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196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해석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일본 자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이었다. 이러한 구도 하에 1965년 한·일 협정이 타결되고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졌으며 대일·대미 증속이 심화되었다.

셋째, 베트남 파병을 냉전적 시각을 넘어서서, 정권 유지와 미국의 전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악영향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파병이 초래하는 결과와 역사적 의미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파병이 미국 측이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차관 공여를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미국이 자국에서 일고 있던 반전 여론을 무마시키고, 미군 봉급의 1/3 수준인 한국군을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전비의 절감을 꾀하려 한 점, 베트남 특수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외화 획득의 원천으로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희생과 고엽제 피해를 가져왔고 비동맹 외교에서의 고립을 초래하였다는 점들이 균형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셋째, 한일 회담과 베트남 파병이 그 추진 과정에서 민의의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서술해야 한다. 특히 한일회담의 경우, 이전의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던 방식과 비밀리에 진행시킨 박정희 정권의 방식을 대비시키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분석> 이 항목에 대한 서술 내용은 교과서마다 차이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분석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히 서술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한일 회담에서 국민들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만 치중하였다. ... 정부는 비상 계엄과 휴교령으로 반대 운동을 억눌렀다. 그리고 이듬해 대학과 고등학교의 문을 닫고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한 가운데 한일 협정을 비준하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6.25전쟁 당시 우방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대해 보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가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들여오고 파병된 군인들의 송금과 군수품 수출, 베트남 건설 사업의 참여로 어느 정도 외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에게 끼친 피해와 파병된 한국군의 희생 또한 적지 않았다. <금성, 286쪽>

이 교과서의 서술은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참전이 어떤 명분으로 채색되더라도 결국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제3 공화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음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서의 서술이다.

이어서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 관심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와 일본의 사죄 여부에 집중되었다. ... 결국 한일 협정은 1965년 6월에 체결되었고, 이로써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미흡한 가운데 타결되었다. 한편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비둘기 부대를 보내어 베트남을 지원하였으나 곧, 전투 부대인 맹호, 청룡, 백마 부대 등을 증파하였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두산, 294쪽>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국민과 학생들은 일제 강점

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없는 한일 외교를 굴욕 외교로 규정짓고 반대하였다. ...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서 공산 세력을 격퇴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 부대를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 반대에 부딪혔으나 파병의 대가로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제공을 미국으로부터 약속 받았다. 베트남 파병은 많은 장병의 희생을 가져왔으나 우리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앙, 303쪽>

「두산」, 「중앙」은 특히 베트남 파병 문제에 있어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요청과 국제 사회에 대한 보은이라는 명분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공산 세력의 격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한다. 위의 두 예문에 나타난 베트남 파병 서술 내용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파병의 대가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과대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희생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한편 자료 제시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은 박정희 정권의 합리화 정책 차원에서 경제 제일주의 정책과 한일 협정 체결, 베트남 파병에 관한 자료를 실고 있다. 다음은 그 자료들의 일부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수교를 요구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군대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그리고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재일 동포의 정당한 법적 지위 및 대우 등의 문제는 소홀히 다룬 채, ...

미국의 참전요청을 받은 박정희 정부는 ... 파병의 대가로 우리 나라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를 제공하고, 베트남 주둔 한국군에게 필요한 보급 물자와 장비를 한국에서 구입하며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 강화와 차관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대한, 273쪽 보조단>

이 항목에 대한 부속물로 눈에 띄는 것은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과 '브라운 각서'를 자료로 삼아 제시한 「금성」의 탐구활동이다. 두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대일 관계에 미친 영향,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에서 생각해 볼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성」교과서에서 ‘라이따이한과 고엽제’에 관한 자료를 실은 것은 베트남 파병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베트남 파병 부문에 삽입된 사진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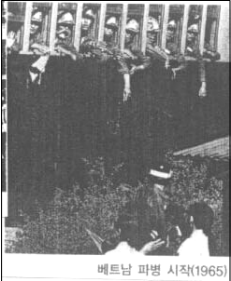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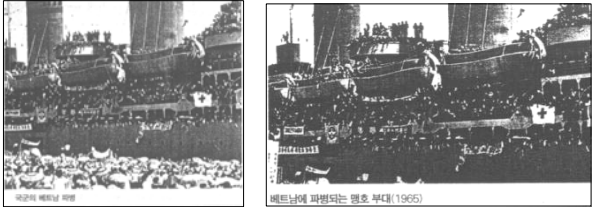
 <p>베트남 파병 시작(1965)</p> <p><「 」 297 ></p>	 <p>미군의 베트남 파병</p> <p>베트남에 파병되는 월호 부대(1965)</p> <p><「 」 294 ></p> <p><「 」 273 ></p>
<p>베트남 참전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는 학생 활동에 자료로 제시되어 있음</p>	<p>사진 설명 없음</p>

사진 자료는 주로 본문 서술 내용을 보완하거나, 문자 서술로 전달하기 어려운 이미지나 느낌을 통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象)’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차에 실려 떠나는 군인’들과 ‘큰 배를 타고 축제 분위기로 떠나는 군인’들 사진은 매우 상반된 의미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문 서술에 두는 중요성만큼 관련 사진자료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의 고민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한일회담을 미국의 전략적 차원과 관련지은 서술이나, 그 진행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베트남 파병의 경우 아직도 냉전적 시각으로 서술되었고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의 서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에서는 한일회담이 진행될 당시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그 안에서 박정희 정권이 얻어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누구를 위한 파병이었는가?’라는 좀더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엄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6차 이전의 국사 교과서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 외교 반대에 부딪혀 이른바 6·3시위를 유발시켰다.(1964) <6차 고등학교 국사, 206쪽>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대학생들을 억압하였다.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1965) 한국, 미국, 일본 관계에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룩하였고, 공산주의 침략을 받고 있던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군을 파병하였다.(1965) <6차 고등학교 국사, 209쪽>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자유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을 파병하였고(1965), 이어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5쪽>

공산군과 싸우는 자유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함께 자유 수호를 위해 진력하여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도 하였다. <4차 고등학교 국사, 173쪽>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먼저 자유당 정부 이래 현안이던 한·일 문제를 타결하여 우호 수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4년에는 공산주의화되어 가는 자유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 더불어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3차 고등학교 국사, 298-299쪽>

적극적 외교를 펴 자유당 정부 이래 현안이던 한·일문제를 타결하였으

며... 1964년에 공산주의 침략에 허덕이던 자유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 더불어 자유 수호를 위한 빛나는 전과를 올려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왔다. <2차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230-231쪽>

오랫동안 끌어오던 한일 국교를 타개하여 경제·외교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였으며... 한편, 공산 침략을 받고 있는 베트남에 1964년부터 현재까지 총 4만 7천의 병력을 파견, 침략 격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차 고등학교 국사, 동아, 247쪽>

6차 교과서에는 한일 협정에 반대한 6·3항쟁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전의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한일협정 체결도 '현안 문제의 타결', '협력 체제의 구축'이라는 정부 홍보성 서술만 되어 있을 뿐 외자도입이라는 정권의 필요나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라는 국제 정치적 측면의 서술은 전혀 끼어 들 여지가 없다. 특히 '자유당 정부이래 현안이던 한일문제'라는 표현은 한일회담의 문제점을 교묘히 가리면서 박정희 정권의 치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도 냉전적 논리에 의한 서술로 채워져 있다.

▶ 한일 회담 반대 투쟁

<분석 기준> 첫째,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의 전개양상을 이끌고 참여한 주체, 정부의 협상 진행과정과 협상내용에 대하여 반대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굴욕적'이라고 단정한 회담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반정부적인 성격을 드러내었고, 6월 3일에 이르러 1만 여 명의 시위대가 광화문까지 진출하고 군사 쿠데타, 부정 부패, 정보 정치, 매판 독점 자본, 외세 의존 등 본질적인 문제 제기로 확대, 고조되어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이 본격화되자 투쟁의 양상이 회담 반대에서, 조인 반대 투쟁, 비준 저지 투쟁, 비준 무효화 투쟁

으로 변화하여 전개되었음을 서술해야 한다.

셋째, 6·3 시위로 절정에 이른 한·일 회담 반대 투쟁에 대한 정권의 무력 진압 양상을 서술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서울시 일원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진압하여 이른바 6·3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가운데 황급히 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다시 말해 교과서에서는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이 단순히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회담을 진행하는 정권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민주화 운동의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반대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조약을 체결한 정부 행태의 비민주성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내용 분석> 이 부분은 제3 공화국 정부의 한·일 회담 추진 과정과 함께 서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우선 해당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많은 학생과 시민, 언론들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였다. 학생들은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64년 6월에는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대적으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6·3시위). 정부는 비상계엄과 휴교령으로 반대 운동을 억눌렀다. <금성, 286쪽>

한·일 간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야당과 대학생들은 대일 굴욕 외교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 서울에서는 고등학생까지 반대시위에 가담하였으며,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시위가 확산되었다. 굴욕 회담 반대 시위는 6월 3일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박정희 정부 타도의 구호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 지방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를 6·3항쟁이라고 한다. <두산, 294쪽>

... 국민과 학생들은 일제 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없는 한·일 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짓고 반대하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가세하자(6·3 시위), 박정희 정부는 1964년 6월 3

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학생과 언론인을 체포하였다. <중앙, 303쪽>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성」과 「두산」은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이 정권을 부정하는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음을 제시하였지만 「중앙」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한편 자료의 형태로 한·일회담과 그 반대투쟁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는 「대한」은 6·3 시위의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을 받는 형식으로 배상 문제를 마무리짓고 한·일 협정을 맺으려 하였다. 이에 학생과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6·3 사태'로 불리는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서울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한, 273쪽>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주체를 학생과 시민 또는 국민이라는 다소간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체로 한·일 회담의 굴욕적 진행에 대한 반대 투쟁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 투쟁이 정권의 반민족적 성격에 대한 규탄으로 발전한 측면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의 분석기준에서 언급한 바, 한·일 협정 내용의 '굴욕적 측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나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이 굴욕으로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한 구체적 제시없이 '굴욕적'이라는 결론적이고 선언적인 서술만 있을 경우, 학생들은 당시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거나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절차적 민주화의 문제와 민족적 자존의 문제에 공감하기 어렵다.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의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담 반대투쟁이 조인반대 투쟁이나 비준반대 투쟁으로 변화한 양상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투쟁의 양상도 변화한다는 측면을 보여줄 때, 민주화 운

동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직면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3선 개헌 반대 투쟁

<분석 기준> 첫째, 3선 개헌을 추진한 공화당과 박 정권이 목표로 한 장기집권은 어떠한 명분과 미사여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비민주적 처사임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둘째, 3선 개헌 반대 투쟁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인 사실들로 제시해야 한다. 1968년 6월 12일 서울 법대생 5백 여 명이 '헌정 수호 성토 대회'를 개최한 이래 경북대에서 박정희 정권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황소 파시즘 화형식'을 거행한 사건을 비롯하여 1969년 12월까지 계속된 학생들의 개헌 반대 운동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독재를 연장하려는 기도에 대한 투쟁과 당시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야당·재야세력·학생들의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개헌을 계속 추진한 박 정권의 억압정책을 서술해야 한다.

<내용 분석> 다음은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3선 개헌 반대 투쟁 관련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다.

이어 1969년에는 경제 발전의 지속과 국가 안정을 구실로 학생과 시민, 야당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3선 개헌). <금성, 286쪽>

그동안 3선 개헌 논의는 야당과 재야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는 민주 공화당 안에서도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과 재야 세력 및 대학생들이 합세한 3선 개헌 반대 투쟁은 1969년 7월에 크게 확산되었다. 9월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쌓은 채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였고 ... 국회 제3 별관에서 변칙 통과시켰다. ... 국민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65%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서

을에서는 유권자의 40%가 투표에 불참하였고 투표자의 53%가 개헌안을 반대하였다. <두산, 296쪽>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는 집권 연장을 위하여 3선 개헌을 강행하였다. 즉, 박정희 정부는 야당, 재야 세력, 학생들의 반대를 탄압하면서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투표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중앙, 303쪽>

... 3선 개헌안은 야당과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여당은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대한, 273쪽>

모든 교과서들은 3선 개헌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교과서는 개헌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풀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두산」은 당시 국민투표의 결과를 제시하여 전체적인 국민정서가 3선 개헌에 반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선 개헌 반대 투쟁 자체의 양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고 관련 사진자료를 제시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앞으로는 본문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간단한 읽기 자료의 형태로 3선 개헌 반대 투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주장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 방식이 어떻게 독재와 비민주적 장기집권을 합리화하는데 악용되었는가 하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사회의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역량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지녀야 할 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민주화는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신 체제와 제4 공화국

<분석 기준> 첫째, 유신 체제 성립 배경으로 세계적인 냉전 체제의 약화와 동북아권의 긴장 완화를 언급해야 한다. 1970년대 냉전 완화 흐름 속에서 반공 냉전 체제에 바탕을 둔 박정희 정권은 위기에 처하였으며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민주 세력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강화된 독재 체제가 유신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과 인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예들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10월 유신'은 군부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대파의 정치 활동을 전면 봉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쿠데타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서술해야 한다

셋째, 유신 헌법의 공고, 국민 투표에 의한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른바 제4 공화국이 성립하는 과정을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헌정의 유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서술해야 한다.

넷째, 독재 체제의 강화 과정과 함께 유신 헌법이 법률 유보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악법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었음을 서술해야 한다.

다섯째,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독재의 양상과 유신 체제 이후의 독재 양상의 차이점-대통령 선출방식과 긴급조치권에 의한 초헌법적 대통령의 권한이란 측면에서-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평화 통일을 언급하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였던 측면을 실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자행된 구체적인 억압 사례-예; 언론통제와 각종 규제와 검열 등-와 함께 서술해야 한다.

<내용 분석> 유신 체제에 대한 부분은 모든 근·현대사 교과서가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당시의 국내외 정세나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는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미소 냉전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미국과 일본은 공산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자 하였으며, 주한 미군도 일부 철수... 우리의 경제 발전도 주춤하였다. 위기에 처한 박정희 정부는 ...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 1971년 12월에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비상 대권을 부여하였다 ...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다. ... 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사실상 대통령이 통제하였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횡수의 제한도 없어져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함으로써 국회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 체제였다. <금성, 288쪽>

「금성」은 유신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국가 안팎의 배경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뒤, 유신 체제가 왜 독재 체제이며 반민주적인 체제인가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긴급조치」를 별도의 읽기 자료로 처리하여 이전의 통치체제와 유신 체제가 '독재'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두산」은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긴급조치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는 형식의 탐구활동을 배치하였으며 「중앙」은 긴급조치 9호의 주요 내용 몇 항목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유신 체제의 성립

3선 개헌 파동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1968년 1월 21에는 북한이 보낸 31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 기슭을 노린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후에는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 나포되었다. ... 4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고전 끝에 힘겹게 승리하였다. ...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이 선전하였다. ... 독재와 민주 공화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국민의 심판이 작용한 것이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남북 대화를 제의하여 국제적 데탕트에 적응하는 한편, 1971년 12월에는 점증하는 소요 사태와 학생 운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두산, 296-298쪽>

박정희 대통령은 ... 중앙 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하였다. ...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 이리하여 10월 유신이 선포되었고, 비상 국무 회의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맡았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민주 헌정은 5.16군사 정변에 이어 다시 유린되었다. ... 유신 헌법에 따라 구성된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그 해 12월 거의 만장일치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정부는 유신 체제를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유신 체제는 사실상 민주 헌정의 체도를 크게 벗어난 비민주적·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였다. <두산, 298-299쪽>

유신 체제/유신 체제의 성립

...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 제일주의와 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거세졌다. ... 닉슨 독트린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주한 미군 감축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을 유지해온 박정희 정부에게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면서도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 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기초를 다져갔으며, ...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을 구실로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1972. 10. 17.). <중앙, 305쪽>

「두산」, 「중앙」은 유신 체제가 등장할 당시의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관계를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어 그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남북 이산 가족 찾거나 적십자 회담과 같은 통일 운동이 정권적 필

요와 연결된 부분을 드러낸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된 통일 운동 부분에서도 대체로 남북 이산 가족 찾기와 적십자 회담,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하여 통일 운동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는 인정하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금성」과 「중앙」은 통일정책을 다루는 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북한 정부 당국은 남북 대화를 자신들의 체제강화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남북대화의 고정에서 남한에서는 유신 체제가 형성되었고 북한에서는 국가 주석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한 헌법 개정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공식화되었다. <금성, 309쪽>

남북한 당국은 모두 7.4남북 공동성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중앙, 326쪽>

특히 「중앙」은 ‘민청학련’ 사건을 제시하면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신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만들어졌으며, 장충 체육관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박정희가 대의원의 99.9%의 지지를 받아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1972.12).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내세운 유신 체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영구 집권을 도모하였는데, 이때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유신 체제를 합리화하였다. …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어지자 긴급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연맹 사건을 조작하여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 민주 인사 등을 탄압하였다. <중앙, 306쪽>

이외에 사회와 문화를 다루는 단원에서 유신 체제하의 언론탄압이나 문화 통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1970년대 유신정권은 언론 통제합을 추진하고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 등록제인 프레스 카드제를 실시하여(1972)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의 행정부처 출입을 막았다. 1970년대 들어와 언론통제에 대하여 동아일보 기자들을 선두로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신 정권의 압력으로 동아 일보와 동아 방송의 광고해약사태가 불거지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일부 기자들이 해직당하였다.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진자료) <중앙, 368쪽>

이 당시 유신 체제는 대중 문화에 대한 검열과 심의 제도를 통하여 현실을 미화하고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홍보하는 문예진흥정책을 취함으로써 대중 문화에 개입하였다. <중앙, 373쪽>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신정권의 독재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긴급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삶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독재와 기본권 제약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였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6차 이전과 7차 교과서의 내용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한 서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의 반대 지점에 있는 독재체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때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이 교과서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제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켰으며 그 뒤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또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국가의 안보나 사회질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1972) <6차 고등학교 국사, 206쪽>

박정희는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구실로 집권 체제를 개편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1972.10). 이로써 제4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3쪽>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한편,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4차 고등학교 국사, 175쪽>

대한민국은 1972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의 비능률적,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고 전근대적 생활 의식과 사대 사상을 제거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고등학교 국사, 300쪽>

이처럼 근·현대사 교과서의 분석과 6차 이전 국사 교과서의 유신관련 서술에서 나타난 변화는 바로 유신 체제 반대운동, 즉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의 변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 유신 반대투쟁/부마항쟁

<분석 기준> 첫째,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10·2 시위, 개헌 청원백만인 서명운동, 자유언론 실천선언,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3·1구 국민주선언, 전남대 교육 지표 사건,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 다양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반대 투쟁이 독재정권의 성립에서 붕괴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둘째, YH 사건, 그에서 비롯된 김영삼 총재 제명 파동이 부마 민주항쟁

으로 이어져 10.26 사태의 도화선이 되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유신독재 체제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투쟁하였는지, 독재정권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탄압하고 억압하였는지 서술해야 한다.

셋째, 특히 부마 민중 항쟁의 전개양상을 구체적인 사례 설명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그것이 독재체제의 붕괴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측면을 강조하여 서술해야 한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의 학생 시민들이 전개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양상과, 부산 지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단을 투입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정권의 행태, 마산으로 번져 가는 시위 양상과, 20일 마산 창원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 무력 진압에 나선 정권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과 마산 시위는 진압되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의 학생시위로 번져나갔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권력 내부의 암투와 맞물려 10.26 사태가 촉발되는 과정도 서술해야 한다.

넷째,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정권의 통치, 억압방식을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와 대비시켜 서술하여 당시의 유신 독재 정권이 민중의 지지에 바탕을 둔 정통성 있는 정권이 아니라, 무력으로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권이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내용 분석> 다음은 7차 근·현대사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신 체제 반대를 전개한 정치적 운동들이다.

-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자유 언론 실천 선언과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3.1 구국 민주 구국 선언, 전남대 교육 지표 사건,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 연합 등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유신 체제의 성립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러나 중요한 차이점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유신 헌법 개정운동’으로 서술할 것인가 아니면 ‘반발과 저항’, ‘유신 반대’, ‘유신 철폐’로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넓은 견지에서 보면 모두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분명하게 운동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고 그러한 운동 주체들의 능동성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겠는가는 좀 더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1973년에 이르러 재야 인사와 학생들은 민주 회복을 위해 유신 헌법의 개정 운동에 나섰다. …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사회 각계 각층으로 퍼져 나갔다. 이들은 여러 조직을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긴급 조치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금성, 289쪽>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이 국내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1973.8) …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헌 청원 1백만 명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1973.10). … 언론 자유 실천 운동이 시작되었고 …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명동 사건). <중앙, 306쪽>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대학생, 재야 인사,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 1974년 1월부터 정부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동하고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 탄압하였다. 이들 긴급 조치에 의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관계자들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 민주 회복 국민 회의를 결성하였다. … 언론 자유 쟁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두산, 200-300쪽>

특기할 만한 사실은 「두산」의 경우 유신 체제의 붕괴 부분에서 YH 사건 등의 노동 운동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류사 체제로 서술되어 있어서 노동 운동이나 농민 운동을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는 현 교과서 체제에서는 유일하게 두 부분을 결합시켜 서술한 곳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YH 무역의 여공들은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공 1명이 옥상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나 ... 이를 계기로 노동 운동, 학생과 재야의 반체제 민주화 운동, 야당의 정치적 도전 등이 결합함으로써 박정희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두산, 300쪽>

또한 언론과 문화에 관한 단원에서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과 그에 대한 항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 예가 있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정부의 압제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1971년 4월에 동아일보기자 30여 명은 언론 자유 수호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 이후 권력 기관의 압력으로 동아일보에는 광고가 끊기는 탄압이 한동안 계속되었으며, 언론 자유를 위해 항거한 기자들이 해직되기도 하였다. <두산, 348쪽>

한편, 부마 민중 항쟁에 대해서는 그 전개과정과 의의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과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부마 민주화 운동). 박정희 정부는 부산에 비상 계엄,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내리고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금성, 289쪽>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몰린 박정희 정부는 노동 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였다. ... 부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철폐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였으며, 마산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부마 항쟁). <중앙, 307쪽>

그 외에 「금성」이 1970년대 양심수의 증감을 그래프화한 자료를 보조단에 배치하여 당시의 정치적 압제 상황을 유추하게 하고 장준하의 예를 읽기 자료로 두어 좀 더 구체적인 민주화운동과 탄압사례를 접하도록 하

였으며 「중앙」에서는 3·1구국 선언문을 읽기 자료로 배치하였다.

분석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유신 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이전의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진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된 사례나 서술 분량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우선 각 교과서마다 다루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실들의 예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사건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는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신 체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상이 과연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정권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유보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흐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사회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신 독재 반대 투쟁에 대한 서술에서는 전반적으로 ‘운동’과 ‘저항’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는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화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196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학생세력과 종교계, 그리고 지식인 세력이 노동자, 농민 세력과 연대하여 거대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더 강조하여 힘 있게 서술했으면 한다. 이런 흐름이 제시되어야 교과서의 각종 보조 코너에 제시된 관련 자료나 사진자료 등이 의미를 지니고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8년 독재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마 민주항쟁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른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보조코너(읽기 자료)를 활용해서라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한편 6차와 5차 교과서의 유신 체제 반대 운동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신 체제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의 권위주의적 경직성은 국민들의 정치의식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신 체제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역기능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국내외로부터 격렬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시위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 국가에서도 유신 체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였으며... <6차 고등학교 국사, 206-207쪽>

5차 유신 체제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과 각종 역기능이 심화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원, 언론, 종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민주 회복과 개헌 및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대미, 대일 외교가 악화되었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3쪽>

다음은 부마민중항쟁에 대한 6차와 5차 교과서의 서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마산 등지에서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으며,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 207쪽>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한 때 저임금이 지속되었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에만 치중되어 온 면도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는 저 임금 문제의 해결과 노동 환경의 개선 문제 등으로 표출되었다. 노동자의 요구가 구체적이고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 였는데... <5차 고등학교 국사, 193-194쪽>

* 5차 이전은 언급 없음

앞서 유신 체제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의 변화를 다룬 부분에서 말하였듯이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독재에 대한 서술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4차 이전의 교과서에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거나 저항한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경제개발과 생존권 투쟁

<분석 기준> 첫째,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경제개발 계획과 그 추진을 ‘성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개발독재’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여 서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자체를 박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며, 초기의 방침을 수정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던 점, 한일 회담의 타결과 경제 개방화 조치로 일본 및 외국 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함으로써 고도 성장의 궤도에 올랐던 점을 앞 단원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여 서술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된 농촌과 노동자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한다. 박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외자 도입의 증가와 국제 수지의 만성적 적자라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70%에 이르는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가 부채 탕감 등을 실시하였지만 지속적인 농어민 대책을 수립하는데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지적해야 하고, 고도 성장의 바탕에는 저임금과 비인간적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서술해야 한다.

셋째, 박 정권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저항세력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 형성과 활동을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확보하려는 투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넷째,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그들이 요구한 ‘분배 정의’의 실현이

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독재정권 유지의 사회적, 물질적 기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독재정권은 그들의 정책에 기대어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며 형성된 사회 경제적 기득권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사회 민주화는 독재정권의 종식과 함께 그러한 사회 경제적 기득권층의 보수성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임을 제시해야 한다.

<내용 분석>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은 대체로 근대화론의 시각에 따라 수출 중심 고도 성장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노동 정책이나 농민 정책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경제 정책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교과서 개정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각 교과서의 박 정권 시기 경제성장에 대한 서술을 인용한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은 ... 1962년부터 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때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인력 수출, 상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 한편 경제 성장의 결과 늘어난 중산층과 근로자는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차 민주화를 열망하게 되었다. <중앙, 342-343쪽>

1961년에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종전의 안정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장면 내각 때 수립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 자본을 주재원으로 삼아 경제건설을 주도하였다 ... 새마을 운동의 추진에 힘썼다. <두산, 326-327쪽>

「두산」과 「중앙」은 군정과 박 정권을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 주체로 삼아 경제성장의 양상을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중앙」의 경우 갑자기 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모호한 개념, 이전의 서술에서 별다른 단서가

주어지지 않은 채 등장하는 ‘개발독재’라는 표현과 ‘민주화를 갈망’한다는 표현 등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좀 더 고려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금성」은 접근 시각이 다른 교과서와 다르다. 경제개발 계획 자체를 장면 내각이 추진하던 것이며 쿠데타가 그것을 중단시켰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박 정권 최대의 치적으로 언급되는 ‘경제개발’이 박 정권의 ‘순수한 업적’이 아니며 더 나아가 박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추진 중에 있었던 것임을 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급속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확보가 외국자본 도입을 불러왔고 그것이 대외 종속적 경제구조로 연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외자도입을 위한 각종 정책을 당시 정치상황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금성」의 해당 부분 서술이다.

민주당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군사 정부는 제2공화국이 세운 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제개발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을 올리고 금리를 높였으며 국제 경제 협정에 가입하였다.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획득을 명분으로 한 것이었다. <금성, 326쪽>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1960~70년대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농촌의 피폐와 도시빈민의 출현, 노동문제 등도 적절한 맥락에서 다루려고 시도하였다.

...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국민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나... 농촌의 피폐가 계속되고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도 심해졌다.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이 지속되고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계속 ... <두산, 328-329쪽>

오늘날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은

우리 민족에게 잘 살아보자는 목표를 가지게 하고 ... 공업화 추진과 저
곡가 정책으로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
출 위주의 성장 정책은 노동자의 희생과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다. <중앙,
348쪽>

1960년대 우리 농촌은 1950년대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나
박정희 정부의 성장 제일주의 공업화 정책과 저곡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
촌간의 소득격차는 날로 심해졌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어촌 근대화화 소득 증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 새
마을 운동은 유신 체제와 맞물려 도시 지역에도 파급되어 ... <중앙, 352
쪽>

대체로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부각시키고자
하는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대가'이며 박정희 정부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
다는 전제가 바탕에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과연 경제성
장의 '열매'를 누가 차지하였는가를 고려할 때 잘못된 서술이다. '어쩔 수
없는 대가'가 아니라, 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는가를 분배의 정의 측면에
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금성」의 서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단순히
표면적인 전개과정을 서술하는 대신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던 사회적 맥
락과 목적을 지적하였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가능함
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해석'이라는 역사의 본질적 측면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
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
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성, 334쪽>

또한 이전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1960~70년대의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의 서술에도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대한 정권의 억압적 대처 양상을 드러낸 것도 많은 진전을 보인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한」은 YH 사건을 노동 운동과 사회 운동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 운동 양상 역시 급속한 산업화로 초래된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을 위한 자료로 제시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밑줄 처리한 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조우하게 되는 모습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유신 체제의 몰락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는 서술은 눈 여겨 볼 만한 진전에 속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저임금 문제의 해결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 전태일이 ...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과 종교계도 노동 운동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다. ... 박정희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1971)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공포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크게 제한하였다. ... <두산, 334-335쪽>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 운동을 통제하고 저임금 정책을 취함에 따라 ... 전태일이 분신 자살하였다. ... 학생들과 지식인들도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동일 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의 노동 운동은 노동 문제를 사회 문제화시켰으며,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유신 체제의 몰락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앙, 354쪽>

「금성」은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고 있으며 학생과 종교계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서술되었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사회 민주화 운동과 결합되었음을 지적한 부분은 다른 교과서와 구분되는 서술로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 1970년대 들어 노동 운동이 점차 활성화되었다.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늘어났으며, 노동 조합의 설립이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대학의 학생 운동권이나 종교계의 지원도 노동자가 자기 권리 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 이들 노동 조합의 노동 운동은 사회 민주화 운동과 결합되었다. <금성, 336쪽>

「금성」은 단원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시대를 다루거나 서로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일관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광주 대단지 사건 등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에 관한 참고자료를 실어 균형을 맞춘 점도 평가할 만 하다.

그리고 「중앙」은 가톨릭 농민회의 결성이나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농협 민주화 투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970년대 초반부터 권익 신장을 위한 농민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1972년에 가톨릭 농민회가 만들어지면서 농민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을 전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 추곡 수매 투쟁, 농협 민주화 투쟁, 지나친 수세 거부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중앙, 352쪽>

결론적으로,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1960~70년대 경제성장에 대한 서술은 점차 ‘성장’과 더불어 ‘분배’의 문제에도 초점을 두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보이나, 경제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독재와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내용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독재를 뒷받침한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형성이나 독재의 물질적 기반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의 경우도 이전에 비하여 그 서술 분량이나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시각면에서는 그들의 요구가 왜 정당하고 절실한 것이었는가, 그들의 요구가 왜 사회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

된다.

한편, 6차의 경우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고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그것이 초래한 문제점도 피상적인 수준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미를 축소하여 서술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 때 저임금이 지속되었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에 만 치중되어 온 면도 있었다. ... 노동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이고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그것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 기업가들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근로자에 대해 저임금을 강요하였으며 ... 노동자들의 집단적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를 이루려는 의도에서 처음에는 이를 통제하였다 ... 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였으며 ... <6차 고등학교 국사, 218-219쪽>

이러한 서술은 우선 '요구'라는 표현으로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움직임의 실상을 은폐하며 '사회문제'로 호도하여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또한 '한 때', '...면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당시의 열악한 조건을 축소 왜곡하고, 저임금이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같은 문제의 책임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활동에 있었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잘못된 노동정책을 유지한 정부의 책임을 덮어버린다.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경제성장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기업가의 이윤추구 활동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논리로 합리화하였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어렵게 얻어낸 노동관계법 개정이 마치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였다.

5차 교과서의 서술은 접근 방식과 내용면에서 6차 교과서 서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6차 교과서의 기본성격에 5차 교과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5차와 6차 교과서는 시각의 문제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는 있으나 피상적인 수준에서라도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서술하고 '노동운동'이라는 소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농민운동이나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도리어 새마을 운동을 강조하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었다거나 '근대화된 농촌'이란 제목의 사진을 게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있던 농촌 현실을 미화하고 있다.

'4월 의거', '5.16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4차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문제점이나 노동운동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3차 교과서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독립된 항목으로 다룰 만큼 경제 성장을 민족중흥의 터전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검정 체제로 간행되었던 2차 교과서의 경우는 경제성장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당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진행하던 주요 사업'으로 '선전'하고 있는 정도이다.

3) 전두환 정권 시기

전두환 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분석하기 위해 14개의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분석 항목은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출한 것이다. 14개의 항목에 '5·18 민주화 운동'이나 '6월 항쟁'과 같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과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전두환 정권의 성립 및 집권 시기의 반민주적인 내용들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12·12 쿠데타와 신군부의 대두', '전두환 정권의 성립', '전두환 정권 시기 지배 집단의 성격' 등은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의 배경 및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민중의 삶'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피기 위해 민주화 세력을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학생 운동', '민중의 저항', '재야 및 사회 전반의 민주화 움직임', '보수 정치인의 활동' 등의 분석 항목은 그러한 세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요량으로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항목에 포함시켰다. 분석 교과서는 주로 7차 근현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그 이전 교과서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4가지 분석 항목은 '12·12 쿠데타와 신군부의 대두',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의의', '전두환 시기의 강압 체제', '6월 항쟁의 전개와 의의' 등이다.

<분석 항목>

-
- | | | |
|------------------------|------------------------|--------------|
| • 12· 2 | • 5· 18 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의의 | • 전두환 정권의 성립 |
| • 5· 18 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의의 | • 전두환 정권 시기 지배 집단의 성격 | |
| • 전두환 정권 시기 강압 체제 | • 전두환 정권 시기 부정 부패의 만연 | |
| • 민중의 삶 | • 학생 운동 | • 민중의 저항 |
| • 재야 및 사회 전반의 민주화 움직임 | • 보수 정치인의 활동 | |
| • 7, 8 ! 노동자 대투쟁 | • 6월 항쟁의 전개와 의의 | |
-

▶ 12.12 쿠데타와 신군부의 대두

<분석 기준> 첫째, 12.12 쿠데타의 불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12.12 사태는 신군부가 군부 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숙군 쿠데타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불법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상관을 체포한 후 군부 내 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기에서 12.12 쿠데타는 권력 장악 과정의 첫 단계였음을 서술하면 더욱 좋겠다. 12.12 쿠데타 후 신군부 세력은 곧바로 정부를 해산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들이 또 다시 군인이 집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군부는 겉으로는 집권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이면서 집권을 위한 치밀한 음모와 공작을 준비하였다.

둘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성격을 서술해 주어야 한다. 전두환에 대해 그가 5.16 당시 쿠데타를 지지하는 육사 생도의 시위를 주도한 바 있으며, 박정희 정권 시기에 군부 내 정치성 강한 사조직을 운영하였던 인물임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친미 반공 체제를 유지하고 독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억압적인 유신 체제의 연장을 기도하였다는 것을 서술할 수 있다.

<내용 분석> 4차 국사 교과서의 경우 12.12 쿠데타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4차 교육과정이 전두환 집권기에 시행된 것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을 미화하고 있기에 정권 수립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12.12 쿠데타가 아예 빠진 것이다. 다음은 그와 관련한 서술이다.

... 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유신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와 함께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10.26사태가 일어났다(1979.10).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 사회 질서

가 바로잡혀 갔다. 그리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4차 중학교 국사, 183-184쪽>

그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각계 주요 인사를 망라한 입법 회의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닦았다. 그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제5 공화국이 출범하였다(1981). <4차 고등학교 국사, 175-176쪽>

5차 국사 교과서는 6월 항쟁 이후 편찬된 것으로 4차에 비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미화는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성립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12·12 쿠데타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한 서술이다.

그러한 가운데 10·26 사태가 일어났다(1979).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헌 작업이 추진되었고, 마침내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다. <5차 중학교 국사, 178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일부 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3쪽>

6차 교과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 편찬된 교과서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휘 체통을 무시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신군부의 12·12 쿠데타의 불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군부의 성격까지 드러내지는 못하였

다. 다음은 그와 관련한 서술이다.

이를 계기로 제엄령이 선포되고,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월 12일에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으며,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이에 자유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1980). <6차 중학교 국사, 179쪽>

10.26 사태로 정치 사회는 한때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권위주의 통치가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에 제엄령이 선포되었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6차 고등학교 국사, 207쪽>

7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12.12 사태의 불법성과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6차에 비해 12.12 사태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서술하여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제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정치적 중립을 선포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그러나 며칠 후인 12월 12일에 전두환 소장 등이 이끈 신군부 세력이 병력을 동원하여 제엄 사령관을 체포하고 군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12.12 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비상 제엄령을 계속 유지하고 헌법 개정 작업을 지연시키면서 집권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두산, 302쪽>

7차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는 신군부와 박정희의 관계를 서술하여 신군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교과서도 있다. 이러한 서술은 그 양이 약소하나 학생들이 신군부 집권으로 전개될 사회가 유신의 연장이 될 수 있음을 사고하게 해주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이들은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하였던 군인들이었다. <두산, 302쪽 보조단>

하지만 다른 교과서들은 신군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성」 교과서의 경우 강압 체제를 연장하려 했던 신군부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건파’와 ‘강경파’라는 표현에서 어떤 사태나 문제에 대해 이들이 온건이고 강경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유신 체제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다. 「중앙」 교과서의 경우에도 신군부의 군부 장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군부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신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유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는 박정희 시기와 전두환 시기를 분절하여 학생들의 역사 이해의 연속성을 차단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이에 앞서 신군부 세력은 이미 1979년 12월 병력을 동원하여 군대 내의 온건파를 제거하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금성, 290쪽>

신군부 : 1979년 12월 12일 무력으로 군부 온건파를 제거하고 군사권을 장악한 군부의 강경파 세력 <금성, 290쪽 보조단>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에 국군 보안 사령관 전두환 소장, 9사단장 노태우 소장 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 사령관 정승화 대장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였다(12.12 사태). <중앙, 309쪽>

이상으로 12.12 쿠데타와 신군부의 성격과 관련한 서술을 살펴보았다. 전두환 집권기에 편찬된 4차 교과서는 12.12 쿠데타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5차 교육과정 때에도 12.12 쿠데타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미흡하였다. 6차 때 들어와서야 12.12 사태의 불법성을 명시하고 있다.

12.12 사태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논조는 7차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서술이 보다 풍부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군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서울의 봄'

<분석기준> 첫째, 1980년의 봄이 유신 이후 민주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열망과 기대감이 분출되었던 시기였음을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직 교수와 제적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언론제도 언론 자유를 찾기 위해 유신 시절 해직된 기자의 복직을 요구했으며 언론 검열 철폐와 자유 언론 실천을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등과 같은 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서술해야 학생들이 1980년 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80년 5월 서울역 집회로 정점에 달하였던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를 서술할 경우 그 배경을 잘 설명해야 한다. 신군부는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다면서 이를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1980년 5월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는 시간이 지나도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민주화 일정은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셋째, 신군부가 '서울의 봄'을 짓밟았음을 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5월 17일 비상 계엄 전국 확대로 18일 새벽부터 정치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정치인이 체포되었으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던 사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내용 분석> '서울의 봄'과 관련하여 「금성」은 유신체제 붕괴 후 터져 나왔던 민주화의 요구를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신군부의 동향에 대한 정치권의 소홀한 대응을 기술한 것은 이 시기 특성을 잘 포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정서적으로 느껴지

지 않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1980년 5월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를 기술하면서 관련 사진도 게재하고 있는데, 가두 시위의 배경이 민주화의 지연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서술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 억눌렸던 민주화의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980년 봄이 되면서 민주화의 열기는 더욱 거세졌다. 학생과 시민들은 유신 헌법의 폐지, 전두환 퇴진, 10·26 사태로 내려진 비상 계엄의 철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민간 정부의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 꽃피고 있었다. 5월 14일과 15일 전국 각지에서는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서울역과 시청 앞에서 모여 시위를 벌였다.

사회 저명 인사 100여 명도 학생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시국 선언을 하였다.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 놀란 정당 등도 계엄령 해제 건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은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관심을 집중하여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신군부 세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금성, 290쪽>

「두산」은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1980년대 전반기 민주화 요구와 기대에 대한 서술이 없다. 반면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민주화의 지연과 관련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신군부 세력의 대두와 민주화의 지연에 반발하여 1980년 5월 중순부터 서울에서는 민주화 대행진을 표방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때 학생들은 비상 계엄령 해제, 유신 잔당 타도,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두산, 302쪽>

「중앙」은 10·26 사태 후 국민들이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의 핵심 내용으로 1980년 5월의 대학생 시위를 제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10·26 사태 이후 국민들은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 사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

신군부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기회를 틈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1980년 5월에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5월 15일에는 10여만 명이 서울역 앞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중앙, 309쪽>

다음으로 신군부가 '서울의 봄'을 짓밟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이를 빠뜨리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각 교과서들의 서술 특징을 살펴보면, 「금성」은 요점을 간략히 적고 있으며, 「두산」의 서술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중앙」은 3김씨에 치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생 운동의 지휘부와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 구속하였다. '서울의 봄'은 순식간에 계엄군을 앞세운 신군부의 총칼 앞에 자취를 감추었다. <금성, 291쪽>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폐쇄, 파업 금지, 언론 검열 강화 등을 포고하였다.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은 가택 연금을 당했으며, 주요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졌다. <두산, 302쪽>

그러자 신군부는 5월 17일에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김대중은 내란 음모죄, 김종필은 권력형 부정 축재 자라는 명목으로 체포되고, 김영삼은 자택에 연금하였다. <중앙, 309쪽>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 교과서마다 편차가 있으나 유신 체제로부터의 해방과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제대로 서술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유신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새로운 사회가 열리리라는 기대감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

히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주로 정치면에서, 그것도 5월 들어 나타나는 서울역에서의 학생 시위를 중심으로 '서울의 봄'을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울의 봄'을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군부가 '서울의 봄'을 짓밟은 사실은 빠뜨리지 않고 잘 기술하고 있다.

▶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의의

<분석기준> 첫째,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신군부의 폭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7 계엄 확대 → 광주 대학생의 시위 → 공수 부대의 과잉 진압 → 시민의 합세 → 계엄군의 총격 → 시민군 등장 → 공수 부대 퇴각 및 광주 고립 → 협상 → 도청 함락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계엄군이 단검으로 사람을 해치며, 총격으로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까지 쏘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의 처절한 투쟁과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까지 무기를 버리지 않고 싸웠던 시민들의 투쟁은 전두환 정권의 부당한 집권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치안 부재의 상태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부상자를 위해 헌혈을 하는 등 광주 시민의 숭고한 태도 또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언급하여야 한다. 광주에서의 실상이 사실 그대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다면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시 언론은 신군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신군부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왜 광주의 항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고립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민주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것이다.

셋째,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가 서술되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5·6공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민주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임을 보여주었다.

<내용 분석>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4차 교과서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5공 수립을 정당화하는 기조에 서 있으니 자신의 부당성을 폭로할 5·18 민주화 운동을 5공 시대 교과서가 다루지 않은 것은 예상되는 바이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 갔다. <4차 중학교 국사, 184쪽>

그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4차 고등학교 국사, 175-176쪽>

5차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있었음을 숨기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일부 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3쪽>

6차 교과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압군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기술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약간이나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광주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민주 헌정 체제 회복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라

고 표현하여 무고하지 않은 시민들의 살상은 필요했다는 식의 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1980). 이 때 민주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 207쪽>

7차 근·현대사 교과서는 보다 확대된 서술 분량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 발단,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금성」의 경우 전개 과정을 잘 기술하고 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부분은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금성」은 미국에 대해 광주 시민이 품었던 막연한 기대와 동시에 신군부의 쿠데타를 인정한 미국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한국의 민주화와 미국과의 관계를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비상계엄확대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계엄군이 시위를 무차별 진압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위는 확대되었다. ...

광주 시내를 장악한 시민군은 계엄군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시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이 신군부에 압력을 넣어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하였다. 광주에 이어 목포, 나주, 화순 등 주변 지역에서도 비상 계엄의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병력이 증강된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완전히 봉쇄하였으며, 한국군의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군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위한 병력 이동에 동의한 상태였다. 결국, 계엄군이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은 처음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금성, 291쪽>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서술 분량이 늘어나고 내용도 상세해졌으나 약간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두산」은 전개 과정의 핵심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고비가 되었던 계엄군의 총기 발포가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광주에서 시민군이 조직된 것은 계엄군의 발포 이후였다. 그런데 「두산」의 서술은 계엄군의 총기 사용 이전에 시민군이 형성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은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군을 투입하여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여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계엄군에 맞섰다. 이에 광주 시내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졌으며, 신군부에 맞서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항거는 전라남도의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두산, 303쪽>

또한 「두산」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서술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두산」은 계엄군이 도청을 함락시킨 후 상황을 ‘무력 진압으로 평온을 되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이 사회를 혼란하게 했으며 그와 같은 혼란을 해소하고 평온을 되찾기 위해 진압이 어쩔 수 없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결국 광주에서는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두산, 303쪽>

한편 「중앙」은 계엄군의 총기 발포를 분명히 언급하여 계엄군의 총격과 시민군의 조직을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 이어 시민과 계엄군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엄군이 발포를 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시위대는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중앙, 309쪽>

총기 발포와 관련하여 「금성」의 서술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시위 군중들이 무장한 시점은 도청에서 시위대에 밀린 계엄군이 총격을 가한 이후였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은 시위대가 무장한 이후에 계엄군이 총을 쏜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다음은 관련 부분이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위는 확대되었다. 시위 군중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던 소총으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여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을 몰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시위대에 총을 쏘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금성, 291쪽>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에 대한 서술도 운동의 전개와 관련한 서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풍부해진 것처럼 발전하였다. 「금성」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문 중간에 5·18 민주화 운동과 미국과의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관련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전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면서도 시민이 하나가 되어 군부 독재에 저항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높은 민중 의식의 성장을 보여 주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족 민주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금성, 291쪽>

또한 미국이 신군부에 압력을 넣어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하였다. … 그러나 병력이 증강된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완전히 봉쇄하였으며, 한국군의 군사 작전원을 가지고 있던 미군은 이미 계엄군 광주 진압을 위한 병력 이동에 동의한 상태였다. <금성, 291쪽>

「중앙」도 5·18 민주화 운동이 5공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여 집권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진압 과정에서 폭력성을 노출시켜 도덕성을 잃었다. 이로 인하여 전두환 정부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이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중앙, 310쪽>

이에 비해 「두산」은 광주에서의 유혈 사태를 ‘비극적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서술이 신군부의 폭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결국 광주에서는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나라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으며, 그 비극의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다. <두산, 303쪽>

한편 근·현대사 교과서는 본문 서술 이외에도 다양한 부속물을 제공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및 의의에 대한 부속물 역시 학생의 역사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금성」의 경우 ‘역사의 현장’이라는 부속물에서 ‘광주, 1980년 5월의 모습’이라는 제목 아래 차량 시위 사진과 시위의 생생한 모습을 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이란 제목의 탐구 활동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한 쪽 분량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¹⁷⁾ 「두산」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탐구 과제에서 5·18 광주 민주 혁명 희생자 묘역 안내문을 실고 있다.¹⁸⁾ 「중앙」은 읽기 자료라는 부속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제목 아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인물에 대한 애뜻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부속물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탐구 활동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과 의의 등에 대해 스

17) 금성, 292 쪽

18) 두산, 303 쪽

19) 중앙, 310 쪽

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여 이해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은 비교적 상세하고 관련 자료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총기 발포와 시민군의 형성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전개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짚어 보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교과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어떤 교과서는 신군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현대사 교과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미국의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었다. 4종 중에서 1종만이 5·18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 관련을 서술하고 있었다.

▶ 전두환 정권의 성립

<분석 기준> 광주에서의 학살 이후 전개되었던 집권 과정의 반민주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보위로 약칭되는 국가 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의 반민주적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보위는 광주 유혈 진압 이후 설치된 기구이다. 국보위는 정치인 규제,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삼청 교육대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둘째, 국가 보위 입법 회의의 반민주성을 언급해야 한다. 국가 보위 입법 회의는 구성원 전원을 전두환이 임명한 초법적인 과도 입법 기구이다. 제5 공화국 체제 확립에 필요한 법적 장치는 여기서 마련되었다. 이 기구는 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 집시법 개정안, 국가 보안법 개정안, 언론 기본 법안, 3자 개입을 금지시킨 노동법 개정안 등 5공의 악법을 제정하였다.

교과서에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와 국가 보위 입법 회의의 명칭

이 언급되는 것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저항 세력을 억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 제5 공화국의 대표적인 악법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초법적인 기구를 통해 제정된 사실 등은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내용 분석>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은 전두환 정권 성립의 불법성을 보여줄 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금성」의 예이다.

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을 막고, 많은 공무원과 언론인을 강제로 해직시켰다. 또한 부랑배를 순화시킨다는 구실로 수만 명의 시민들을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서, 강제로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시켰다. <금성, 293쪽>

다른 교과서들도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에 대한 탄압을 기술하고, 삼청 교육대 운영 등을 통한 사회 통제를 기술하면서 5공 성립의 불법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와 관련한 서술을 주로 하면서 국가 보위 입법 회의에 대한 언급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국가 보위 입법 회의라는 기구의 명칭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신 때의 선출방식을 비롯하여 제5 공화국의 억압 체제를 뒷받침한 악법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만들어졌음을 언급해준다면, 학생들이 전두환 정권 성립의 정통성 부재를 이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전두환 정권 시기 지배 집단의 성격

<분석기준> 제5 공화국 지배 집단의 성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배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은 지배 집단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군부를 주축으로 한 유신 체제의 관료 집단은 우익 정치인, 친미 보수적 지식인, 독점 재벌들과 더불어 5공의 지배 집단을 형성했다. 지배

집단의 이러한 구성은 제5 공화국이 박정희 정권의 연장임을 말해준다. 5공의 지배 집단 중에서 독점 재벌들은 자본 축적을 위해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탄압할 수 있는 억압적인 정권의 연장을 원하였다. 전두환 정권이 억압 체제를 연장한 배경에는 이들 독점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이 부분이 언급되어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지닌 폭압성의 경제적 배경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

<내용 분석>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펴보았을 때 전두환 정권의 성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정권과 유사한 기반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점 재벌의 이익을 위해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며, 분단 체제에 의존하는 정권의 연장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는 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학생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 하였던 독재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축소하여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민주화의 과제가 완성된다는 식으로 민주화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5 공화국의 폭압을 전두환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할 위험성도 있다.

▶ 전두환 시기 강압 체제

<분석 기준> 전두환 시기 강압 통치가 어떠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 보안법, 사회 보호법, 노동 관련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반민주 악법의 내용과 적용 사례를 소개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안전 기획부, 보안 사령부 등과 같은 강압적인 국가 기구의 활동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민주적 시위나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짓밟는 데 동원되었던 전투 경찰, 백골단 등과 같은 정권의 물리적 탄압을 보여줄 수 있다.

넷째, 민주적인 저항을 용공이나 이적 행위로 왜곡하고 탄압하는데 이용되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

다섯째, 여론을 호도하며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전개된 언론 통제를 언급할 수 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이 강압책만으로 국민을 통제한 것은 아니었다.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유화책도 사용하였다. 해외 여행 자유화, 통행 금지 해지, 교복 자율화 등을 언급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지닌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어야 한다.

<내용 분석> 4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전두환 정권의 강압 통치를 보여주지 않으며 오히려 정권을 예찬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제5 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하게 부각시킬 제반 외교적 정책을 강력히 펴 나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우리 민족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세계사에 펼 기반을 다지고 있다. <4차 고등학교 국사, 176쪽>

5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논조는 제5 공화국이 '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제5 공화국은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경제 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5차 고등학교 국사, 184쪽>

6차에서도 5차의 논조가 지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의 구현, 복지 사회의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

로 내세웠으며, 경제 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인권 문제, 각종 부정과 비리로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6차 고등학교 국사, 208쪽>

7차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잘 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전두환 정권의 강압 통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강압 통치의 구체적 사례가 다양하게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금성」은 반민주 악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으나 반민주적인 악법이 전두환 강압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압적인 국가 기구, 반공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언론 통제에 대한 서술도 없다.²⁰⁾ 한편 「금성」은 유화책의 등장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미친 사회적 영향 등을 잘 서술하고 있다.²¹⁾

「두산」은 강압 정치의 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권위주의적 강권 통치를 자행하면서도’로 처리하고 있다. 유화책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서술도 없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전두환 정부는 유신 체제와 비슷한 권위주의적 강권 통치를 자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병용하여 정치 규제자들을 단계적으로 해금하고 해외 여행 자유화, 통행 금지 해제, 중·고생 교복 자율화 등을 단행하였다. 또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여 물가 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두산, 304쪽>

언론 탄압과 관련하여 「두산」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과 친정부 언론 활동을 통한 반대 급부로 언론이 상업적 성장을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서술을 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1980년대 초에 정부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폐합하고 비판적 성향의 기자들을 대대적으로 해직시켜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 언론 기본법을 통해 비판적 언론의 등장을 봉쇄하고 기존의 언론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후 일부 언론 기관들은 막대한 광고 수입을 독점함으로써 더욱

20) 「금성」 293쪽

21) 「금성」 293쪽

거대한 언론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언론과 권력 기관의 유착 관계가 심해지고 상업주의의 성향이 더욱 확산되었다. <두산, 348쪽>

「중앙」은 강압 정치의 수단이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지 못하다. '재야에 강경 정책을 취했다. 언론을 강제 통합했다'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유화 정책의 사례는 보다 많은 분량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두환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해진 것이라는 시행 시점의 특징과 정통성 부재를 만회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유체자의 단계적 해금, 시위로 쫓겨난 일부 학생과 해직된 교수의 복교와 복직, 학도 호국단의 폐지, 학생의 날과 학생 자치 기구의 부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체, 중·고등 학생의 교복 자율화 조치 등의 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중앙, 311쪽>

「대한」은 강압 체제의 배경이 정권 수립의 불법성과 친인척의 여러 가지 비리 때문으로 서술하고 있다. 강압 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이 없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부 수립 과정의 불법성과 친인척의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시달렸다. 전두환 정부는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대한, 277쪽 도움글>

이상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전두환 정권이 동원한 강압 체제의 수단이 다각도로 언급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민주 악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치는 듯한 양상이다. 안기부, 보안사와 같은 강압적인 국가 기구의 이용이나 평화의 댐 건설처럼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웠다. 언론 탄압에 대한 내용이 약간은 보이지만 미흡하다는 느낌이며 자발적인 친정권 언론 행위에 대한 서술은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서술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전두환 정권 시기의 실상을

전달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 전두환 정권은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자 등을 불법으로 연행해 고문하였으며 심지어 성고문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군대로 보내고 프락치 노릇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사가 발생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사회 혼란을 선동하여 북한의 침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왜곡하면서 끊임없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여 남북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가 기구를 정권 유지에 이용했으며 인권을 짓밟고 남북 관계를 악용한 사례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교사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편 전두환 집권 시기 유화책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교과서 보다 그렇지 못한 교과서가 더 많았다. 전두환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일관된 시각이 유지되어야 학생들의 인식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유화책에 대한 서술이 있다면 그것이 지닌 본질 또한 언급해 주어야 한다.

▶ 전두환 정권 시기 부정 부패의 만연

<분석 기준> 첫째, 전두환 정권 시기 심각했던 부정 부패의 사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두환 정권은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으나 부패한 정권이였다. 부정 부패의 만연으로 전두환 정권 시기 경제적 이익을 보았던 중산층조차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부정 부패는 권위주의 정권의 필연적 산물이며 사회구조적인 것임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자유당 정권에서 비롯된 정·경 유착의 부패 구조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 유착에 따른 관치 금융과 개발 독재와 맞물려 정착되었다. 이러한 부정 부패는 반민주적이며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줄을 이었다.

<내용 분석>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부정 부패의 구체적 사례나 그 원인 등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정 부패가 국민의 불신이나 저항을 낳았다는 사실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그러나 각종 권력형 부정과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졌다. <금성, 293쪽>

전두환 정부는 정권 수립 과정의 불법성과 친인척의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시달렸다. <대한, 277쪽 도움글>

부정 부패의 구체적 사례나 원인 진단의 설명이 빈약한 것은 서술 분량의 제한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부정 부패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정권에 비해 도덕적인 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부정 부패가 구조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부정 부패의 그와 같은 구조적 요인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부정 부패를 개인의 의식 문제로 한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정 부패에 대한 서술이 보강되어야 한다.

▶ 민중의 삶

<분석 기준> 첫째, 자본가의 이윤 확보를 위해 강요되었던 노동자의 희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장시간 노동시간, 저임금, 열악한 작업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소외되었는지 서술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 정책과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농민의 삶을 서술해야 한다.

셋째, 개발 정책에 밀려 삶의 터전을 위협 당하는 도시 빈민의 처지를 서술해야 한다. 민중의 삶이 전두환 강압 통치로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전두환 정권의 부당성 및 민중의 저항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용 분석> 민중의 삶과 관련한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면, 「금성」 교과서의 경우 중단원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부분에서 민중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두산」은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은 정치 부분 중단원에 관련 서술이 없다.

민중의 삶과 관련한 내용은 정치 부분이 아닌 경제와 사회를 다룬 증단원에서 보인다. 대개의 교과서가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라는 증단원에서 민중의 삶과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다. 「증앙」의 경우 1980년대 저임금의 배경과 정부가 노동자보다 기업가를 옹호했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1980년대 증반기까지도 정부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상품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였으므로, 노사 관계에서 기업가의 입장을 옹호하고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크게 제한하였다. <증앙, 354쪽>

또한 「증앙」은 19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정책과 허술한 농정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기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농의 원인과 그것이 도시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1980년대 농민들은 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부딪혔다. 여기에 농가 수입 증대를 명분으로 실시된 상업적 농업의 확대, 농업 기계화 조치 등으로 늘어난 농가 부채로 농민들은 이농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실업과 주택난 등 도시 문제를 악화시켰다. <증앙, 352쪽>

위 인용에서 보았듯이 「증앙」의 서술은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저임금의 원인과 독점 자본을 옹호하는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촌의 파탄과 도시 빈민의 출현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자나 농민의 실패 및 도시 빈민의 삶을 중등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공간, 야근과 철야로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과 자본가의 횡포, 보잘 것 없는 임금과 그것을 아끼고 아껴 집안 살림에 보태는 눈물겨운 삶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삶이 담긴 수기나 시, 소설 등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두환 독재 정권의 반민중적 속성과 민중의 열악한 삶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민중의 저항과 1980년대 운동의 민중지향성 등이 하

나로 어우러져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중의 삶이 사회 문제로 취급되어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정치 부분에서 동떨어져 서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기적인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및 사회 관련 서술을 정치 관련 서술과 분리하여 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근·현대사 교과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출발점이 되었던 민중의 열악한 삶을 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분석 기준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을 비롯한 여타 민주화 세력의 저항은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절차적인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도 사회경제적 모순을 유지·강화하고 있는 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민중의 삶이 어떻게, 왜 고통을 겪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민주화가 공정·합정 정치적 절차가 성취되면 마감되는 것으로 민주화의 내용을 제한할 위험성도 있다.

▶ 학생 운동

<분석 기준> 첫째,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 운동이 갖는 중요성과 성격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운동권 학생들의 저항과 희생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 학생 운동 세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실패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적 노선의 한계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구조를 인식하면서 점차 민중적·민족적 입장에 입각한 사회 변혁을 지향해 갔다.

둘째,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민 속에 내린 결단이었다. 따라서 무엇이 그런 험난한 시련에 맞서게 했는지 서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정은 타고난 용기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희망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내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용 분석> 「금성」은 ‘사회 변혁을 지향하면서’라는 표현과 ‘민중 운동과 결합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1970년대와 다른 1980년대 학생 운동의 변화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학생 운동은 점차 사회 변혁을 지향하면서 민중 운동과 결합하였다. <금성, 294쪽>

「중앙」은 학생들의 움직임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은 학생 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노동 운동에 투신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운동의 변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미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 분신이나 투신 자살을 하기도 했던 학생들의 처절한 저항을 언급하여 전두환 강압 통치의 엄혹하였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전국 대학생의 연합 조직인 전국 학생 연합을 만들었으며,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일부 대학생들은 미국이 신군부의 5·18 민주화 운동 진압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 반미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언론이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의 강압 통치에 저항한 일부 젊은이들은 분신이나 투신 자살을 통하여 강권적 지배를 고발하였다. <중앙, 312쪽>

이상에서 보았을 때, 근·현대사 교과서가 1980년대 학생 운동의 변화된 성격과 다양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습에 눈뜨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희망 속에서 운동을 전개했던 당시 학생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서술 특징은 위의 분석 기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몇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배워야 할 가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서술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한계로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1980년대 운동권에 가담했던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이 담긴 진솔한 글을 적절히 인용한다면 당시의 상황과 운동권 학생들의 의식을 오늘을 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민중의 저항

<분석 기준> 첫째,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기층 민중이 반민중적 강권 통치에 저항하여 생존권 확보와 자주적 단결을 위해 투쟁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 시기 민중의 저항이 이전에 비해 일회성과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으면 더욱 좋겠다. 둘째, 민중의 저항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적인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서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잘 서술되어야 민주화 운동이 철저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내용적 민주화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분석> 4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중단원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부분에서 민중의 저항에 대해 언급이 없다. 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려는 투쟁이 사회경제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와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하는 듯한 교육과정의 규정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성격에서 언급했듯이 민중의 사회경제적 저항을 민주화 운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독점 자본은 독재 정권 지배 블록의 한 축을 형성했다. 따라서 독점 자본과 대결하는 민중의 저항은 민주화 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민중의 입장에서 민주화가 사회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중의 저항은 민주화 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경제와 정치의 관련성을 이해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연장선에 정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자신의 삶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민중의 저항을 민주화 운동의 일부로 다루는 서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재야 및 사회 전반의 민주화 움직임

<분석 기준> 첫째, 재야 세력의 존재가 갖는 의미와 이들의 활동이 서술될 필요가 있다. 제도 정치권 밖에 '재야'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야 세력의 움직임이 명칭까지 일일이 열거될 정도로 자세히 언급될 필요는 없겠으나 대표적인 단체와 80년대의 재야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983년에 결성된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이나 그 이후 여러 재야 단체가 연합한 1985년의 '민주 통일 민중 운동 연합' 등을 그 사례로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재야 운동은 기존의 명망가 중심의 양심적 운동(70년대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

둘째, 사회 전반의 민주화 움직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화가 앞장서서 운동하는 소수 사람들만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런 사람만을 부각시킬 경우 '투사'만이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평범한 나의 삶과 민주화 운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된 의식과 작은 실천이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역사 속에서 한 주체로서 자신을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분석> 재야 및 사회 전반에 관련한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았을 때 「금성」은 다음과 같이 재야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다른 교과서들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그 해 후반에 들어서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
선제 개헌 운동이 전개되었다. <금성, 294쪽>

다음으로 민주화된 사회를 희망하는 사회 전반의 바람이 교과서 서술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는 학생들이 사회의 변화나 발전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모두가 다 역사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발전은 혼자 열 걸음 걷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
께 반걸음 내딛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 서술은 민
주화를 바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작은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
다.

▶ 보수 정치인의 활동

<분석 기준> 첫째, 보수 정치인들이 제1 야당이 되고 개헌 정국을 형
성하는데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정치 규제에서 풀려난 보수 정치인들이 급조한 신
민당이 민한당을 누르고 제1 야당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를 바
라는 국민의 지지로 가능했다. 그 후 제도 정치권에 들어선 보수 정치인
들은 개헌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시켰다. 개헌 정국은 절차적 민주화의 성
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개헌 정
국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 정국으로의 전환과 직선제 개헌 운동은 전두환 억압 체제와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변화 욕구가 표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보수 정치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 정치인들이
개헌 정국에서 학생 운동권이나 재야 그리고 민중들과 대오를 같이 하
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향점이 민중 지향성 측면에서 여타 운동 세력
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치권의 권력 교체 이
후에도 민주화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내용 분석>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이와 관련 있는 서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985년 초 정치 활동 금지에서 풀려난 옛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한 민주당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제1 야당으로 등장하였다. 그 해 후반에 들어서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헌 운동은 이듬해 들어서 더욱 활발해졌다. <금성, 294쪽>

민주화의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1985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크게 약진하였다. - 사진 : 총선거에 약진한 야당(1985.2) <두산, 304쪽>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제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저항은 점차 거세어졌다. 1986년에는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 세력들이 1천만 명 개헌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개헌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 <두산, 305쪽>

1986년에 들어와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 <중앙, 312쪽>

관련 서술을 살펴보았을 때, 2·12 총선을 기술한 교과서도 있으며 어떤 교과서는 2·12 총선에 대한 언급 없이 직선제 개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 2·12 총선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개헌 정국이 가능했던 이유를 서술하는 것이다. 야당이 제기했던 직선제 개헌 요구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회유 속에서도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 의식의 성숙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이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타의 세력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서술도 부족하다.

▶ 6월 항쟁의 전개와 의의

<분석 기준> 첫째, 6월 항쟁의 배경과 과정을 서술하여야 한다. 6월 항쟁의 배경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있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과정 설명에서 6월 항쟁의 특징을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비교하여 설명해주어야 한다. 6월 항쟁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7 정권교체기를 맞이하여 박종철 고문사를 계기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 급격히 고양 → 전두환의 개헌 거부, 4·3 호헌 조치 발표 → 호헌 철폐 요구와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구성 → 3·31 국민대회, 6·18, 6·26) → 3·3 선언

부마 항쟁이나 광주 민주 항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단기적인 것이던데 비하여,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라는 통일적인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전국의 2~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원 4~5백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3주 동안 가두 집회, 시위 투쟁, 농성 투쟁을 벌였다.

둘째,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여야 한다. 6월 항쟁은 강압 일변도의 군부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사회의 대세로 확정지은 역사적 의의를 지녔다.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항쟁은 6·29선언이라는 기만적인 유사민주화 조치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화의 성숙과 내용적 민주주의 발전의 과제를 안게 되었음을 제시해야 한다.

<내용 분석> 5차 교과서에서 6월 항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중학교 교과서는 '제5 공화국의 부정과 비리'를, 고등학교 교과서는 정치 운영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처럼 부정과 비리만으로 제5 공화국에 대한 저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는 부정과 비리 이외에 제5 공화국의 권위주의를 저항의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권위주의라는 표현보다 '독재를 했다'고 서술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6월 항쟁의 과정이나 이전 민주화 운동과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6월 항쟁의 의의나 한계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

지는 못하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제5 공화국은 정의 사회 구현과 복지 사회 건설을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여러 가지의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국민들이 비리를 규탄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을 전국적으로 일으키자,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새로운 민주 헌법이 공포되고, 이어서 새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 6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5차 중학교 국사, 178쪽>

제5 공화국은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경제 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제5 공화국의 정치 운영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자,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열기는 더욱 높아져 마침내 6월 민주 항쟁이 전개되었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 새로운 민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 6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88). <5차 고등학교 국사, 178쪽>

6차 교과서는 5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5 공화국에 대해 비판적인 서술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 문제를 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독재를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못한 점은 5차와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6월 항쟁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고, 이전 민주화 운동과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6월 항쟁의 의의나 한계가 쉽게 서술되어 있지는 못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과 복지 사회의 건설을 표방하였고, 경제 안정과 수출 증대에 힘썼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국민들은 군사 독재와 비리를 규탄하면서 개헌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그 결과 노태우 정부가 성립되었다(1988). <6차 중학교 국사, 179-180 쪽>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의 구현, 복지 사회의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으며, 경제 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인권 문제, 각종 부정과 비리로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치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마침내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월 민주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이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마련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결과 노태우 정부가 성립되었다(1988). <6차 고등학교 국사, 208쪽>

7차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6월 항쟁의 배경이 되었던 제5 공화국의 정치 운영을 ‘군부독재’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6월 항쟁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간략하고 의의나 한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의 구현과 복지 사회의 건설을 표방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되었다.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으나, 민주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시민들은 군부 독재와 비리를 규탄하며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6월 민주 항쟁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1987), 이에 군부 세력이 굴복하여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7차 중학교 국사, 318쪽>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6월 항쟁의 과정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참여와 희생을 잘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전의 민주화 시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통일적인 지도부가 있었으며 장기적, 전국적, 대규모적이었다는 차별화 된 사실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전두환 정부는 한때 개헌 요구를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4월,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표를 하였다(4.13 호헌 조치).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6월에 접어들어 더욱 거세고 끈질기게 계속되었다(6월 민주 항쟁). 마침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굴복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구속 인사 석방, 정치 활동 규제 철폐를 약속하였다(6.29 선언).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금성, 294쪽>

1987년 초에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켜 거국적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4.13 호헌 조치는 전두환 정부의 장기 집권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져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 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6월 민주 항쟁이라고 한다.

이때 시위에 가담한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6월 민주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정부는 6월 민주 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두산, 305-306쪽>

1987년 1월에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

려졌고,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6월 10일에는 야당과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가 전개한 시위를 계기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 277쪽 도움글>

「중앙」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전두환의 4·13 호헌 발표, 6월 9일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의 시위, 6월 18일 시위, 6월 26일 시위 등 전개 과정을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편, 전개 과정 서술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진 자료가 이전에 비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6월 항쟁 사진이 교과서에 등장한 것은 6차 고등학교 교과서이다. 이 때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대학생의 사진이 게재되었다.²²⁾ 이에 비해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보다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금성」은 이한열 영정을 든 시위대 사진을 실고 있다.²³⁾ 「두산」은 박종철과 이한열 장례식을 담은 두 컷의 사진을 실고 있다.²⁴⁾ 「대한」은 명동성당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⁵⁾ 「중앙」은 명동성당에서 시위하는 모습과 6·29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의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컷을 게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6월 항쟁의 의의에 대한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았을 때 6월 항쟁이 국민의 승리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6월 항쟁을 통해 성취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상의 민주화였다. 6월 항쟁 이후에도 반독재 민주화를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관련 서술이다.

마침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굴복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구속

22) 교육부, , 1998, 207 쪽

23) 금성, 294 쪽 보조단

24) 두산, 306 쪽

25) 대한, 277 쪽

인사 석방, 정치 활동 규제 철폐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금성, 294쪽>

결국 정부는 6월 민주 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이 제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의결하였고(1987.10), 이 개정 헌법은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되었다. <두산, 306쪽>

드디어 6월 29일에 민정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시국 수습 방안을 발표하였다(6.29 민주화 선언). <중앙, 313쪽>

이에 전두환 정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 277쪽 도움글>

이상에서 보았을 때, 근현대사 교과서가 6월 항쟁의 전개 과정과 일정한 성과를 잘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월 항쟁이 조직, 규모, 지속성 등에서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달라진 점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6월 항쟁의 의의 면에서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민중들이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것은 그리고 민중의 입장에서 학생과 재야 세력 등이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절차적 민주화의 획득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왜곡된 부의 분배를 바로잡는 내용적 민주화였다. 따라서 6월 항쟁이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기 위해 내용적 민주주의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 서술은 그렇지 못하다.

▶ 7. 8월 노동자 대투쟁

<분석 기준> 첫째,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노동 현장의 민주화, 민주적 노동 조합의 결성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 규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둘째,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를 서술해야 한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반독재 민주화라는 낮은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지배적 사회 관계와 축적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편성이라는 제급적 요구를 전면으로 부상시켰다.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절차적 민주화에서 내용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서술할 수 있다.

<내용 분석> 근·현대사 교과서는 민주화의 과제를 절차적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7·8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관심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금성」, 「두산」, 「대한」 등의 교과서에서 7·8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앙」은 7·8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다음은 「중앙」의 관련 서술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와 6·29 민주화 선언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면서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들도 노동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금 인상, 노동 조건의 개선, 노동 현장의 민주화, 민주적 노동 조합의 결성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앙, 354쪽>

IV. 연구 결과 정리 및 제언

1. 연구 결과 정리

민주화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민중이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사적 경험에서 볼 때 민주화 과정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의 억압으로 인해 투쟁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식민지 경험, 분단체제에 기반한 반공주의, 외세의 간섭 등으로 서구의 민주화가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마침내 6월 항쟁을 통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다. 과정이 험난했기에 우리 민주화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비롯하여 지역과 사회 각 계층에서 혼란스럽게 분출된 다양한 권리 요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가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웅변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의 저변에까지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모든 행위의 영역에서 기본 원리와 가치로 내면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화의 주된 과제로 남은 것이다.

이제까지 교과서들이 이러한 민주화 과정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지,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라 서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교과서 서술 내용을 인용하면서 총론적 분석을 가하였다. 아래에서 각 시기별로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해본다.

1) 이승만 정권 시기

이승만은 국민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10여 년 이상 집권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형을 상당 부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친일 경력자들을 주요 기반으로 폭력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반공·친미주의를 표방하면서 분단 체제에 안주하였다. 또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다던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기하고, 국민들에게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변칙적·불법적 정권 연장에만 급급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성·반민증성에 대한 저항 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4·19 혁명은 마침내 그를 물러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모순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일부 진보적 학생들과 혁신 세력들은 분단 체제를 지양하는 통일 운동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성립에서 붕괴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편리하게 서술하였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서술의 일부분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경우가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 운동도 정당하게 서술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해방 정국에서 반탁 운동이 친일 세력의 정치 활동 재개의 기회로 이용된 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은 미국의 일방적인 의지였다는 점, 이승만 정권 시기 지배 집단의 성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은 점, 북한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한 점, 한국 전쟁 부분에서 전쟁 책임론에 집착하고 있는 점,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 폭력과 민간인 학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점, 미국에 관한 서술이 지극히 빈약한 점, 이승만 정권 시기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 민주당 정권 시기 통일 운동과 사회 민주화 운동을 사회 혼란으로만 간주한 점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냉전적 사고 방식을 탈피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밑바탕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확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정통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전체 교과서 서술을 기형적으로 몰아갈 우려가 크고, 좁게는 민주화 운동마저도 올바르게 자리 매기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폄하하거나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강조하고 있는 정통성이라는 것이 분단 체제 아래에서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하고, 현대사 교육의 목표를 명실상부하게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의 역사 인식에 두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의 전환이 담보되지 않는 한 종래의 교과서 서술을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 시기는 해방 정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이승만의 독재화로부터 4·19 혁명에 이르는 과정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부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6차 교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승만 정부의 부정 부패와 독재 → 학생·시민들의 의거 → 민주당 정권의 무능 → 5·16 군사 쿠데타의 불가피성’이라는 논리 구조 속에서 4·19 혁명을 반독재 민주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필 방향은 검정 체제인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대체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구조는 자칫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의 성립으로 혁명 과업은 완수된 것이며, 민주당 정권 시기에 일어난 민족 민주 운동은 다만 철없는 학생들의 소행 정도로 간주될 우려가 많다. 나아가 민주당 정권 시기에 일어난 민족 민주 운동은 민주당 정권을 정치적 증지에 몰아넣었으며, 민주당 정권은 또 다른 권력다툼에 빠져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정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정책적 실패, 민족 민주 운동의 정당성 등은 짚 자리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그 외형으로서 부정 선거)와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4·19 혁명’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이승만 정권의 전근대적·비민주적·반민주적 통치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해방 직후부터 표출되고 이승만 정부가 도외시한 대중의 정치·사회·경제적 요구의 실현이라는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4·19 혁명을 위치시키는 서술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2) 박정희 정권 시기

박정희 정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쿠데타', '군사정권', '개발독재'에 대한 서술 방식과 정확히 맞물려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이 달라져 온 것이다. 7차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이전 교과서에 비하여 1960~70년대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측면에서 장족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금성」은 지금의 단계에서 볼 때 '박정희 정권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하는 문제 의식을 일관되게 드러내고자 노력한 흔적이 강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서술이 지나치게 사실을 만류 압축적이고 본문에서 구체적 사건이나 사례를 거의 다루지 않아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렵게 읽힐 가능성이 많다. 6차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이전의 교과서들과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의 과도기적 형태를 보인다. 사회 민주화에 발맞추어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로 분석할 만한 요소가 등장하지만, 그 바탕에 존재하는 기본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 5차 이전의 교과서 내용은 대체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권 홍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민주화 운동에 관한 서술은 5차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5·16 군사 쿠데타와 군정에 대한 서술은 군정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시책들을 '군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된 것임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부족한 점이 발견되며, 쿠데타 및 군정에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3 공화국 체제에 대해서는 정권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서술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안기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이나 언론 파동 등도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그 결과로 재선에 성공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단원을 달리하여 서술된 내용들에 일관된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참전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

원을 분명히 지적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 파병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청과 국제 사회에 대한 보은이라는 명분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공산 세력의 격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파병의 대가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희생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한일회담을 미국의 전략적 차원과 관련짓거나 그 진행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관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베트남 파병의 경우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의 서술이 아쉽다.

3선 개헌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고, 3선 개헌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음을 지적은 하였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앞으로 3선 개헌 반대투쟁과 같은 중요한 민주화 운동을 서술할 때 구체적 사례와 주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유신 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은 공통적이거나, 전반적으로 유신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와 내용이 부족하다.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독재와 기본권 제약이 실제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였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에는 분명히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인용된 사례나 서술 분량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다. 그러나 각 교과서마다 다루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실들의 예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사건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좀 더 부연하면 학생들이 '박 정권 시기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독재 정권에 대한 도덕적 차원의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치·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유보된 사회경제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흐름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용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민주화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196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학생세력과 종교계, 그리고 지식인 세력이 노동자,

농민 세력과 연대하여 거대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더 강조하여 힘있게 서술했으면 한다.

경제개발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대체로 근대화론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부각시키고자 시도하였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의 서술에도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대한 정권의 억압적 대처 양상을 드러낸 것도 많은 진전을 보인 부분이다. '성장'과 더불어 '분배'의 문제에도 초점을 두고자 노력한 흔적들은 긍정적이지만 경제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독재와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3) 전두환 정권 시기

전두환 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을 이전 교과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의 서술은 전두환 정권의 성립의 불법성과 통치의 강압성 등 정권의 반민주성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12·12 사태의 불법성, '서울의 봄'을 유린한 5·18 쿠데타, 광주에서의 학살, 억압과 초법적인 기구를 이용한 제5 공화국의 창출, 강압과 부패로 얼룩진 7년간의 통치 등 전두환 정권의 성립과 집권 시기의 반민주성을 잘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 5·18 광주에서의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토대로서의 항쟁의 의의, 전두환 집권 시기 지속되었던 저항, 6월 항쟁과 독재 정권의 붕괴 등을 잘 기술하고 있다. 특히 본문 이외에도 시각 자료와 다양한 부속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신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외세 의존적인 성격을 서술하지 못한 점, '서울의 봄'을 1980년 5월의 대학생 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동계의 움직임을 빠뜨린 점, 5·18 과정에서 총기 발포 부분이 애매하게 처리된 점,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나 의의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미국과의 관련을 명시하

지 않은 점, 5공화국의 성립에서 국가 보위 입법 회의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에 비해 미흡한 점, 전두환 정권 시기 지배 집단의 반민주·반민중성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강압 통치의 다양한 수단으로 5공 악법, 안기부 등 국가기구의 동원, 반공이데올로기의 이용 등이 서술되지 못한 점, 중산층의 이반을 낳은 부정 부패의 사례 제시나 원인 설명이 빈약한 점, 민중의 열악한 삶과 민중의 저항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점,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 등 내면 세계에 대한 서술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민주화를 희망하는 사회 전반의 바람과 실천이 부각되지 못한 점, 개헌 정국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국민의 힘을 명시하지 못한 점, 6월 항쟁과 이전 민주화 시위와의 차이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6월 항쟁 이후의 과제로서 절차적 민주화의 성숙과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별 항목 분석 차원을 넘어서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을 보다 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두환 집권 시기 독재체제의 사회구조적 배경 및 기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교과서 서술은 1980년대 독재가 전두환을 비롯한 몇몇 무리의 지나친 권력욕 때문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독재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 시기 지배 집단은 독점 재벌의 이익을 앞세우는 반민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군부독재가 존속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힘으로만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이 시기 시위하는 학생에게 자본과 안보의 논리를 앞세우며 비난했던 사람도 있었으며, 억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두환 정권의 강압 통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이 전두환 정권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던지 아니면 언론통제 등을 이용한 통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었던지 간에 전두환의 권력 유지의 기반이 되어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교과서에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두환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서술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재자가

물러나도 우리 사회가 바로 민주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다.

둘째, 민주화 운동의 상당 부분이 민중의 열악한 삶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커다란 특징은 ‘민중 지향성’이었다.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내 주변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되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목적을 향해 전개되었다.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선배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는 무미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의 통로가 막힘으로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민주화의 내용을 절차적 민주화에 한정시키고 있다.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득하는데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민중의 생존권 위협을 인식하면서 민중 지향성이 강화되었으며, 가혹한 탄압 속에 운동권 일부는 사회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며 반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은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개되었던 저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6월 항쟁 이후 제기된 사회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내용적 민주화의 과제를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 사회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자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그 이전 교과서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술 분량이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관점과 구체적 내용 확보에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제껏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화의 이해 수준조차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하여 뒤늦긴 하지만 진보적 역사 인식이 교과서에 반영된 점은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할 만 하다. 딱딱한 텍스트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읽기 자료, 탐구 활동,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도 기존 교과서와 크게 다른 점이다. 특히 탐구 활동의 경우 고정된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가 큰 만큼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 과제를 교과서 서술 내용의 측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의 형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교과서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먼저 민주화 운동의 각 시기별 흐름과 성격이 다른 시대와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민주화의 성취 정도는 각 시기마다 민주주의나 인권, 그리고 대외 관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을 투영하는 것이며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통치 방식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도 동일하지 않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 세력의 주체와 민주화의 요구도 발전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민주화 과정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독재와 저항이라는 평면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 학생들에게 본래 의도와 달리 냉소적인 역사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 속의 민주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내재화시키는 역사 교육의 의미를 달성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교과서가 민주화 운동이 반복되는 권위주의적 통치 속에서도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해야 하겠다. 표면적으로 볼 때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좌절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승만 민간 독재에서 군부 독재가 등장했으며, 전두환의 쿠데타가 박정희 쿠데타 보다 더 치밀하였고, 전두환 억압구조가 더 교묘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민주화 운동 서술이 이 측면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분의 민주화 운동 서술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이는 교과서가 분류사적 시대사로 구성된 데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독재’라는 용어가 표상하는 것처럼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개발은 독재 정권 유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가 정치사와 경제사를 분리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는 각 시기의 시대상과 민주화 운동의 발전 맥락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형상화하기 어렵다. 같은 시기의 정치와 경제·사회를 검토해보면 서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도 자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독재체제의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독재자의 권력욕만은 아니었다. 억압적인 체제에서는 지배집단의 일부가 되거나 억압 체제의 수혜자로서 반민주적인 정권의 물적 기반이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독재 통치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지역 갈등의 부정적 유산을 남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억압체제의 구조적 측면은 민주화의 커다란 장애 요소이다. 학생들이 이 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정치사적 사건 나열의 교과서 서술을 극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제 중심의 탐구가 가능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노력은 충분치 못하다.

넷째, 대부분의 교과서가 절차적 민주화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는 기조에 서 있어 민중의 생존권 요구 투쟁과 같은 사회경제적, 실질적 민주화 운동의 서술에 몹시 인색하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가 현상적으로 절차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더

라도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독재 체제가 이완된 상황에서 생존권 요구가 분출하였던 4·19 이후 노동운동이나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 경제 개발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은 저항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치적 민주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적절히 언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 땅의 양심 세력들은 최소한의 상식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소망하면서 소박한 마음에서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전두환 시기에는 부당한 정권에 대한 분노, 정치적 절차가 무시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과 함께 민중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투사나 열사는 시대 상황이 빚어낸 아픈 존재였다. 이렇듯 민주화 운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기 희생에 기반했던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습은 기계적인 사실의 습득 과정에 그칠 우려가 크며, 남의 이야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가 인물 탐구와 같은 꼭지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이 못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맥락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이 그 자체로 큰 비중과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의 극복과 근대 국민 국가의 완성이라는 과제 속에 존재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 식민지적 반봉건적 경제 제도의 개혁, 친일 잔재의 청산과 민족 정기의 확립 등 굼직굼직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분단 체제의 성립과 오랜 독재 정치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왜곡, 지연시켰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도 궁극적으로는 근대 국민 국가의 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민주화 운동의 성

과와 의의를 현대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필자들의 고민이 아직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후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를 기대해본다.

2)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제도의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에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일은 식민 사학을 추종할 것이냐, 감옥에 갈 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당연히 한국사 연구자들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기피하였다. 이는 8·15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독재 정권의 서술이 퍼렇고, 반공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학문·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 한국 현대사 연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국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도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의 제약을 받아, 한때 4·19 혁명이 4·19 의거로, 5·16 쿠데타가 5·16 군사혁명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그 온당한 전개 과정과 의의를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 현대사 학습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현실에서 7차 교육 과정에서 근·현대사가 비록 심화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독립 과목으로 편제되고, 검정 제도로 편찬되었으며,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보다 충실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점은 무척 소망스럽다. 그간 국정 『국사』 교과서가 자의견 타의견 국가 수준의 공인된 역사로 인식되었고, 국책 과목으로서 정치 변화에 따른 이러저러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에 진실되고 다양하고 생생한 역사를 담아 학생 스스로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7차 근·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이 이전의 『국사』 교과서 서술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을 보인 것도 한편으로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정 제도로 교과서가 편찬됨으로써 교과서 서술의 국가적 제약이 일정하게 완화되어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울곧게 담으려는 집필자들의 노력이 경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직도 제약 요소는 여전하다. 겉으로는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구속력을 갖는 ‘교육 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이 교과서 서술의 관점과 내용, 심사 기준 등 검정 제도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를 쓰는 필자나 출판사는 검정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때문에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강하게 속박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근현대사 교육 과정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6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편의 '적자'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이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면 그 공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 아니라 교과서 집필자들의 울퉁한 노력의 몫이며, 서술에서 나타나는 많은 한계와 극복 과정은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그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떠넘기자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교육 과정을 통한 교과서 서술의 통제, 검정 심사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국가 수준의 제약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 서술, 민주화 운동 서술에 대한 백가쟁명을 유도하고 다양한 논의와 시도 속에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 서술의 공유된 방향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미 검정으로 편찬된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그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앞서 교과서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제언했던 지적 사항들도 이러한 변화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함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엉뚱한 화두로 이야기를 맺고자 한다. 1990년대 한국 영화의 비약적 발전은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조금만 개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90년대 한국 영화 발전의 근원적인 이유를 영화 촬영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서 찾는 얼치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구의 르네상스가 중세적 사유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도 사회 민주화와 병행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장 역사 교육에서 민주화 운동의 부흥도 한국 영화의 그것처럼 교과서 서술에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조망하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에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교 과 서

- 문교부, 1975, 중학교 『국사』
문교부, 1989, 중학교 『국사』 상·하
교육부, 1995, 중학교 『국사』, 상·하
교육부, 1999, 중학교 『국사』, 상·하
교육인적자원부, 2002, 중학교 『국사』
신석호, 1967,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광명출판사
문교부, 1975, 인문계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3, 실업계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9,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89, 고등학교 『국사』 상·하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1, 고등학교 『국사』 상·하
교육부, 1996, 고등학교 『국사』 상·하
한철호 외, 2003,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김한종 외, 2003,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김광남 외, 2003, 『한국 근현대사』, 두산
주진오 외, 2003,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연구소

▶ 단 행 본

- 강만길 엮음, 2000,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강만길, 1999, 『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 비평사
강문주, 2003, 『한국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당대
강준만, 2002,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1,2,3』,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2002,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1,2,3,4』,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 1998, 『인물과 사상 2』, 개마고원
- 권태억 외 4인, 1994, 『자료모음 근·현대 한국탐사』, 역사비평사
- 김삼웅 편, 1997, 『자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 김성환 외, 1984, 『1960년대』, 거름신서
- 김인걸 외, 1988,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 김진국·정창현, 2000, 『www.한국현대사.com』, 민연
- 류승렬, 2003, 『뿌리깊은한국사 샘이깊은이야기』, 솔
- 박세길, 1992,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 돌베개
- 박세길, 1992,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 돌베개
-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연구』, 역사비평사
- 브루스 커밍스, 한기욱 외 옮김, 2002,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 서증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역사비평사
- 서증석, 2000,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 양호환 외, 1997,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1989,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 푸른나무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4,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역사학연구소, 1995, 『강좌 한국 근현대사』, 풀빛
- 이영석, 2000, 『조봉암, 누가 그를 죽였는가?』, 세상의 창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출판부
- 이종범, 최원규, 1995, 『자료 한국근현대사 입문』, 혜인
- 이원순, 윤세철, 허승일, 1983, 『역사교육론』, 삼영사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 휴머니스트
- 전재호, 2002,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팀, 1996, 『발굴자료로 쓴 한국 현대사』, 중앙일보사
- 진증권, 1998,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1,2』, 개마고원
- 참여연대참여사회아카데미, 2001,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한울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2001, 『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 학민사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장집·임현진, 1997,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출판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1996, 『한국역사입문 3』, 플빛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 3』, 플빛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 4』, 플빛
 한홍구, 2002, 『대한민국사』 1·2, 한겨레신문사

▶ 논 문

수업지도안모임, 1996,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34』, 전국역사교사모임
 신병철, 1994, 「국정국사교과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역사교육 24』, 전국역사교사모임
 양정현, 1992, 「제6차 교육과정 개정과 역사과의 위상」, 『역사교육 14』,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사모임, 1989,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검토」, 푸른나무
 역사교사모임·한국역사연구회, 1989, 「현대사회의 발전」,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 푸른나무
 역사교사모임연구부,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검토 - <제5차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준거안>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2』
 정해구, 2001, 「한국 반공주의 부침의 역사,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한울
 임대식, 2001, 「친미-반공의 신화를 넘어,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한울
 정재정, 1995, 「국사교과서의 현대사분야 논쟁점」, 근현대사 강좌 7
 서증석, 2001,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 문제 많다」, 『역사비평』

서중석, 2001, 「현행 중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부문 분석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79

